2002. 8

나라경제

>>> **특 집**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달의 초점 포스트 월드컵 대책은 이렇게

경제정책 포럼

- 경제정책 해설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경제정보 분석

- 국내 경제동향
- 국내 경제이슈 금융부문,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바뀌었나
- 세계 경제동향
- 세계 경제이슈 중국 국유기업 개혁, 성공할까

KDI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바른 경제정보를 전하는 나라경제

발 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 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 행 인 강봉균 KDI 원장
편 집 인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윤기상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외교통상부 박석범 통상정보지원팀장
과학기술부 강상식 정책총괄과장
농 림 부 강명구 행정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 정양호 행정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 고광섭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한문덕 기획예산담당관
환 경 부 윤승준 정책총괄과장
노 동 부 정현옥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부 최연충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김성진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처 강태혁 예산제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총괄정책과장
금융감독위원회 최수현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박창교 총괄조정팀장
KDI 경제정보센터 조병구 연구위원
편집간사 김후진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 집 장 김인철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기자 이기덕 유성임 이지은
배포업무 김석화

인 쇄 (주) 유성사
표지디자인 상상가가

나라경제 · 2002년 8월 1일 발행(매월 1회 발행) 제13권 제8호(통권 제141호) · 1990년 11월 14일 등록 · 등록번호 문화 라 04859호 ·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130-650 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 113
대표전화 (02)958-4114 FAX (02)3295-0748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e-mail nara@kdi.re.kr **천리안** kcee
기사문의 (02)958-4632,4634~5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26

구 독 료 권당 2,200원, 연간 22,000원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 8
나라경제
통권 제141호

특집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6 선점과 차별화 전략 필요 / 원제무
11 재원조달과 국가 위험도 축소가 핵심과제 / 허제완
15 국제적 도시기능 확충을 / 오용석
19 '열린 사회' 구축이 필수적 과제 / 박성훈
23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 정은보
28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 / 김광재
32 '경제특구'의 개발 / 김경욱
36 동북아 IT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최제유
40 외국인 출입국 및 이민제도 개선 / 원형규
43 교육의 국제화 / 함석동

이 달의 초점 포스트 월드컵 대책은 이렇게

48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 키워야 / 이범일
51 자유시장경제 인프라 구축을 / 조명현
54 분명한 국가발전 비전 제시해야 / 유병규

경제정책 포럼 경제정책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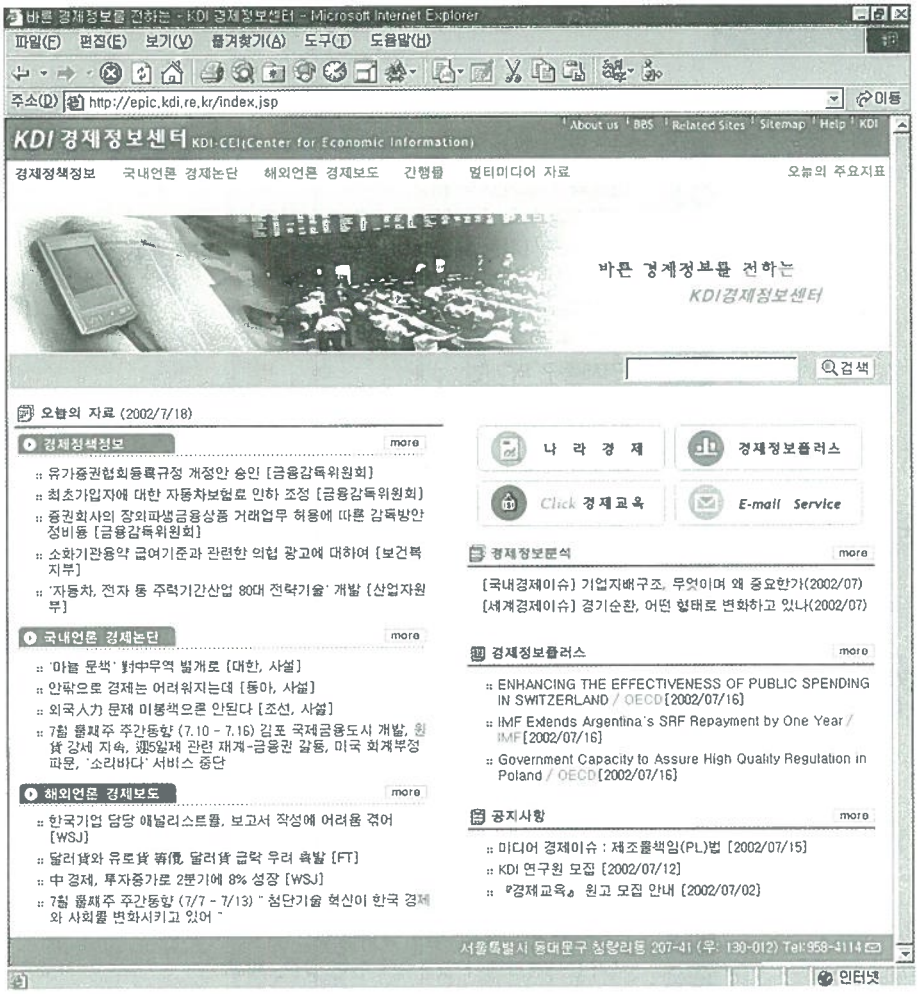
60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 김영과
64 제조물 결함 피해구제를 쉽게 - 「제조물책임법」 시행 / 강형욱
69 공적자금 - 성과와 상환대책 / 김성국
74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서기동
77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복지제도 / 심경우
-근로자복지 증진 기본계획(2002~2006)
81 주택시장 안정기조 정착에 주력 / 윤성원
85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 / 옥화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포스트 월드컵 대책
89 '업그레이드 코리아' 추진 / 정은보
93 수출 및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 박건수
97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 고광섭
101 스포츠 · 문화 · 관광 산업의 활성화 / 김철민

경제정보 분석

106 국내 경제동향
115 국내 경제이슈 금융부문,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바뀌었나
124 세계 경제동향
131 세계 경제이슈 중국 국유기업 개혁, 성공할까

경제 정보의 세계로 오십시오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경제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발표되는 모든 경제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 경제보도
국내 언론의 주요 경제논단과 세계 주요 외신의 경제관련 기사를 요약 ·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
경제이슈에 대한 설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보플러스
검색로봇이 매일 세계 주요 경제관련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류합니다.

클릭 경제교육
중 · 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을 위한 경제관련 자료실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TEL(02)958-4661 FAX(02)3295-0833

특 집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7월 발표하였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알아보는 한편, 민간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들어본다. 〈편집자〉

6 선점과 차별화 전략 필요 / 원제무
11 재원조달과 국가위험도 축소가 핵심과제 / 허재완
15 국제적 도시기능 확충을 / 오용석
19 '열린 사회' 구축이 필수적 과제 / 박성훈
23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 정은보
28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 / 김광재
32 '경제특구'의 개발 / 김경욱
36 동북아 IT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최재유
40 외국인 출입국 및 이민제도 개선 / 원형규
43 교육의 국제화 / 함석동

선점과 차별화 전략 필요



원 제 무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won21@hanyang.ac.kr)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그 세계적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세계물동량 중 동북아의 비중이 1998년 27.0%에서 최근에는 31%로 높아졌다.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무역과 물류량은 비약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은 21세기 우리의 생존전략

현재 세계의 5대 항만인 싱가포르·홍콩·부산·카오슝·상하이 항이 모두 다 아시아에 입지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컨테이너 물동량도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8.9%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차지하기 위해 아시아 주요국가마다 항만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항공물류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중심공항을 확충하려는 계획들도 추진되고 있다. 홍콩의 첵랍콕공항은 현재 375만평을 450만평으로, 일본의 간사이공항은 현재 155만평에서 393만평으로, 인천공항도 2단계(2008년)·3단계(2020년)로 현재 355만평에서 1,435만평으로 각각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아시아 주요국가들이 이처럼 동북아지역의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아시아 주요국가들은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하여, 자국을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세계경제의 맥락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 사이에 위치

<표> 아시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선설규모 (2001년 12월말 현재)

(단위 : 선석)

	홍콩	싱가포르	카오슝	고베	부산	광양
현 재	26	37	27	37	21	8
추가 확충계획	23	39	23	10	25	16

한 우리나라는 동북아 최적의 물류중심지로서 그 역할이 부상되고 있다. 다행히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지에 위치해 전세계 및 지역내의 모든 공항 · 항만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이자 국가번영을 위한 국가 정책방향인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SWOT분석을 해보면, 최대 잠재 시장인 중국이 배후에 있다는 점, 대륙철도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 등은 강점으로, 취약한 물류기반시설과 높은 물류비용, 행정 규제 및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SWOT분석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강점과 약점 즉, 경쟁우위요소와 열위요소를 분석하고, 주변환경을 살펴보면서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파악하여 SWOT(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점(strengths)

최대잠재시장인 중국이 배후에 위치해 있고 대륙철도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의 강점이 있다.

첫째, 서울에서 3시간 비행거리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43개 위치해 있고,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하여 세계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를 두기에 적합하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몽고 · 러시아 · 중앙아시아 · 유럽 및 일본까지 우리나라의 배후권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항공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인천공항이 물류처리에 있어서 동북아의 중심(hub)공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세계적인 통신 및 IT 인프라 기반이 확충되어 있어서 물류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고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생산기반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에 비해 숙련되고 일본에 비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섯째, 인천공항 · 부산항 · 광양항 등 충분한 사회간접자본(SOC) 여건을 확보하고 있고, 세계의 주요 간선항로(Main Trunk Route)상에 위치하여 물류중심지로서의 입지상 유리하다.

약점(weaknesses)

약점으로는 취약한 물류기반시설과 높은 물류비용, 행정 규제 및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수심 · 해운환경 등 항만여건이 우수하고, 세계의 주요 간선항로임에도 그동안 항만개발에 소홀하여 물류처리능력이 아직도 미흡하다.

둘째, 항만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항만에서 선박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항만 이용료도 비

싸기 때문에 항만이용선박은 다른 나라 항만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셋째, 경쟁국에 비해 아직도 외국회사가 투자하기에는 행정 규제 및 절차가 까다롭고, 지나치게 복잡한 실정이다.

넷째,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우리의 커다란 수출시장인데도 중국에 대한 경제전략이 안이하고, 개발전략 수립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경쟁국가에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강성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여섯째, 일본·중국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홍콩·싱가포르에 비해 삶의 질·국제화 수준·영어 활용 면에서도 불리하다.

기회(opportunities)

기회 측면에서는 13억 인구 중국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동북아 경제권의 가시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거대한 중국시장은 수요창출이 무궁무진하며,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경제 향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계경제가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별로 블록화되는 추세이고, 몽고 · 중국 · 북한 · 한국 · 일본 등 동북아 경제권의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통합의 1단계인 무역자유화 등의 협정이 성립될 경우 동북아지역의 교역량은 급속히 증가될 것이다.

셋째, 對중국 교역의 추세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1차상품 위주의 수입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제품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추세가 예상된다.

넷째, 주요 항만 및 공항 확충계획에 따라 물류처리능력이 제고될 것이다. 서해안 및 황해권에 육로 · 해상 ·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다섯째, 개방형 국토축에 의한 동북아 교류중심지로의 도약 가능성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에서 개방형 국토축은 동북아 교류중심지로의 도약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골격이다. 즉,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으로 육성함으로써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협(threats)

반면에 수도권집중 심화 · 개발비용 조달의 불확실성 등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물류중심지화가 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수도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과밀 억제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둘째,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산업 및 물류 분야별 분담전략도 세우지 않은 채 수도권에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포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셋째, 개발방식과 개발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전략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장밋빛 계획으로 만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홍콩 · 싱가포르 등 아시아 중심항만 확충에 따라 물류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중국만 해도 상하이에 대규모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 푸동지구의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등은 우리와 경쟁체계가 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 입지 및 건축 규제로 인해 현재 수도권은 대형인텔리전트빌딩 건설과 국제업무시설의 단지화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은 건축관련 규제가 강하고, 과밀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들이 수도권에 시설구축시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여섯째, 완구 · 봉제 등 경공업제품의 시장잠식에 따라 우리 경공업 제조업자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중국시장으로 진출하여 물류의 수요가 적어질 우려가 있다.

일곱째, 지식기반 산업의 취약성이다. 세계유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일본을 R&D 활동의 거점 · 고부가가치 산업의 생산거점 · 지역본부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수준이나 R&D 활동 그리고 지식기반산업의 취약성으로 일본과 중국이라는 호두까는 기구(Nut crackers)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 비유되고 있다.

향후 5년내에 선점체계 갖춰야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SWOT분석에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요소들이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① 취약한 물류기반시설과 높은 물류비용 ② 행정 규제 및 절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③ 높은 임금과 강성노조 ④ 외국인의 생활환경 불량 ⑤ 과다한 기업과세 ⑥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비우호성 등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해서는 우선,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에서 동북아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3, 4개의 지역을 선택하여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되 서둘러 선점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해서는 우선,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에서 동북아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내의 모든 지역과 광범위한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광양항·부산항 등을 통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의 확대는 중국과 동북아 지역의 중소항만과 공항도시들에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물류가 한반도에 집중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은 배후도시 즉, 경제자유도시를 필요로 한다. 경제자유도시가 뿌리를 내리려면 경제자유도시의 지정, 특별행정기구의 설립, 외국어교육의 강화, 교육여건의 국제화, 물류전문가와 기업의 육성, 외국인 출입국제도의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세제 인센티브의 확대, 외화규제의 완화, 회계법률제도의 국제화, 외국인 주거환경의 개선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물류중심지화 전략에는 비용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공항 · 항만 확

장, 철도 ·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중 ·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되 정부와 민간이 투자할 시설에 대해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물류단지 자체의 개발은 국내외 민자유치로서 가능할 것이다. 지정학적 · 경제적 이점이 명백한 만큼 우리가 매력적인 물류중심지화 청사진을 제시하면 투자가들이 달려들 것이라고 예견된다. 이를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에 커다란 기여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물류중심지화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의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은 종합적인 조달 · 생산 · 물류 서비스가 제공되는 첨단 공항 · 항만이 갖춰진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항 · 항만 및 배후 물류단지 등을 자유무역지대 또는 경제특구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해당 물류시설내에서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과 공항주변의 송도 · 김포 · 시화지구 등의 대규모 면적을 국제물류 및 생산기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투자기업들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각종 제도와 관행을 시장중심으로 바꾸고 행정시스템이 유연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변화가 수반될 때 물류중심지화 전략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류중심지가 구축되면 자연히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밀 억제라는 기존의 정책을 뒤엎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영종도 위주의 물류중심지화 전략이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면 수도권 인구집중이 완화될 수도 있다. 앞으로 군산 · 평택 · 광양만 등으로 연계시켜 물류중심지화 비전이 추진된다면 인구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은 국가 생존전략과 더불어 바뀔 필요가 있다. 국제기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정비의 방향도 융통성 있게 변화해야 한다. 대규모 물류센터·공업단지·기타 비즈니스 관련시설의 자유로운 입지를 가로막는「수도권 정비법」의 손질도 불가피하다.

21세기는 '선택과 집중'의 시대이자 '선점과 차별화'의 시대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려면 3, 4개 지역을 선택하여 '국제 자유도시'로 개발하되, 서둘러 선점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은 한 산업, 한 지역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이 요구하는 일련의 개혁조치는 이 나라의 경제운영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생활을 크게 향상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은 정치권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국가 생존전략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5년 내에 동북아 물류국가 건설을 위한 선점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동북아 중심국가는 영영 멀어지게 된다.

재원조달과 국가위험도 축소가 핵심과제



허 재 완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장
(hur5358@post.cau.ac.kr)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동북아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제 동북아는 유럽연합(EU) 및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서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비중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물동량 중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기준으로 28%였으나 2006년에는 3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정립 필요

동북아의 경제적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교류나 물동량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가간 자국 항구나 공항 또는 지역 일부를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려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의 컨테이너 물동량 선점을 위해 홍콩 · 싱가포르 · 일본 등 주변국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국가들이 모두 각각 10년내 현 시설의 두 배 수준 확충을 계획하는 등 동북아의 물류중심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상하이항을 세계 최대 항만으로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현재 18선석에 불과한 시설을 2010년까지 120억달러를 투입하여 52선석으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홍콩·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물류기지로서의 입지를 확보한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 속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내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및 물류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 계획은,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적 장단점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고, 재원조달 방안이 다소 불분명하며 수도권 정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정립이 필수적이다. 물류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 경제활동을 연계하는 총체적 허브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 전체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 비즈니스중심지 · 사이버중심지 · 문화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의 대기업들이 싱가포르 · 홍콩 · 상하이 ·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역본부를 다투어 위치시키려 할 때, 우리는 네덜란드나 스위스와 같이 강대국 사이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

합리성 · 구체성 갖추었으나 전략적 고려 결여돼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안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 5개 권역을 기업 · 금융의 동북아 중심으로 육성하는 '비즈니스거점 계획'과 인천공항 · 부산항 · 광양항을 중심으로 국제물류망을 구축하는 '물류중심 계획' 등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제시한 5대 사업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것은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강화사업과 물류관련 제도의 보완을 위한 소프트웨어 강화사업이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구상이 이전에 비해 상당한 구체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가 되는 길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 · 중국 등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대적인 장단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후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해운 · 항공의 연계중심지이며 중 · 일간 역사 · 문화 중계지인 점과 다소 개방적인 국민성 등의 요인이 물류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물류 인프라와 물류산업이 싱가포르 · 홍콩 · 중국 등 주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하고 북한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점은 물류중심국가화에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두 번째는 재원조달 문제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안한 5대 사업을 추진하

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 부산신항 개발사업, 광양항 개발사업 등은 각 사업마다 최소한 5조원 이상이 요구되는 대형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위한 정부계획의 성공여부는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수십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적기에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다. 도로 · 전력시설 등 기반시설 관련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충당한다는 일반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기반시설 투자의 과도한 민자의존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한다. 그것은 민간자본은 그 속성상 지나치게 경기의존적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설혹 성공적으로 조달되었다 하더라도 수익성을 감안한 가격책정으로 인해 물류시설 이용료(혹은 사용료)가 높아져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지속을 위해 그리고 관리경쟁력 차원에서 어느 수준까지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정부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정부안에 의하면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공항 2단계 확장사업, 인천공항 배후부지 확장사업, 경원선 · 금강산선 연결사업, 인천 송도 남외항 개발사업, 평택항 개발사업, 의왕 · 군포의 화물기지 확장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입지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문제는 현재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가능한 한 억제하여 수도권집중을 완화시키겠다는 정부(건교부)의 기존 수도권 정책과는 상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수도권집중 억제 정책을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리스크 특히, 북한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해교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국가위험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우리가 인프라를 잘 갖추고 매력적인 제도를 갖고 있어도 다국적기업이나 국제물동량을 유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국가위험도를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원조달 문제가 성공의 관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2시간 비행거리내에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가 43개에 이르며, 세계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로 갖고 있는 우리의 입지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부상하여야 한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소요재원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리스크 특히, 북한리스크를 줄여 국가위험도를 축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권의 마지막 해에 '선거용'으로 급조되었다거나 이것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인구집중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계획에 따른 엄청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힘들며, 과거 비슷한 계획이 불발되었다는 점에서도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중심 국가 운영틀을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에 맞게 재편하는 '국가 대개조 계획'의 일환인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어떤 형태로든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효과적인 재원조달,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위험도의 축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이 추진력을 얻으려면 '허브 코리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용어해설

도메인 (Domain)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컴퓨터들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름이다. 각 컴퓨터는 네 자리 숫자의 고유번호(IP Address, 예:210.114.108.5)를 할당받게 되는데, 일반 사용자는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부여한 명칭이 도메인 네임이다. 즉,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데 있어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이름이 더 기억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다.

도메인 네임은 마침표로 구분된 네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도메인을 표시한다. 도메인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컴퓨터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도 원하는 이름에 'per.kr'을 표기해 도메인을 가질 수 있는 인터넷 개인도메인 시대가 열렸다.

국제 도메인인 경우는 미국에 있는 국제 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부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산원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부여해 주고 있다. 특히, 도메인 네임은 가상공간에서 상표권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때 대기업과 각종 공공단체 등의 도메인 네임을 미리 선점해 거액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세계 재산권기구에서 이를 엄격히 심사해 도메인 장사꾼에게 제동을 걸고 있다.

국제적 도시기능 확충을



오 용 석
경성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yseo@ks.ac.kr)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관련부처별로 세부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경제의 부상을 비롯한 동북아의 경제적 중요성 부각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인천국제공항 등 국제교류 인프라의 개선 같은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획기적 정책 결정임에 틀림없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결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는 장기간에 걸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더욱이 주변 경쟁국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정책을 추진하여 선점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추진되게 된 이상 계획된 목표의 성공적 달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적 과제가 되었다. 모든 국민적 지혜와 지원이 모아져야 하고, 경쟁국들보다 늦어졌다고 하여 서두르기보다 후발성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등 합리적이고 올바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의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거점화 전략의 차원에서 필요한 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살펴본다.

비교우위의 기능적 요건은 강화하고 비교열위의 기본적 조건은 충족시켜야

국제비즈니스의 거점화에 성공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여건으로서 적어도 다섯 가지 기본적 조건과 두 가지 기능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 가지 기본적 조건이란 첫째, 국제 비즈니스센터로서의 적합한 지리적 조건 둘째, 국내외적으로 확보되는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성 조건 셋째, 낮은 원가부담(물가 · 임금 · 세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특구에는 서울을 능가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완벽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함께 3각축을 형성하고 있는 부산과 광양도 국제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한다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화 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금 등)과 우수한 주거·교통·환경 조건 넷째, 외국인에 대한 원활한 행정 및 생활 서비스의 제공과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이 용이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조건 다섯째, 세계화된 국민의식이다.

그리고 두 가지 기능적 요건은 첫째, 고도의 정보통신과 항공수송 능력을 가진 국제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둘째, 학술·문화·기술력 등 창조적 기능이 뛰어날 것 등이다.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보면, 다섯 가지 기본적 조건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지리적 조건에 가장 알맞은 위치에 있다. 즉,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여 공간적으로 동북아의 주요 경제지역을 일정한 거리로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적합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세계화의식은 다방면에 걸친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크게 높아졌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중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나머지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안정성 조건으로서 군사적 대치와 간헐적 교전이 발생하고 있는 남북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국내적으로 여·야당의 소모적 정쟁과 극한적 노사분규도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가부담은 경쟁국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으며 주거·교통·환경 조건도 나쁘다. 교통체증만을 보더라도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외국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와 외국인 취업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화된 교육·언어·의료 서비스 수준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국제신용평가社들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아시아 비즈니스 거점화를 목표로 하는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낮다.

이와 같이 열악한 기본적 조건에 비해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국제비즈니스 거점화에 성공할 수 있는 기능적 요건은 비교적 양호하다. 2002 FIFA 월드컵 경기에서 선보인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천국제공항의 수송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동북아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국제적 학술교류와 문화·예술의 진흥도 빠른 편이다. IT 등 첨단기술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수준이고 기술개발의 잠재력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 입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국제비즈니스 거점화에 성공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은 보다 명확해진다. 즉, 비교우위에 있는 기능적 요건을 강화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확대하는 한편, 비교열위에 있는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비즈니스 거점은 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요구되는바, 정부는 정책적 지원

에 주력하고 건설단계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국내외 기업·전문가 및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구관리기구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점화 지역의 국제적 도시기능 확충 필수적

국제비즈니스 거점화에 성공한 지역은 국제적 대도시로서의 기능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국제적 대도시들만이 다음과 같은 국제 비즈니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부분적 또는 복합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① 국제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고도의 정치와 경제의 중추적 역할 ② 다국적기업의 국제거점 ③ 국제무역의 중추적 기능 ④ 국제정보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 ⑤ 국제 항공망에 의한 세계 주요 도시들의 연결 기능 ⑥ 세계적 여행관광의 중심지 ⑦ 국제적 문화·학술의 중심지 ⑧ 여러 인종의 집결지 등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비즈니스 거점지역은 서울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특구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의 연계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은 바람직하다.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로 경제적 효율성을 더 이상 높이기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에 기능집중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비즈니스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들이 서울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가 정한 국제비즈니스 거점화 지역이 국제도시로서의 완벽한 기능을 갖출 때까지 서울의 국제비즈니스 거점 역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화 지역에 서울을 능가하는 국제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도권과 함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의 3각축을 형성하는 곳은 부산과 광양이다. 중심항만(Mega Hub Port)으로서 관세자유지역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및 광양도 국제비즈니스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은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에 동시에 속하는 최대 항만 도시로서 정부의 정책결정 이전부터 21세기의 동북아 국제물류 거점과 비즈니스센터를 목표로 한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산의 지리적 비교우위에도 불구하고 국제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주거·교통·환경 등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의 이러한 취약점은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광양만은 항만뿐만 아니라 그 일대는 창고·운수·금융 및 가공업 중심의 물류와 생산기능축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지역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역시 국제적 대도시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광양·여천·여수 및 순천은 광양만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대도시로 통합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을 대도시 권역으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화의 정책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역내국가들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역내경제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도시 기능을 갖춘 동북아 대도시간 물류 네트워크화에서부터 출발한다.

'동북아 비즈니스 벨트' 구축 필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화 전략은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 없이 경쟁적으로 전략을 추진하게 되면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체제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내 경제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벨트(Business Belt)'의 구축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벨트가 구축되면 역내 국가간 국제비즈니스의 기능적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상호 보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즈니스 벨트는 현재 동북아에서 국제비즈니스 기능을 가진 대도시의 물류 네트워크화로부터 출발한다. 서울·부산·인천·베이징·상하이·도쿄·오사카·타이베이·가오슝 및 홍콩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은 동북아 비즈니스 벨트의 외적 구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비즈니스 벨트의 내적 구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교통운송망을 이용한 물류체계화, 공동 프로젝트의 개발 및 인적·물적·재정적 지원기구의 설치, 벨트내 도시간 국제분업화와 자유무역체제의 구축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문 사업으로 벨트내 도시간 업무시간의 통일, 무비자화, 전문 인력의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동북아 도시간 물류체계화의 우선적 과제는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유통센터 등 운송 · 보관 및 상품정보 전달 기능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간에 상이한 통상법제와 정책상의 마찰 제거 및 복합운송서류와 같은 문서의 표준화로 물류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제분업화와 자유무역체제는 비교우위와 상호보완성이 큰 상품을 대상으로 한 각 도시에 설치된 자유무역지역 · 관세자유지역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공동 프로젝트는 대규모 장치산업보다 기술수준에 따른 상호보완성이 높아 도시의 네트워크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을 막론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벨트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직적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직체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대도시간 협력회의의 정례화와 공동 프로젝트의 실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발트해 연안 도시들이 구성한 발트도시연합(Union of Baltic Cities)과 같은 형태로의 발전이다. 나라경제

'열린 사회' 구축이 필수적 과제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shpark@korea.ac.kr)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특히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지로서 그리고 비즈니스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 정치 · 경제적인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이들과의 관련성하에서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머지 않아 세계경제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경제에서도 그 역할과 위상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는 매우 절박한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은, 유럽의 중심부에서 독일 · 프랑스 등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도 유럽의 물류중심지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볼 때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일차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요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전략들을 여하히 입안하고 실행하느냐일 것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는 장기적 생존전략

우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인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은 우리나라를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본부 및 동북아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하드웨어 개발의 측면에서 경제특구의 지정을 통한 인프라의 체계적 개발, 인천국제공항의 입지를 활용한 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그리고 IT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IT중심지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세제, 외환거래, 노사관계 및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 주거 · 문화 · 관광 등의 분야에서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규제를 과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은 경제의 중장기 번영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생존전략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이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네덜란드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감하게 완화 내지는 철폐하고,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의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동북아지역의 기업 및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 생존전략으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급속하게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10년간의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강력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크게 위축되기는 했지만 강대국 모임인 G-8의 일원으로서 세계정치에서 아직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러시아의 입김도 우리나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안보위협의 요인이 되어 온 북한의 존재도 우리에게는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은 단순히 우리 경제의 중장기 번영만을 위한 청사진이라기보다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은 우리에게 안보적으로도 커다란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잠재되어 있는 다분히 복합적인 생존전략으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즉,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부상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국가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진출하였거나 동북아 지역본부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들과 금융회사 및 이들의 원천국가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증대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이들은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 전략이 가지는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네덜란드의 성공사례 모델로 삼을 필요

한편, 우리나라의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서 유럽의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인구 1,600만명 정도의 중간규모 국가로서 인구 8천만명의 독일과 인구 6천만명의 프랑스를 이웃 국가로 두고 있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독일 · 프랑스 등 강대국보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및 외국인직접투자 지표에 있어서도 인

구가 세 배인 우리나라를 크게 능가하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영어 및 독일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당수의 고등학력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유럽 최대의 항구인 로테르담 항구를 매우 빠른 시기에 건축하는 등 유럽의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경주해 왔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열린 사회'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으로는 異문화에 대한 친근감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수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노력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 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유럽본부를 설립하도록 하는 성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모범사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은 이러한 성공사례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세부 추진체계를 마련할 경우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진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성공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열린 사회' 구축해야

우리가 추진할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선, 우리나라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열린 사회'란 문화 · 종교 · 관습 등이 다르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포용하고 상호존중하는 의식을 갖는 사회이다. 이러한 열린 사회는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내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직원을 아시아 영업기지로 파견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나라를 마다하고 싱가포르 또는 홍콩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다국적기업들의 기업활동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다 열린 사회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열린 사회로의 방향전환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말로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준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다. 물론 굳이 국내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국적을 불문하고 고용과 생산을 창출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세제상, 외환거래상 그리고 과실송금에 있어서의 규제들을 완화 또는 철폐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자칫 우리 기업들의 해외로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정책을 실시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에게 국적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열린 사회로의 방향전환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고 더불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등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불문하고 동일하면서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기조의 확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린 사회로의 변모 및 이에 적합한 정책의 개발과 더불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영어가 자유롭게 통용되며 주요 국제언어인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구비율이 각각 30%, 20%에 달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물론 네덜란드인들의 언어능력이 네덜란드의 모범사례를 가능하게 한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즉, 이는 네덜란드가 열린 사회임을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특성인 것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내세울 만한 제조업이 거의 없었던 아일랜드가 1990년대 중반 '유럽의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한 데에도 네덜란드와 유사한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두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개방사회의 확립과 전문인력의 육성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중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해 특히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전략의 추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종합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세부적인 정책조치들도 일견 타당하며 실행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정책조치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이번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과 함께 정부가 우리 사회의 개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야말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전략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소가 될 것이다. 나경제

바로잡습니다

2002년 7월호 26쪽 하단 [용어해설] '콜금리' 내용

금융기관끼리 영업활동 과정에서… 이때 은행 · 보험 · 증권업자 간에

⇒ **이때 은행 · 투신 · 보험 · 증권업자 간에**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중개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콜거래 중개업무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정 은 보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
(ebjeong@mofe.go.kr)

최근,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및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주변국간에는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상하이항을 세계 최대 항만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싱가포르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지화 계획(Industry 21)', 대만의 '아·태지역 지역운영센터화' 등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 위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추진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속에서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경제활동과 국제물류의 최적지로서 그 역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지 10년 안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이 오히려 우리 경제 생존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이며, 이를 위한 국가적 전략은,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 및 제도의 확충·정비를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함과 아울러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먼저,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공항, 부산항·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메가 허브 포트(Mega Hub Port)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 생활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 유수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결을 통해 유라시아대륙과 연계를 추진하며,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신항 · 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경제특구의 개발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 지방핵심거점을 중점개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 생활 환경을 조성하되 특히, 경제특구에 대하여는 국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별도의 특별 행정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첫째,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활주로 용량 확보를 위한 2단계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을 현재 4만평에서 2020년까지 13만평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세계적인 수준의 부산항 · 광양항을 동북아 메가 허브 포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하이 신항만이 개발되는 2010년 이전에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추가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심 터미널을 확충하며,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물류 · 조립 · 무역 · 국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 아시아 횡단철도와 연계를 추진하고, 남북 도로와 중국 및 러시아 도로를 연결하여 아시아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등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발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5대권역에 복합화 물터미널을 건설하고 무역·통관·항만을 상호 연결하여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작업 등이 수반될 계획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개발

수도권 서부축은 부산항 및 광양항 배후지역과 더불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를 추진하

는 데 있어 핵심축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지역별 기능분담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 서부축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영종도지역(용유 · 무의도 포함)과 송도신도시 · 김포매립지 · 고양 및 서울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를 일컫는다.

수도권 서부축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인천공항 외에도 충분한 사회간접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IT·미디어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영종도지역의 경우 그 배후단지 중 일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항공물류 거점지로 개발하고, 용유·무의도는 국제적인 레저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송도신도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국제업무의 거점지 · 고도 지식기반 산업의 집적화단지로 개발하고, 김포매립지에는 대규모 화훼수출단지 · 위락시설 및 스포츠시설 외에 여의도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국제 금융업무 기능을 수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상암동 DMC지역은 정보·디지털미디어 단지로 육성하는 한편, 고양지역은 관광·숙박·국제전시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부산항 · 광양항 인근지역의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

공항 · 항만 등 경제특구로서의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인근지역을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함께 경제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인근지역의 경우 부산신항, 김해국제공항, 센텀시티, 울산 · 창원 · 마산 등 산업기능과 연계하여 국제물류 · 첨단산업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개발하고, 광양항 인근지역의 경우에는 광양항의 환적 거점기능과 광양 · 여수 · 순천 등의 배후산업기능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

경제특구 개발전략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경제특구를 세계적인 물류 · 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집중 개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인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경제특구 개발의 파급효과를 경제특구와 연계된 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권역별로 산업 · 교통 여건과 지리적 특성에 맞추어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환황해권의 경우 중국 등을 겨냥하여 경인 및 서해안 지역에 대한 산업 · 물류 · 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환동해권의 경우 부산항과 대륙철도를 연결하여 산업 · 물류축을 형성하며 강원지역에 휴양 · 레포츠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부내륙권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 중앙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등을 통해 중부내륙권 및 충청권 개발을 강화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10년까지 3조원을 투입하여 공항 · 도로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권역내의 자유무역지역 및 지방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지방핵심거점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나 신규 지정을 통하여 지방의 수출 및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구 · 광주 · 대전 등 지방 대도시는 그 지방의 특성을 살린 전통산업과 IT산업을 육성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공항 인근지역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경제특구 개발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고 특별행정기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지방문화산업단지를 아울러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개발을 통해 수도권내 경제특구 개발효과는 동해안 · 서해안 · 중부내륙권으로, 부산 · 광양 경제특구 개발효과는 동남권 · 서남권 및 남해안 관광벨트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IT · 디지털미디어 인프라의 구축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IT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초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등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외국 유명 IT기업의 서버시스템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IT기반시설과 거주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IT 관련 세계 유수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IT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서울 상암동 DMC지역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이를 동북아 디지털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먼저,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유수 대학의 분교설치 및 국내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국제대학 및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어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국방송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국 · 영 · 한문 병용 안내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특구내 대외문서는 우리말과 함께 영어로 발간하고, 민원서류를 영어로도 접수하여 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의 출입국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특구내 외국기업 임직원에게는 장기비자를 발급하고, 단기 체류하는 외국 전문직 종사자의 무비자 입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의 정착, 무노동 · 무임금 원칙의 실천, 노동문제의 정치화 방지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특구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를 설치하여 외국기업의 노무 관련 고충을 처리하고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OECD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대하고,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

외국인 임직원의 주된 애로사항인 주거 · 교육 ·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기준을 개선하여 설립을 용이하게 하며, 외국인학교 설립시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특구내에서는 외국 교육기관의 진입을 자유화하고,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 · 분원 설립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병원이나 약국의 진입을 허용하고 미국 · 영국 등 현지 방송을 전송받아 거주 외국인에게 그대로 방송할 수 있는 방송운영체계를 구축하며, 테마파크 · 고급 쇼핑몰 · 골프장 · 요트장 등 외국기업 임직원들의 높은 소비 · 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도 아울러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중 확정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올해 12월말까지 세미나 · 공청회 등을 통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작업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어해설

전사적 자원관리 (ERP: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인사 · 재무 · 생산 등 기업의 전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정보시스템 · 재무정보시스템 · 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 기업내의 인적 ·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한다.

ERP(전사적 자원관리)가 경영혁신기법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ERP 패키지로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기업업무의 전산화는 부서의 업무를 분석하고 각종 개발도구를 이용, 회계 · 인사 · 급여 관리 등을 직접 자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구축하는 주문식 개발방법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ERP에 따른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패키지들이 개발 · 보급되면서 컴퓨터 사용자들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다 쓰듯이 기업들도 전문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영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각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



김 광 재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장

오늘날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따라 경제활동에서의 국가의 개념은 약화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 물류관리체계가 종전의 1국가 1거점 체제에서 다국가 1거점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화물의 생산 · 유통 · 소비에 있어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에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있다. 이에 각 국가마다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학적 위치 및 시설이용료 등에서 유리

'물류중심지화'란 생산 · 유통 ·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과 지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 지정학적 위치가 뛰어난 네덜란드·싱가포르·홍콩 등은 세계 유수 다국적기업들의 지역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자국을 교역과 관광 그리고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다.

'물류중심지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인구가 1,600만명에 불과하지만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기업 유럽유통센터의 57%, 아시아기업의 56%를 유치함으로써 1인당 GNP가 2만5천달러에 이르는 부국으로 성장한 네덜란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2천km 이내에 약 14억명의 인구가 상주하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3억5천만명과 유럽의 최대 물류거점인 네덜란드의 3억7천만명보다 약 네 배 가량 큰 규모이다.

우리나라도 빈약한 물적자원을 극복하고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10여

넌 전부터 부족한 교통 · 물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인천국제공항을 2001년 3월 성공적으로 개항하여 운영중이고 2001년말에 서해안 · 중앙 · 대전-진주간 등 7개 노선 540km의 고속도로를 신설 · 완공하고 국도 283km를 4차선으로 확장한 것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이점으로는 공항·항만 시설이용료 등이 중국·홍콩 등의 경쟁상대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최근 남북간 협력분위기와 경의선 연결 추진에 따라 그간의 '섬경제'를 탈피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로연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비중이 세계 컨테이너물량의 27%에 이르고, 연평균 8.1%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화물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시설이 한계용량에 도달하여 높은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이 발생되고 있고, 일본 · 중국 등 주변국들이 공항 · 항만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어 거점화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의 물류산업 경쟁력이 아직 열악한 수준이며 외국어에 능통하고 개방적 성향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전략 마련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물류거점시설의 확충

지난 2001년 3월 성공적으로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2002년 7월 현재 50개 항공사가 117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으며 지난 6월 FIFA 한 · 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하는 등 공항운영 전반에 걸쳐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가접근 교통시설로 제2연육교와 공항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부터 2단계 확장사업으로 총사업비 5조901억원(민자 3,869억원 포함)을 투자하여 2008년까지 활주로 1본, 탑승동, 여객계류장 및 화물터미널을 추가건설할 계획이다.

'물류중심지화'는 기업들의 물류비용 최소화 · 효율적 경영을 위한 제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 국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물류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에는 항공기 운항이 현재 연 24만회에서 연 41만회로, 여객수송은 연 3천만명에서 연 4,400만명으로, 화물은 연 270만t에서 연 450만t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을 2011년까지 각각 30선석, 33선석 규모로 개발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수용을 위한 대수심터미널을 각각 4선석씩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의선(서울-신의주) · 경원선(서울-원산) · 금강산선(철원-내금강) · 동해선(양양-원산) 등의 단절된 4개의 남북철도의 연결을 추진하여 아시아횡단철도(TAR)

와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전략하에, 그동안 경의선 남측구간 공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남북관계의 추이를 보아가며 나머지 공사도 추진할 것이다. 철도와 함께 단절된 국도 6개 노선의 연결사업도 추진하여 육로면에서도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효율적 국내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부는 간선교통망의 확충을 통해 수송비를 절감하고 교통체계를 효율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6,140km에 이르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하에 2001년에 서해안·중앙·대전-진주 간 등 7개 노선 540km의 고속도로를 신설·완공하였고, 올해에는 평택-음성·목포-광양·경부선 한남-반포 확장 등 8개 노선(254km)을 신규착공하고, 서울외곽(성남-퇴계원)·천안-논산 등 5개 노선(192km)의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한편, 486km에 달하는 구간의 국도를 확장·개통할 예정으로 올해말까지 4차로 이상 국도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서울-대구 간 신선 건설 및 대구-부산 간 기존선 전철화)은 2003년 완공하여 2004년부터 운행할 계획이며, 대구-부산 간 신선 건설 등의 2단계 사업은 예정보다 2년 앞당겨 2002년 착공하여 2008년 완공할 계획이다. 호남선도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2004년부터 고속철도를 운행하고 호남고속철도 신선 건설 추진을 위한 연구작업을 올해말까지 수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국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 및 유통단지를 건설하여 거점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비 절감과 수송체계 효율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군포·의왕, 34만평) 내륙화물기지는 1996년부터 운영중이나 물동량 증가로 인한 시설용량 부족으로 확장사업을 추진중이며, 2000년부터 운영한 부산권(양산, 39만평)에 이어 호남권(장성, 16만평)·중부권(청원·연기, 21만평)·영남권(칠곡, 25만평) 내륙화물기지를 계속 건설해 나갈 것이다.

내륙화물기지와 함께 국내물류거점시설의 역할을 맡을 유통단지를 그동안 8개소 81만평을 지정하였으며, 올해 5월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까지 총 367만평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산업 지원·육성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도상국의 추월이라는 이

<표 1> 경쟁공항간 공항시설 이용료

(단위 : 천원, B747 396t 기준)

	인천	간사이(일본)	첵랍콕(홍콩)	창이(싱가포르)
이·착륙료	2,192	9,815	4,679	2,838
공항이용료	15	29	8	11

<표 2> 주요 공항시설 비교

(단위 : 만평, 본)

	인천	첵랍콕(홍콩)	창이(싱가포르)	푸동(중국)
부 지	355(1,435)	378(450)	393	287(969)
활주로	2(4)	2	2	1(4)
화물터미널	3.9(12.7)	9(53)	14.2	1.5(12.1)

주 : 괄호 안은 최종 개발완료시의 규모

중도전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이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비스산업 중 물류산업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을 통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증가와 소비자 편의 증대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며, 물류산업이 발전하면 기업비용이 절감되고 경쟁력이 제고되어 국내 제조업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 30만평을 관세자유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오는 2004년까지 개발하고 200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까지 30만평을 추가개발하되,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국고지원하여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 국제물류기업의 유치를 추진할 것이다. 현재 부산항·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배후부지 93만평(부산항)과 112만평(광양항)을 관세자유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중이다.

최근 국내 물류기업들이 하주기업의 물류기능을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대행(제3자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정부도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을 통해 물류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 공제(중소기업 5%)대상과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 지원대상에 운송·창고업 등 물류업종을 포함시키고, 조세감면 대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대상에 물류 자동화·정보화·표준화 등의 물류산업을 포함시키는 등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세제 제도의 개선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항·항만 시설이용료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라시아 대륙과의 육로연결 가능성이 높다는 점,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비중이 세계 컨테이너물량의 27%에 이르는 등 화물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의 성장에 이점이 있다.

그간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인 공항·철도·도로 및 항만 개발과 물류거점시설인 복합화물터미널·유통단지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물류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산업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관련부처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기업들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걸친 물류활동은 투자와 교육·관광·금융 등 각종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병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물류중심지화' 전략이 나아가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주요 경쟁국 공항·항만 배후부지와의 비교

(단위 : 천원/㎡, %)

	상하이항	로테르담항	싱가포르항	두바이공항	한 국[1]
임대료	8.5~11	18	216	19.5	13
입주율	60	40	80	60	50(전망)

주 : 1) 국고지원 30%시

'경제특구'의 개발



김 경 욱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서기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는 '경제특구'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을 국제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3개 경제특구 후보지에 대한 기능분담 방안과 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송도신도시는 국제교류 거점 및 첨단산업 · 정보 도시로

송도신도시는 국제교류 거점 및 첨단산업 · 정보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지난 1994년부터 인천시에서 매립을 추진중이다. 총 535만평의 매립계획 중 2000년 1월 176만평의 매립이 완료된 데 이어, 현재 207만평에 대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다. 매립이 완료된 176만평에는 기존계획에 따라 주거단지, 지식정보 ·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특히, 바이오산업단지에는 세계적인 바이오신약 개발업체인 백스젠(Vax Gen)社가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하여 R&D센터 및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매립중인 지역을 포함한 167만평에는 국제비즈니스센터가 조성된다. 지난 3월 인천시와 The Gale Company(81%) · 포스코(19%) 컨소시엄이 127억달러 규모(개발투자비 117억달러, 토지매입비 10억달러)의 외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2013년까지 세계무역센터(WTC)컨벤션센터 · 세계무역센터빌딩(60층) · 오피스빌딩(69동) · 호텔(4동) · 백화점 및 쇼핑몰 · 주거단지(1만5,200세대) · 골프장 등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향후 매립예정인 152만평의 부지에는 기존계획의 확장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 연구 기능의 유치가 추진되며, 2020년까지 535만평의 개발이 완료되면 상주인구 18

만명과 70여동의 오피스빌딩과 호텔 · 쇼핑센터를 갖춘 국제 업무 · 교류의 거점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송도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제정될「경제특구법」에 따라 송도신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세제와 부담금 감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주거·교육·의료 여건의 개선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제2연육교 건설을 추진하는 등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2연육교는 지난 2000년 2월 영국 아멕(AMEC)社에서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주경간폭을 700m로 설계하면서 안전성 검증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고, 접속도로 건설은 서측부분은 인천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동측부분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송도신도시 조성(매립 및 기반시설)에는 총 2조3,37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 중 민자로 건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일부시설을 제외한 2조1,300억원은 토지매각 수입을 활용하여 전액 인천시에서 투자할 계획이다.

영종도와 용유 · 무의도는 항공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도와 용유 · 무의도는 항공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개발된다. 이번에 개발계획을 마련한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지구 570만평과 용유 · 무의지구 213만평이며, 영종지구 570만평은 주거 · 산업 · 물류 · 국제업무 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복합도시로, 용유 · 무의지구 213만평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전략 중 하나는 '경제특구'의 개발이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을 국제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3개 경제특구 후보지에 대한 기능분담 방안과 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국제적인 종합휴양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영종지구는 지난 2001년 12월 인천시가 싱가포르 소재 전문기관(Colliers Jardine)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202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된다. 1단계로 75만평은 지난 6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토지공사에서 인구 3만명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준비중이며,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산업 · 물류(88만평), 주거 · 관광지(284만평) 등으로 단계별로 조성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 · 물류 · 관광 · 국제업무 등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인구 11만8천명(주택 4만7천호)의 복합기능의 신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용유 · 무의지구에는 외자유치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종합휴양지 조성이 추진된다. 지난 2000년 4월 CWKA社에서 민간제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며, 동 계획에 따르면 총 55억달러가 투자되어, 호텔 8동(약 5,500실) · 콘도미니엄(약 2천실) 등 숙박시설과 해양수족관 · 마리나 · 골프장 · 테마파크 등 위락시설, 89동 1천여실의 실버타운, 59동의 쇼핑센터와 국제컨벤션센터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영종지구 개발사업과 용유 · 무의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비 1조2,440억원 중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인 「경제특구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영종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2003년말 착공하여 2006년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나머지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15년간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용유 · 무의지구는 외자유치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원지'로 지정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매립지인 김포매립지와 송도신도시와는 달리 영종 · 용유 · 무의 지역은 사유지가 많아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보다 상세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도 이 지역이 우리나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관문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대폭 강화하여 난개발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매립지는 국제금융과 첨단화훼 · 레저의 중심지로

김포매립지는 국제금융과 첨단화훼 · 레저의 중심지로 개발된다. 지난 1991년에 동아건설이 농업목적으로 매립한 김포매립지는 1999년 8월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매입하여 영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간 600억원의 금융비용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공항 개항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전략 추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특구로 개발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김포매립지(487만평)에 주변지역 55만평(청라매립지 30만평, 사유지 25만평)을 포함하여 총 542만평이 개발되며, 이 중 485만평은 토지공사가 공영개발하고 57만평은 농업기반공사가 첨단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제업무용지로 33만평이 개발되며, 이 중13만평은 국제금융기능 유치를 위한 초고층 업무용지로, 10만평은 외국인기업 종사자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외국인 주거단지가 3층 이하의 저층으로 조성된다(60인 이하/ha).

주거 · 업무 · 공공시설 용지 167만평이 개발되며, 주거용지 79만평, 상업용지 9만평, 공공시설용지 14만평 등 167만평 규모의 중 · 저밀도의 신도시가 조성된다(인구 8만9천명, 외국인주거단지 포함). 개발밀도를 과천 · 일산 등 기존 신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단지의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해 100~200%의 다양한 용적률이 적용된다(개발밀도 : 김포매립지 133인/ha, 과천 174인/ha, 일산 176인/ha, 분당 198인/ha).

스포츠 · 레저용지로 320만평이 개발된다. 외국인기업 종사자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95만평 규모의 골프장과 43만평 규모의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경마관련 용지 32만평에는 승마장 · 경마훈련장 등 경마관련 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첨단화훼단지는 농림부(농업기반공사) 주관으로 신공항고속도로 연접지역과 심곡천 남

측에 57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후 농업기반공사에서 조성하되, 주민 및 인천공항 이용객을 위한 테마관광지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2만평의 유보지를 두어 국제업무도시 기능이 활성화될 때까지 축구 · 야구장 및 생활스포츠용지 등으로 활용하고, 장래 외국대학원 분교 · 외국 유수의 종합의료시설 등을 유치하는 경우 유보지에 입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업무용지 · 테마파크 등에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하반기중 토지공사에서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와 용역을 체결하고, 국제업무지역 · 테마파크 등에 대한 외국인기업 유치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포매립지는 단지경계로부터 약 2km 북측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하여, 화력발전소 · 쓰레기소각장 ·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이 인접해 있어 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피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피시설을 집단화하면서 고도처리하여 오염 발생량을 대폭 감소시키는 한편, 주거단지는 악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부터 3k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고 단지외곽에 폭 1.7km의 녹지대와 지구내 두개 하천을 따라 서해로 이어지는 250m 폭의 녹지축을 조성하여, 도보나 자전거로 바다에 접근이 가능하고 사면이 녹지에 접한 쾌적한 전원도시로 조성된다. 화훼단지 · 골프장 등을 포함한 녹지율은 65%로,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포매립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은 1일 19만대 수준으로 예상되며,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인터체인지와 경인운하제방도로 및 신공항철도 역사를 신설하고, 단지외곽에 5개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송도신도시는 국제교류 거점 및 첨단산업 · 정보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도와 용유 · 무의도는 항공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김포매립지는 국제금융과 첨단화훼 · 레저의 중심지로 개발된다.

김포매립지 개발에 필요한 2조5,227억원의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조달하여 투입할 예정이며, 신공항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개설 등 광역교통시설과 화훼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일부 국고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김포매립지는 내년 상반기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06년 상반기중 택지분양, 2007년 하반기에 주택분양에 착수하여 2009년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 관련 자료 ▶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김포매립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 2002. 7. 12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영종도, 용유 · 무의도 개발계획」, 2002. 7. 8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과, 「송도신도시 경제특구로 개발」, 2002. 7. 2

※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참고

동북아 IT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최 재 유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장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에 따라 IT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주도산업으로 부상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T산업은 그 자체로 성장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 등 미래 신산업의 발전에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큰 인프라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IT산업, 국가 경제성장의 주도산업으로 부상

한·중·일 3국의 IT산업 생산규모는 2000년에 세계 IT생산(1조803억달러)의 29.6%를 차지해 유럽·북미 지역에 이어 동북아지역은 세계 주요 IT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일본은 세계 IT생산의 19.4%를 차지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19.4%)의 IT생산국이며, 중국과 우리나라는 각각 3위(5.7%)와 4위(4.5%)의 IT생산국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IT산업은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크게 앞서 있으나 최근에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중국은 이미 TV·DVD 등 일부 IT산업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하였으며 IT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IT산업은 가격경쟁에서의 우위뿐만이 아니라 기술발전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북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對중국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IT분야에서 일본을 뛰어넘어 동북아 IT 중심국가로의 위상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IT인프라와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IT·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중심국가(IT-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IT·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동북아 IT허브화 위한 IT · 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

IT · 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방안은 외국 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 IT · 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 동북아 디지털미디어 산업 중심지화 등 4대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에서 IT ·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각 실천전략별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동북아지역에서의 IT-허브화 도약을 위한 IT·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은 외국 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 동북아 디지털미디어 산업 중심지화 등 실천전략을 담고 있다.

외국 IT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

정부는 외국 IT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통신산업 관련 규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IT기업 경영환경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상시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프로그램 불법 복제 ·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통신시장의 사업허가제도의 간소화, 상호접속기준 보완 등을 통해 국내 규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도하협상에서 통신분야 국내 서비스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타국시장에 대한 개방요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외국 IT기업에 대한 원활한 IT인력의 공급을 위해서 IT분야 우수인재들의 해외교육 기회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해외 우수교수 초빙사업을 지원하여 국제화된 IT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우수대학 및 IT교육기관에서 IT관련 학위 및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과정을 거쳐서 일정규모의 교육비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이 IT관련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외 정보통신망과의 연동을 주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통신인프라의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초고속 유 · 무선통신망을 2005년까지 가정에는 평균 20Mbps, 기업에는 최대 622Mbps급, 이동중에는 최대 2Mbps 수준까지 고도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 유럽 간 정보통신망(TEIN :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및 아 · 태지역 정보통신연구망(APII : 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확대구축 등을 통해 해외 정보통신망과의 연동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동통신의 로밍서비스 가능국가를

현재 일본 · 중국 · 홍콩 · 미국 일부 · 호주 · 뉴질랜드 등 35개국에서 올해말까지 베트남 · 멕시코 · 몽골 · 브라질 ·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하여 총 50개국까지 로밍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세계적인 인터넷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시험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e-비즈니스 인프라인 'IDC(Internet Data Center)'의 발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IDC는 인터넷전자상거래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사업에 필수적인 초고속인터넷 접속과 라우터 · 서버 등 정보시스템의 안전 · 관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기가(Giga)급 랜(LAN)을 구축한 초고속인터넷 환경에 인터넷사업자의 서버시스템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는 IDC를 통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전세계 사이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IT · 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

인천 송도 ·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 판교 벤처산업단지 · 부산 센텀시티 등에 IT · 디지털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집적화단지는 IT 등 지식기반 신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와 생산, 주거와 여가공간, 기타 지원기능 등이 결합된 자족적인 복합단지로 개발하되, 지방정부가 지역내 가용자원을 우선 활용하여 개발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기반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의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내 IT ·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집적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IT · 디지털미디어 관련 집적지역을 IT타운(가칭)으로 지정하여 지역 IT진흥조직을 중심으로 IT관련 기업, 지원 기관 · 시설 등이 집적되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는 지역 IT산업 집적지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내 제작물의 해외배급 · 유통망 구축을 통해 국내 IT · 디지털미디어 산업 집적화단지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IT · 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수도권내 IT · 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수도권 총량제한의 범위내에서 IT미디어 관련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및 IT관련 대학의 신 · 증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IT · 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등 지식정보관련 산업단지내에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면 자기소유 부지 · 건물이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동북아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중심지화

국내 영상 · 음반 · 게임 산업 등 디지털미디어 산업에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 디지털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정부는 'KCRC(Korea Contents Resource Center)'를 구축하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 출판 · 방송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계 공동제작실 구축을 통해서 'One Source, Multi Use'를 강화하고, '한국전자책 산업전

(Korea e-Book Fair)' 개최, 이 달의 우수전자책 선정 등의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전자책의 대중화를 유도하는 한편으로 고선명 TV(HDTV) 등 새로운 제작환경에 대응한 종합지원체제도 구축된다.

한편, 2005년까지 상암동 DMC내에 연구개발 · 제작 · 판매 및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를 신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콘텐츠 산업관련 지원기능을 통합 ·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2 한 · 일 월드컵의 성공을 계기로 고양된 우리나라의 위상과 IT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IT · 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방안의 실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IT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IT · 디지털미디어 산업을 주도하고 나아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제

정부는 외국 IT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통신산업 관련 규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를 위해 세계최고 수준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관련 자료 ▶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IT · 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방안」, 2002. 7. 2 (KDI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경제정책정보 참고)

용어해설

글로벌 로밍 (Global Roaming)

로밍이란 서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각자 설치한 이동통신망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여타 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밍의 장소와 상대 사업자의 범위가 국제적일 경우 이를 글로벌 로밍 서비스라 한다

글로벌 로밍이 이루어진다면 특정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세계 어디에서나 자신의 전화번호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로밍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정은 행정적 · 기술적 사항이 필요하며, 행정적인 사항은 가입 협정, 불법사용 통제, 국가간 자유 이동, 단말기의 사용을 위한 형식승인의 상호 인증 등에 관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가입자 정보 교환 등의 전송 기술이다.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업자들도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진정한 글로벌 로밍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출입국 및 이민제도 개선



원 형 규
법무부 체류심사과장
(won4080@moj.go.kr)

오늘날 각국은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되고자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동북아 국제 금융 · 물류 기지를 선점하고자 모든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체류활동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자유로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6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90일 이상의 장기체류자도 24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들 장기체류 외국인들 가운데 7천여명이 투자관련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는 선진자본의 유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및 선진경영기법의 국내이전 · 국민고용 창출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투자외국인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의 보장이 선행될 때, 국제 금융 및 물류 관련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추진중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과 관련하여 투자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및 체류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 출입국제도와 비교하여, 향후 투자외국인에게 부여될 출입국관리 행정상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입 · 출국 편의를 위한 사증발급 위임범위 확대

그동안 우리 출입국관리당국에서는 관광진흥, 각계각층의 세계화에 따른 국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전세계국가 중 30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국민들에 대하여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대폭 입국문호를 개방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63개국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 가능).

그리고 1997년부터는 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를 발급하여 복수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 3년으로 1회 입국시 60일간의 체류가 허용되고, 전용심사대 지정으로 출입국심사가 간소화되는 등 역내기업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또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이 법무부 장관의 사증발급권한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별로 그 범위를 정하여 외교부 소속의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전문인력으로 경영이나 관리 및 생산 ·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의 사증발급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만을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도록 위임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증발급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투자외국인이 입국 당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고 하거나, 당초 부여받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우리나라를 입 · 출국하려면 따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체류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투자외국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외국기업의 임직원과 전문기술자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는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복수사증 발급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하였는데 그 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의 주요골자는 투자외국인이 현지에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후 2년간 체류기간 연장이나 재입국 허가를 따로 받지 않고도 자유로운 입 · 출국 및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비즈니스센터의 출범에 즈음하여

정부는, 투자외국인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의 보장이 선행될 때 국제 금융 및 물류 관련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입 · 출국 편의를 위한 사증발급 위임범위 확대, 체류기간 연장의 불편 해소, 전자식 지문채취방법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출입국관리 행정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 이라는 방향설정을 뜻하는 것이다.

체류기간 연장의 불편 해소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과거의 외국인등록증으로는 불가능하였던 e-메일 · 전자계정 ·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양식의 외국인등록증을 교체하여 발급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기업투자자격(D-8)의 경우 체류기간 상한이 2년 이내로 되어 있어 투자외국인은 체류기간이 2년이 초과하기 전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였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완화하여 투자외국인이 기업경영 · 기술개발 · 마케팅 업무 등 본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체류기간 상한을 3년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외국자본의 유치촉진 특히, 안정적인 투자지역을 찾고 있는 동남아 각국 부유층 화교들의 투자를 적극 유인하기 위하여,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고액 투자외국인으로서, 한국인종업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3년 이상 기업활동을 영위한 자는 거주자격(F-2)을 취득할 수 있고, 이들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자에게는 영주자격(F-5)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체류 우대조치를 함으로써 투자활성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전자식 지문채취방법 도입 검토

현행「출입국관리법」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는 자,「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열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十指紋 채취제도는 외국인 범죄수사의 기초자료 · 변사자 등의 신원확인 자료로 활용하고, 위 · 변조 및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적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일부국가들은 지문채취대상을 제한하거나, 엄지손가락의 지문만을 채취하는 등 지문날인제도를 당해국가의 실정에 따라 제도운영의 양태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채취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지문을 찍어야 할 경우, 불쾌감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된다는 인상을 심어 주어 거부감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다분히 잠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식 지문채취방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인쇄용 잉크로 십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을 대체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그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관문(strategic Gateway)으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면서 동북아 각국이 벌이는 경쟁무대에 뛰어들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영토 전체가 국제자유도시화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세에 맞추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출입국 및 이민 정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투자가 · 법인의 유치는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투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자관련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향후에도 그러한 활동에 제약이 되는 요소는 과감하게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왜냐하면 '동북아 거점(HUB)'이 되기 위한 밑바탕에는 인근 국가보다 월등히 나은 출입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으며,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국제화



함 석 동
교육인적자원부 조정1과 서기관
(sdham@moe.go.kr)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공항 · 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역할을 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 생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행방안이다.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한 교육부문 실현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적 감각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을 확대하며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한편, 외국인교수 초빙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학교 설립 확대,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및 외국 학생 · 연구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비 주거공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각 사업별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 감각 및 외국어 능력 갖춘 인적자원 개발

국제적 감각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국제이해교육 강화 및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확대

정부는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국제적 자질과 감각을 가진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학생들의 동북아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3년부터 국제이해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지원을 통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10개의 '국제이해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 운영하는 한편, 시 · 도 교육청별로 국제이해교육 자료 개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정부는 국제적 감각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내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해외의 우수학자 초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등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어 등 외국어의 회화 중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초 · 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 초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전의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 일어 원어민 보조교사도 적극 유치하기로 하였다.

2002년 3월 현재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141명만이 초청 · 활용되고 있으나, 이번에 동 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2003년부터 5년간 매년 1천명씩 증원하여 2007년까지 5천명을 초청하게 되면 초 · 중등학교(전체 1만60여 학교) 2개 학교당 한 명의 원어민을 배치 ·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초청 원어민은 영어 4,150명 · 일어 700명 · 중국어 150명으로 총 5천명이며, 추진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중국어와 일어 보조교사의 비중을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본국의 초 ·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을 보면, 영어 보조교사는 영어상용권 국가인 미국 · 영국 · 호주 · 캐나다 · 뉴질랜드 · 아일랜드 출신 원어민이며, 일어 · 중국어 보조교사는 일본 · 중국 국적 소유자이다. 교포 2~3세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되, 해당국의 시민권 및 영주권 소유자로서 최소한 중등학교부터 해당국에서 교육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채용요건으로 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월 수당을 1등급 300만원, 2등급 270만원, 3등급 250만원으로 현재(1등급 200만원, 2등급 180만원, 3등급 160만원)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항공료 및 생활준비금 등은 별도 지급할 계획이다. 주거는 전세주택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이 원하거나 시 · 도 교육청의 형편에 따라서는 월 단위로 주거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 계약제로 채용하나, 3~4년간 재계약할 수도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2003년 소요예산은 169억원이며, 매년 약 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2008년까지 총 7,043억원 소요)되

<표 1> 연차별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초청 계획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영 어	850	1,700	2,550	3,350	4,150
일 어	100	200	300	500	700
중국어	50	100	150	150	150
계	1,000	2,000	3,000	4,000	5,000

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고등학교 설립하고 외국인교수 초빙사업 지원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화된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폭 넓은 국제적 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내에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올해에 정책 연구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 석학 등 우수학자를 유치하여 선진 기술·이론 도입 및 국제 전문인력의 양성에 기여하고 국내대학의 교수·연구 풍토의 개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작한 외국인교수 초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2> 분야별 외국인교수 초빙사업 지원액 현황

(단위: 명, 만원)

	인 원	지원액
국가전략 분야 (61명)		
IT	14	17,967
BT	23	40,150
NT	14	21,783
ET	4	5,950
ST	1	1,083
CT	5	7,500
기타 분야 (42명)		
경영학	9	17,900
어 문	2	2,400
사 회	23	34,533
공 학	6	10,250
이 학	2	2,334
합 계	103	161,850

올해의 경우 총 13개 국립대학에서 103명(IT·BT 등 국가전략 분야 61명, 경영학 등 기타 분야 42명)의 외국인교수 초빙사업 지원 대상을 확정하였다.

초빙 외국인교수들의 연봉은 평균 9,500만원 정도이며, 최고 1억3,500만원에 이른다. 외국인교수의 인건비는 해당 대학과 국가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교수 1인당 연간 6,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외국인교수 인건비 중 국가 부담분 예산 16억1,850만원을 대학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교수가 9월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평균 4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한다. 2003년도 외국인교수 초빙사업에는 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참고로, 2001년 4월 현재 외국인 대학교원은 1,983명으로 전체 교원(4만9,762명)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개선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외국인학교 설립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현재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능력을 갖춘 국내 법인으로 확대하고, 설립기준도 일반학교보다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학교 설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외국의 학생들을 국내에 유치하여 이들이 우리 국가의 고급 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대학에 유치하기 위해 국내대학에 기숙사 설립을 지원하고 영어진행 수업 비율이 높은 대학에 재정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적자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간 교류를 증진시키며 우리 문화 및 시장의 확산에 기여하도록 親韓·知韓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이를 위한 기본 환경 조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부터 외국인유학생의 국내대학 유치를 위하여 우리나라 대학에 기숙사를 신축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확대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외국인유학생의 국내대학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유학생들이 국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공간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외국인유학생 유치실적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앞서 있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개별대학내 기숙사 신축을 200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일정수 이상 외국인학생을 유치한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외국학생 및 연구자를 위한 편의시설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2004년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중에 있다.

이외에 외국인학생들이 한국유학을 꺼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어진행 수업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이의 확대를 위해 영어진행 수업 비율이 많은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 등의 우수 고졸자를 초청하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親韓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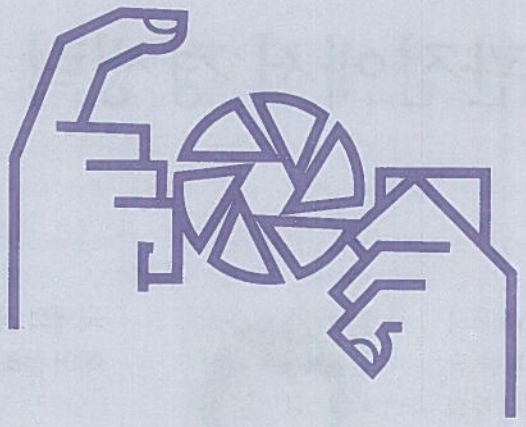
또한 대학재정 평가지표에서 외국인유학생 유치비율의 반영을 확대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소요 예산은 71억5천만원이다. 나라경제

◀ 관련 자료 ▶

• 교육인적자원부 조정1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관련 교육부문 방안」, 2002. 7. 15

이 달의 초점



포스트 월드컵 대책은 이렇게

관련 민간전문가들로부터
2002 FIFA 한 · 일 월드컵의
성과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방안을 들어본다.〈편집자〉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 키워야



이 범 일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장·상무

2002년 월드컵이 축구 4강 · 거리응원을 통한 국민 단합 · 국가 이미지 개선 등의 성과를 거두고서 6월 30일에 폐막되었다.

이번 한·일월드컵은 연인원 600억명 이상이 TV를 시청한, 역대 스포츠대회 사상 최대의 이벤트였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움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골드만 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짐 오닐은 "이번 한·일월드컵에서 한국과 터키가 4강에 진출한 것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 국가들의 장기적인 성공을 알리는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히딩크 리더십을 배우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BSR'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하였다. 혈연(Blood) · 학연(School) · 지연(Region)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를 배제하여야만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제 월드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보자.

국제적 감각과 페어 플레이 정신 체화해야

글로벌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이 중요하다.

그간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을 많이 해왔지만, 그 의미는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국제적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히딩크는 유럽의 강호들과 끊임없이 친선경기를 치렀다. 우리 팀의 성적이 형편없더라도, 그래서 히딩크의 사생활마저 언론으로부터 공격받더라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한 팀과 맞붙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선수들은 유럽 스타일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시합에서는 졌지만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배양되었다. 해외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의 시합을 통해 그만큼 기량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는 글로벌 차원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준다. 우리나라 축구의 FIFA 랭킹은 40위 정도였다. 월드컵

이 끝나자 22위로 도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20위권 밖이다.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가능하다 보니, 그만큼 노력도 더 하고 누굴 벤치마킹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

앞으로는 해외의 경쟁대상과 우리의 실력을 비교해 보자. 시스템이 다르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비교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속 좁은 행동이다. 재정경제부는 대장성과 비교해 보고, 삼성은 제너럴 일렉트릭(GE)社와 비교해 보자.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고치면 된다. 한국 최고에서 세계 최고로 시각을 높여보자. 그러면 세계 일류가 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가 명확히 제시될 것이다.

기업의 경쟁양태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럴수록 페어 플레이 정신이 더욱 강조된다.

스포츠를 살펴보자. 축구 · 레슬링처럼 신체적 접촉이 심한 운동일수록 규칙이 엄격하다. 규칙은 모든 선수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며,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퇴장을 당할 정도로 심한 제재가 내려진다. 배구나 야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셈이다.

기업경쟁의 양태도 마치 축구시합을 하듯, '뒤엉킴'이 심해졌다. 해외 일류기업들이 언제 우리의 전장에 뛰어들지 모른다. 아니 이미 많은 산업 분야에서 그들과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리스크가 일상화된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사소한 의사결정의 실수가 순식간에 기업 파산으로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해졌다.

몸싸움이 심한 운동일수록 파울에 대한 벌칙이 크듯이, 경쟁이 심할수록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강도가 높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우리도 기업의 투명성 · 윤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여 문제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얻은 국민적 자신감과 개선된 국가 이미지를 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적 감각을 익히고 페어 플레이 정신을 체화하며, 기초체력 강화 · 제품 고급화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정도경영'이 더욱 절실함을 의미한다. 규칙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회가 선진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선진사회일수록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회일수록 "왜 나만 벌을 주느냐"고 항의한다. 교통법규 위반시, 다른 사람은 잡지 않고 왜 나만 딱지를 떼는가 하고 억울해 하는 것도 후진국형 사회의 한 단면이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국민 모두가 페어 플레이 정신을 익히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선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전종업원이 페어 플레이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기초체력 강화 · 제품 고급화에 주력해야

기초체력 강화도 중요하다.

히딩크 감독은 "조직 전술 훈련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는 주위의 여론을 무시하고, 기초체력 강화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는 90분간의 경기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강력

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4강의 원동력은 조직전술력이 아니었다. 바로 기초체력이었다.

기초를 다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초석을 튼튼히 다지는 것이 '돌아가는 길'인 듯 보여도, 실은 한국사회가 선진수준에 도달하는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일을 할 때도 그렇다. 무조건 빨리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수정하느라고 오히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처음에 꼼꼼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줄이는 길이다. 우리는 그간 한강의 기적을 자랑해 왔다. 전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그렇지만 압축성장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1990년대 초반 신도시 건설계획이, 당시에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했지만, 오늘날 이로 인한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인이 감탄한 것은 우리나라의 응원문화였다. 전국민이 붉은 옷을 입고 응원하는 것도 대단했지만, 응원 종료후 삼삼오오 모여 거리를 정돈하는 모습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IMF 관리체제를 겪었던 나라, 민족간의 전쟁을 치렀던 나라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다. 게다가 개막식 때 보여준 한국의 IT능력은 정보강국의 가능성을 전세계에 확신시켜 주었다.

기업은 업그레이드된 국가 이미지를 자사 제품의 브랜드력 강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상품으로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 이미 전세계 제조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보급형 제품의 시장을 장악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선진국과 동등하게 브랜드력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저 가격을 몇 퍼센트 올렸다고 해서 그 제품이 고급품으로 변신할 수는 없다. 품질력 · 디자인력 · A/S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고급품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단어가 전세계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대기업부터 과감히 고급품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품질과 첨단제품으로 선진기업들과 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도 함께 올라간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제품들도 덩달아 고급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번 월드컵 행사를 통해 우리는 정치 · 경제 분야의 패배주의 · 서구 콤플렉스 등에서 벗어나 "우리도 할 수 있다(can-do)"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러한 자신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붉은 악마가 보여 주었던 문구를 상기해 보자. "꿈★은 이루어진다"그렇다. 자신감은 분명 성공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그럴 만한 저력이 있다.

자유시장경제 인프라 구축을



조 명 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hom@korea.ac.kr)

지난 6월 30일로 막을 내린 2002 한 · 일 월드컵에서 우리 팀은 월드컵 1승과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넘어서 아시아 최초의 4강 진출이라는 새로운 축구사를 썼다. 우리 팀의 선전 앞에서 온 국민은 남여노소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과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열광했고 세계는 우리 팀의 선전과 우리 국민들의 정열적인 응원에 깜짝 놀랐다.

새로운 자원인 '하이 퀄리티 코리아' 적극 활용해야

이러한 월드컵 열기는 우리나라에 커다란 변화와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을 제공했다. 우리나라 팀의 뛰어난 전적, 경기장 및 거리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열광적이면서도 질서 있는 응원,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등은 월드컵을 지켜본 연인원 420억명의 시청자와 사상 최대의 방문객 · 기자단 등으로 하여금 '코리아'의 우수성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 축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노력하면 세계일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같은 바깥세계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변화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식변화는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필요충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경제 시대에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월드컵에서의 성공을 우리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경쟁력 제고로 이어갈 수 있을까. 이는 월드컵으로 새롭게 높아진 '코리아' 브랜드의 활용과 브랜드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월드컵에서의 우리 팀의 선전과 전국민의 열

월드컵의 성공을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려면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은 시장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광적이면서 성숙한 응원은 전세계에 '하이 퀄리티 코리아(High Quality Korea)'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그 결과 '코리아' 브랜드는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코리아 브랜드의 인지도 증가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우리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연간 0.055%p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만약 이번 월드컵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 제고는 오랜시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한국주식회사'는 세계시장에서 새롭게 인식·형성되고 있는 '코리아' 브랜드를 잘 활용하여 우리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 제고로 연결하는 또 한번의 기적을 연출해야 할 것이다.

히딩크식 경영 응용으로 고품질 제품 개발을

우리 기업들은 높아진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월드컵으로 세계시장에서 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지만 우리 제품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어 '하이 퀄리티 코리아'의 이미지와 부합되지 못한다면 월드컵으로 높아진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축구가 누가 보아도 내용면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우리 제품과 기업도 세계시장에서 4강에 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업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제품과 기업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우리 축구의 질이 높아진 과정을 연구하여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축구의 질이 높아진 데는 무엇보다도 히딩크 감독의 역할이 크다. 성공적인 대표팀 경쟁력 제고 비결은 그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은 취임 직후부터 발휘되었다. 그는 대표팀의 성공적 변화를 위해 살려야 할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하고 선수선발에 있어서의 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 선수들간의 수직적 관계 등 구조조정의 장애물들을 과감히 척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수의 반발과 많은 저항이 있었지만 그는 변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결국 이들이 자발적으로 대표팀의 변화에 동참하게 만들었다.

그의 전략적 사고 또한 우리 팀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는 16강 진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체력·조직력·기술 등)을 도출하였다. 그후 기존의 우리 대표팀이 가진 자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강점(정신력·스피드 등)과 약점(체력·기술 등)을 찾아내어 16강 성공요인에 비추어 부족한 것을 집중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강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부족한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트레이너를 유럽에서 아웃

소싱하기도 했다. 또한 히딩크 감독은 학연 · 지연 등의 요인이 아닌 오직 실력에 의해 대표팀을 선발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월드컵 출전 23명의 명단을 엔트리 마감 직전까지 미룸으로써 선수들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였다.

우리의 경제지도자들은 이러한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우리 축구 대표팀의 업그레이드로부터의 시사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우리 제품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질과 경쟁력 제고에 응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 인프라 구축이 핵심

우리 경제를 4강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업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기업의 노력을 도와 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지원'이란 직접자금 지원과 같은 개발연대방식의 지원이 아니다. 개발연대시절에 행해졌던 방식의 정부지원으로는 우리 경제를 세계 4강으로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포스트 월드컵(월드컵 이후) 대책'을 통해, "세계일류상품을 연내에 300개로 늘리는 등 2010년 경제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붉은 악마가 보여준 자율의 힘을 무시하고, 개발독재 시절의 밀어붙이기 정책만 내놓은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세계 4강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시장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물리적 ·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수송 · 물류망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경제의 질서와 룰을 확립하고 필요없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없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규제가 많으면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수많은 규제 앞에서는 기업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없으며 기업의 혁신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이처럼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야 하지만 시장의 룰을 만들고 또 이러한 룰을 어기는 플레이어를 제재하기 위한 규제는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즉,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번 월드컵에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옐로우카드와 레드카드가 나온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비신사적이고 게임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에는 가차없는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전세계에서 기업활동의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어 있다는 미국에서도 엔론사태를 기점으로 미국기업들의 부실한 회계관행에 대한 대대적 조사와 함께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룰의 확립은 무조건적 규제완화가 아닌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의 강화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제 전세계인의 화려한 축제였던 월드컵은 막을 내렸다. 이제는 월드컵 4강의 위업을 통해 우리 내부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 4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분명한 국가발전 비전 제시해야



유 병 규
현대경제연구원 미시경제실장
(bkyoo@hri.co.kr)

2002년 한 · 일 월드컵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4강 신화'를 이룸으로써 한 민족의 가슴에 길이길이 남으리라 생각한다. 월드컵을 통해 실현된 다양한 경제적 효과와 대회 기간 동안 분출된 국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우리의 경제 · 사회 발전에 여하히 접목할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국정 과제로 남겨졌다.

국민 통합과 경제 도약의 계기 마련돼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토대가 되어야 할 월드컵의 효과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효과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누어진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대회를 준비하고 경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실현된 투자 증가 · 소비 진작 등으로 국민총생산이 늘고 고용이 증대한 점을 들 수 있다.

직접적인 효과가 그동안 우리 경제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은 간접적인 효과들이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세계로의 집중적인 국가 홍보를 통해 우리의 대외 이미지와 국내기업의 상품 가치가 크게 높아진 점이다. 이제까지 저평가되었던 한국과 국내 상품의 가치가 월드컵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이는 국내 수출과 외국인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국내산업의 발달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컵 대회를 통해 건설 · 광고 · 방송 · 관광 · 스포츠용품 산업 부문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레저 · 문화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대회 기간 동안에 초고속인터넷망 · 고화질 디지털 TV · 차세대 이동통신기기와 같은 국내 IT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이들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월드컵 대회의 지방 분산 실시로 인한

국내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향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라 할 수 있다. 한 곳에서만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과는 달리 각 지방으로 분산되어 경기가 치러진 월드컵 대회는, 각 지역의 SOC 기반을 정비하고 세계 속에 각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월드컵의 사회 · 문화적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의 자신감 회복과 민족의 일체감 형성이다. 우리 축구팀이 4강에 진출함에 따라 "우리도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또 이를 통해 국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얻은 것이다. 심지어 북한도 우리를 응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남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가 마련된 점이다. '붉은 악마'들의 열기에 스며 있는 '붉은 혼(Red Spirit)'의 발견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이 보여준 응원문화 속에 스며 있는 정신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남녀노소와 계층간 · 세대간 · 지역간 · 국내외간 장벽을 허무는 화합과 포용 및 개방 정신(Reconciliation), 목표 달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열정과 집념(Enthusiasm), 자발적으로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패션 감각으로 응원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창조와 역동성(Dynamism)이 그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정신자세는 향후 국내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W(월드컵) 세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다. 이들의 특징은 자율적 협동정신과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남다른 질서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신세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한대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번 월드컵 응원을 통해 우리의 집회 문화가 부정(negative)의 문화에서 긍정(positive)의 문화로 반전된 점도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반대와 갈등과 비난의 군중 문화가 화합과 긍정과 칭찬과 격려 문화로 바뀌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 **이번 월드컵 대회를 통해 형성된 '세계최고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과 에너지를 경제 · 사회 발전에 접목시키고, 경제적 효과들을 유지 · 확대해 가려면, 국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국가발전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분명한 국가발전 비전 제시 필요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기본 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월드컵 대회 기간 동안에 형성된 '세계최고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과 국민 통합력 그리고 외환위기나 월드컵과 같이 공동체 단합의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분출하는 국민 에너지를 경제 · 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대회 기간 동안에 나타난 경제적 효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월드컵 이

후에 국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국가발전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월드컵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월드컵이 끝난 후 부처별로 월드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부 대책은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 ·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월드컵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경제 · 사회 발전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하다 못해 이전에 정부가 수립한 '지식기반경제 발전계획'이나 '2011 비전과 과제'와 같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포스트 월드컵' 과제를 연계했더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발전 과제가 되었을 듯싶다. 정부 각 부처의 '포스트 월드컵' 대책이 일회성의 전시적 행사에 그칠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이처럼 대책 추진의 분명한 방향성이 결핍된 데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단한 경제구조 개혁으로 '다이나믹 코리아' 이미지 유지해야

충실한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월드컵 신화의 열기와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과 전략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높아진 국내 위상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21세기 선진 경제 문화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월드컵 기간 동안에서처럼 모든 갈등 요소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 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빈부격차 완화 · 노사정 협력 분위기 조성 · 사회복지제도의 개선과 충실화 등을 추진하여 지난 5년 동안 경제 개혁과 구조조정 등으로 분열되었던 국가 에너지를 다시금 하나로 결집해야 하는 것이다.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월드컵 이후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는, 경제구조의 끊임없는 개선과 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룸으로써 '다이나믹 코리아' 이미지를 유지하고, 외국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업을 하기에 편리한 물적 · 인적 기반을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허브 오브 아시아(Hub of Asia)'를 이루어 나가며, 월드컵을 통해 온세계에 알려진 'IT강국 코리아'를 수출산업화하는 것과 같은 3대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월드컵을 통해 급속한 발전의 발판이 마련된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산업들을 우리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월드컵 경기의 위성 중계 등에 활용된 최첨단 디지털 방송기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나 관광 산업 그리고 캐릭터와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월드컵을 지역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전기로 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회 기간 동안에 나타난 외국인들의 관광 선호도 등을 지역별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화 관광상품과 산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의 투자 여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 자본을 확충하는 일 역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한 과제이다. 월드컵은 우리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 속에서 우러나온 친절 · 질서 · 청결의 시민정신과 같은 선진문화를 세계에 각인시켜 주었다. 기 소르망(Guy Sorman)이 지적했듯이, 이번 월드컵은 우리 국민이 '제 영혼을 잃지 않으면서'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문화 자본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문화 자본이란 경제 발전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 내의 법 · 제도 · 의식 · 가치관 · 관습 등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의 정치 · 경제 발전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다. 월드컵을 통해 형성된 세계화 의식과 법과 질서 준수 풍토가 교육과 사회 캠페인 등을 통해 보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심화될 때, 우리의 정치 · 경제 · 사회 시스템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어 우리나라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야심찬 국가 비전과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모든 활력을 결집할 수 있는 민주적 · 합리적 · 개방적인 리더십이어야 한다.

'포스트 월드컵 대책'은 경제구조의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편한 물적 ·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IT강국 코리아'를 수출산업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용어해설

문화기술 (CT : Culture Technology)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창조 · 개발 · 제작 · 가공 · 유통하는 지적 노하우 및 물리적 기술을 말한다. 문화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문(국내산업 평균 부가가치율: 44.4%, 게임: 60.3%, 음반: 48.3%)으로 기존 오프라인 산업과 동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기술적 우위에 더해 콘텐츠의 이미지 파워로 경쟁하고 있다. 일본의 'e-Japan' 전략, 영국의 '디지털콘텐츠 실행계획', EU의 'MEDIA PLUS' 등 선진 각국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선택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다.

세계 콘텐츠시장 규모는 2001년 8,50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1조4천억달러로 급성장해 IT시장 규모(1조2천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시장 규모는 120억달러로 세계시장의 1% 내외에 불과하나, 국내시장 성장률은 25%에 달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물적 기반이 되는 정보인프라는 손색없는 수준인 반면, 창의력 있는 전문인력과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2001년 8월 우리 정부는 IT(정보기술) · BT(바이오기술) · NT(나노기술) · ET(환경기술)와 함께 CT(문화기술)를 5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정하고, 게임 · 애니메이션 · 방송영상 등 유망분야에 전문인력 4만명을 5년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용어해설

그린 투어리즘
(green tourism)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형태로 추진되는 체류형 여가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 · 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며, 여기에 이벤트와 농사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농업 외 소득을 증대시키려는 농촌관광전략이다.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 녹색관광)' 이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녹음이 짙은 전원에서의 관광을 '녹색관광' 이라고 부르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흥과 위락 중심, 대규모시설 의존형의 대중관광(mass Tourism)과 다른 점은,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 농촌 특유의 평화로움과 안온함을 느낄 수 있고, 농촌에서의 농사일 체험 및 자연관찰 등 풍부한 체험테마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펴왔고, 최근에는 이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는 등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는 「농산어촌휴가법」, 이탈리아에서는 「농촌휴가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프랑스의 민박 지트(Gites), 영국의 팜 할러데이(farm holiday), 일본의 팜 인(farm inn)이 그린 투어리즘의 대표적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소득 증대방안의 하나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2001년 5월, 마을 또는 마을간 연합을 기본단위로 하고 농촌주민의 합의 · 창의 ·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투어리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경제정책 포럼

■ 경제정책 해설

60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 김영과
64 제조물 결함 피해구제를 쉽게-「제조물책임법」 시행 / 강형욱
69 공적자금 - 성과와 상환대책 / 김성국
74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 서기동
77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복지제도 - 근로자복지 증진 기본계획(2002~2006) / 심경우
81 주택시장 안정기조 정착에 주력 / 윤성원
85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옥화영

▶ 포스트 월드컵 대책

89 '업그레이드 코리아' 추진 / 정은보
93 수출 및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 박건수
97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 고광섭
101 스포츠 · 문화 · 관광 산업의 활성화 / 김철민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김 영 과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지난해 4/4분기 이후 내수중심의 회복세를 보여 온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면서 수출과 투자도 회복되는 등 성장의 내용과 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전반적 경기상승세 지속될 듯

올해 1/4분기에 GDP가 5.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데 이어, 4~5월에도 산업생산이 7%대, 서비스업이 10%대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2/4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진하였던 설비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실업률은 5월 2.9%로 낮아져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안정되었으며, 물가와 금리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1/4분기 이후 둔화될 전망이다. 2001년 GDP의 4.1%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의 적자전환 전망, 최근 일련의 분식회계 스캔들로 불거진 기업회계에 대한 불신 등이 미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경제는 내수부진과 부실채권 등 구조적 불안요인으로 올해 연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며,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정치불안과 함께 경제불안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도 전반적인 경기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국제시장의 불안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대선 등 정치일정 과정에서의 집단이기주의의 표출, 월드컵 이후로 연기된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점차 확산되면서 수출과 투자도 회복되는 등 성장의 내용과 질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연간 6%대 성장과 3% 내외 물가안정, 5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분쟁 가능성 등 대내외의 불안요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수립

「국민의 정부」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수출 · 투자 · 내수가 균형된 적정성장을 도모하고 둘째, 금융 ·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신노사문화의 확산을 유도할 것이다. 셋째,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넷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과 기술인력 양성 등 성장동력과 산업경쟁력 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다섯째, 중산 · 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이번 월드컵으로 높아진 우리 경제의 위상과 국가이미지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 위해 힘쓸 것이다.

안정적 균형성장 도모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이 진행중이나, 미국경제 회복지연 가능성 · 환율하락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급격한 정책기조 변화보다는 경제흐름과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문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과 국채발행 시기의 조정을 통해 시장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고 환율 급변동시에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만약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경기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면, 공공사업의 낙찰차액 사용 제한 등 예산과 기금의 이 · 전용을 억제하고,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활용하거나 내년 세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가 3% 내외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약가와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고,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상반기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통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만약 부동산 과열현상이 재발한다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할 것이다. 가계대출의 급증문제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을 축소하는 등 상반기에 수립한 가계대출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계대출 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 정착

구조조정은 경기회복 여부를 떠나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하반기에도 은행 민영화 · 부실기업 처리 등 구조조정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잠재적 불안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를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금융 · 조흥은행은 하반기중 전략적 투자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지분을 추가 매각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등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현재 개별법에 의해 각기 달리 규제되고 있는 투자신탁 · 뮤추얼펀드 · 은행신탁 등이 일관성 있는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자산운용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감독체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대우자동차는 9월초 신설법인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정리절차를 진행하고, 한보철강은 가격조정협의를 거쳐 8월중 매각 본계약의 체결을 추진하며, 하이닉스반도체는 실사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처리방향을 마련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도산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집단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중 담배인삼공사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추진하고, 한전 발전자회사 1개사의 매각에 착수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초 발전노조파업 해결과정에서 정립한 불법행위 엄단 등 새로운 노사분쟁 해결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대외경제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방에 적극 대처하되, 우리 산업에의 충격이 완화되도록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서비스분야 · 농업 등 취약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7~8월중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는 등 무역자유화 협상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특히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쌀산업대책 ·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생활 안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하반기중 민관합동 투자사절단을 유럽 · 미국 및 중남미 등에 파견하는 한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확대하고, 외국인학교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성장동력과 산업경쟁력 기반 확충

수출 ·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안정성장 기반을 확충하면서, 경쟁력 제고 기반이 되는 인력양성 · 정보화 · 기술개발 · 기업경영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월드컵 기간중 개최된 전시회에서 이루어진 수출상담이 수출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책은행의 설비투자자금 대출조건을 개선하는 등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월드컵을 통해 높아진 IT강국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고속 인터넷 · CDMA 등 유망품목의 마케팅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과학장학생' 제도 등 이공계진학 촉진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가과학기술인' 제도 도입 등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구체

정부는 하반기에도 안정적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경제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것이다. 또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성장동력과 산업경쟁력 기반을 확충하며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화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거점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제특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중산 · 서민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생산적 복지의 확충과 청소년 실업대책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5월 수립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정기점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30만명에게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실업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특히, 맞춤형 교육 · 훈련을 통해 교육과 취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생활편의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월드컵 경기장 활용방안을 포함한 문화 · 관광 · 스포츠 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월드컵을 계기로 구축된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안내 체계개선 및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제조물책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해결 지원 등을 통해 제조물책임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고, 재정이 지원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표> 2002년 한국경제 전망

(단위 : 억달러)

	2001년 실적	2002년 전망
GDP성장률	3.0%	6%대
소비자물가	4.1%	3%내외
경 상 수 지	86	50

이상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수출과 투자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연간 6%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3% 내외의 물가안정 속에 경상수지도 50억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해 「국민의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지난 4년반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월드컵을 통해 모아진 우리 국민의 역량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경제성장의 동인으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각 부문의 혁신노력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일류 경쟁력'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제조물 결함 피해구제를 쉽게
-「제조물책임법」 시행



강 형 욱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종으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것(무과실책임제도 도입)을 말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입법은,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 제품이 출현하고 시장의 개방으로 수입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제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안전성 확보·향상에 노력하게 하고, 나아가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기업의 준비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7월부터 시행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는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 져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제품에 결함이 생기고, 이 결함으로 인하여 제품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제조업자가 어떠한 점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제품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소비자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제조업자는 7월 1일 이후 공급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 신체 · 재산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지금까지의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그에 따른 '제품결함'의 존재라는 2단계의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던 것에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부담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대해서 적용된다.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그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하며, '제조'는 제조물의 설계 · 가공 · 검사 ·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서비스는 제외된다.

그리고 미가공 농수산물(임 · 축산물 포함)은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 등 부동산과 소프트웨어 · 정보 등 지적재산물은 원칙적으로 제조물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예컨대, 건물 · 토지에 부착된 공조설비 · 조명설비 · 승강기 등 인도시점에 동산으로 인도된 것은 제조물에 해당한다.

제조 · 가공한 자와 수입한 자를 '제조업자'로 규정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자'에는 제품을 업으로 제조 · 가공한 자와 제품을 업으로 수입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상품에 있어서처럼 자신이 직접 제품을 제조 · 가공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성명 · 상호 · 상표 · 기타의 표시를 하여 자신을 제조업자 · 가공업자 · 수입업자로 표시하고 있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자 즉, 표시제조업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되어 이 법에 의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 · 소매업자 등 판매업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 판매업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판매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결함과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 배상해야

'결함'이란 '제조 ·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안전성'이란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 성능의 장애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지시나 경고 ·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제조업자는 결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 ·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제조업자,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 의무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다. 도난당한 제품과 같이 제조업자가 그 제품의 공급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품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한 때의 과학 ·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위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한 것으로, 개발상의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경우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이다. 그러나 'KS'마크나 '품' · '검'자 마크 등 안전관련 마크를 받았다거나 형식승인 등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넷째, 원재료 ·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원재료 · 부품 제조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면책사유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에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책임을 면제받지 못한다.

피해자측은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측은 그 기간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제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한 날이 아니라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한 제품부터 적용

「제조물책임법」은 시행일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공급'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거하여 최초로 자신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자에게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입증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이 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②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③ 손해가 결함 때문

지금까지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제품결함의 존재를 입증해야 했으나「제조물책임법」시행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만을 부담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법원 판례들의 경향은 결함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추정'이라 함은 실제의 재판에 있어서 법원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원활한 시행 위해 지원대책 마련

「제조물책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시행에 대한 홍보 · 교육의 실시와 각 부처별 제조물책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1월 법 제정후「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 · 소비자 ·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별로 법 시행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제조물책임 제도 홍보 리플릿 제작 · 배포 등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또한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청 ·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서 각각 제조물책임 대책협의회 및 제조물책임팀 등을 구성 · 운영하여 관련 제조물책임 대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둘째, 업종별 제조물책임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제조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통하지 않고 간편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업종 단체별로 재판 외 분쟁해결기구인 제조물책임센터를 설립 · 운영하도록 권장하여 왔는바, 2002년 7월 현재 전자 · 자동차 · 식품 등 12개 업종별 제조물책임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센터는 품질 및 제조물책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과 제조물책임관련 소비자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기구로 나누어 운영된다.

셋째, 제조물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제조물책임관련 보험 개발 유도 및 제조물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제조물책임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현재 주요한 제조물책임보험으로는 1999년 10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이 있고, 2002년 6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넷째, 제품의 안전성 제고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 대책의 일환으로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 · 가공 시설 改替, 설계 · 제조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교육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전문가 양성 교육과 제조물책임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65%를 지원하는 제조물책임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시 제조물책임을 부당하게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은 안전한 제품 생산을 소비자는 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을

기업의 경우 우선, 기업의 최고경영자에서 직접 제조 · 설계 · 판매에 관여하는 전체 직원에 이르기까지 인식과 발상이 바뀌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와 제품사고에의 신속한 대응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 즉, 제품의 생산과정 전체에 걸쳐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측면을 강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에 대한 공적기준을 능가하는 자가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사용설명서의 제공과 오사용에 대한 경고 부착 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함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될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도 추후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당해 기업은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리콜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이 결함제품의 리콜을 충실히 함은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제조물책임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별 상담 창구를 정비하고 불의의 제조물사고에 대한 배상의 경우를 대비하여 제조물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비자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겠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제조물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충분히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제품의 판매업자나 제조업자 그리고 소비자보호기관에 알려 제품 결함의 시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결함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오용이 있는 경우는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는바, 소비자들 스스로도 제품의 사용설명서나 주의 · 경고 등을 충분히 살펴서 사용하고, 제품을 함부로 개조하는 등 제품의 오사용이나 남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라경제

◀ 관련 자료 ▶

-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제조물책임법 시행 준비 상황 점검회의 개최」, 2002. 6. 14
-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제조물책임(PL)센터 설립 · 운영」, 2002. 5. 28

※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참고

공적자금 – 성과와 상환대책



김 성 국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

1997년말 우리 경제는 유사 이래 경험해 보지 못한 총체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다. 환율은 2천원대를 육박하였으며, 어음부도율은 전년보다 세 배 이상 상승(1996년 0.17%→1998년 0.52%)하였고, 주가는 절반 이하(833→406, 연평균 종합주가지수)로 떨어졌다. 특히, 수십년간 부실이 누적된 금융권의 경우 스스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요한 간접자본인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확산될 위험이 컸다.

실물경제의 혈맥과도 같은 금융중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자본조달비용이 급격히 상승하여 우량기업까지도 도산하게 되고, 그 결과 부실채권이 양산되어 금융권의 부실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중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이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은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필수공공재'적 성격 때문이다. 금융부문 위기의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과 실물경제가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전환하여,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목적으로 조성 · 투입된 자금이 바로 공적자금이다.

위기 극복 위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

IMF 위기 이후 2002년 3월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56조원이다. 이 중 26조원이 퇴출된 금융기관의 예금자를 보호하는 데 지원되었으며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직접 투입되었다. 금융기관에 지원된 자금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금이 60조

<표> 공적자금 지원 내역(1997년 11월~2002년 3월말)
(단위 : 조원)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등	부실채권 매입	계
60	16	26	15	39	156

경제위기 이후 2002년 3월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156조원이다. 이 중 26조원이 퇴출 금융기관 예금자를 위해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직접 투입되었다. 이는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자금이 39조원, 자산매입이나 순자산부족분에 대한 출연 등을 위해 사용된 자금이 31조원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됨에 따라 누적부실이 정리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1997년말 7.04% 수준이던 일반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말에는 10.81%로 상승하였다. 또한 은행권에 5조3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금융기관의 정상화는 금융중개기능의 회복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상승효과를 0.61~0.75%p로 추정하였으며, 성장잠재력 회복효과만으로도 공적자금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해외의 언론 · 연구기관 · 국제기구 등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 구조조정의 성공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유례 없이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투기등급으로 하락하였던 국가신용등급은 4년 만에 A등급으로 복귀하였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 대만 · 말레이시아 등은 세계경제 침체와 구조조정 지연 등의 영향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회복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늘어 외환보유고가 1천억달러 이상으로 확충되었으며, IMF 차입금(195억달러)도 3년이나 앞당겨 2001년에 상환하였다.

직접적으로 의도한 성과는 아니지만 공적자금 투입의 부산물로 구축된 '신용위험관리시스템'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으로 본다. 금융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는 활발한 부실채권 정리시장이 형성되었다. 부실채권을 담보로 하는 유동화증권(ABS)의 발행, 구조조정전문기구(CRC, CRV)를 통한 부실채무기업의 처리 등 시장 스스로의 기능에 의해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공적자금 상환대책시안 마련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짧은 기간내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을 제 · 개정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파산재단의 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하였으며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는 등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은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금융권의 부실을 단기간에 제거하여 금융시스템을 조기에 복구하기 위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상당부분 회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회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추정하고 상환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공적자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3

월부터 회수규모의 추정 및 상환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6월말에 공적자금 상환대책시안을 발표하였다.

공적자금 회수규모는 83~91조원 평균 회수율은 55%에 이를 것

회수규모의 추정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평가단과 3개의 실무작업반)에서 수행하였다. 추가회수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출자주식의 평가에는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과 증권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특별히 신중을 기하였다.

회수추정 결과, 3월말까지 지원된 공적자금 156조원 중 기회수된 42조원을 포함 총 83~91조원이 회수되어 평균 회수율은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우리나라가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회수율은 유사한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북유럽이나 미국의 회수율은 우리보다 높지만, 이들 국가의 금융위기는 규모 및 강도 면에서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회수율의 직접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지원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지분 47조원은 기회수된 4조원을 포함하여 총 17~22조원이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대한투자신탁증권, 서울보증보험 출자지분은 누적된 부실을 떨어내기 위하여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경영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퇴출된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대지급하거나, 계약이전과정에서 순자산부족분을 보충해 주기 위한 출연금 등 출자 이외의 형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된 51조원 중에서는 14조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대지급금이나 출연금은 퇴출 금융기관의 잔여자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에서 회수하게 되므로 회수율(10~30%)은 매우 낮다. 다만, 2000년말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는 등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된 부분은 90% 이상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35~37조원이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산관리공사의 회수율이 높은 것은 시가 매입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예산 등에서 후순위채 매입·국책은행 출자 등을 위해 지원된 20조원의 자산가치는 17조원으로 평가되었다.

상환대책 필요한 금액은 69조원

지원된 공적자금 중 상환대책이 필요한 금액은 2002년 3월말 기준 69조원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잔여채무 117조원(원금 99조원, 이자 18조원) 중 30조원은 보유자금(5조원)과 향후회수자금(28조원의 현재가치 25조원)으로 자체상환하고, 재특에서 융자받아 지급한 이자 18조원에 대한 채무는 면제할 예정이다. 나머지 69조원에 대해서는 상환주체·상환기간·상환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공적자금 회수불능액의 상환은 투입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과 이들 기관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

정부는 6월말에 공적자금 상환대책시안을 마련하였다. 회수추정 결과, 회수규모는 83~91조원, 평균 회수율은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대책이 필요한 공적자금은 3월말 기준 69조원으로, 금융권과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제능력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 결국 69조원은 공적자금의 수익자인 금융권과 정부 · 기업 · 일반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수익자 부담에 있어서는 우선 직접적인 혜택을 입은 금융권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최대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최종보루(last resort)인 재정에서 맡도록 하였다. 재정자금은 모든 국민경제 주체가 조성한 자금이므로, 결국 직 · 간접적인 공적자금 수혜자가 상환에 모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상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25년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현 세대에서 공적자금 문제를 투입부터 상환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투입에 5년이 소요되었으므로 25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할 경우 다음 세대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게 된다. 공적자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여 미래세대까지도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환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대간 분담은 배제하였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될 30조원의 상환은, 현재의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기금을 각각 청산기금으로 전환하여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산매각시점과 만기도래시점의 불일치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채권의 차환이나 자금의 차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보증채권 이자지급을 위해 재특으로부터 무이자로 융자받은 차입금 18조원은 재정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야 할 채권이면서 해결해야 할 대상이므로 상계처리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의 상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금융권에서 20조원 재정에서 49조원 부담

정부시안에서는 상환대책이 필요한 69조원 중 20조원은 금융권에서, 나머지 49조원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저축대부조합(S&L)의 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20%를 분담하였다. 이 비율을 우리의 경우에 적용하면 17조원(미회수분 69조원과 재특이자비용 18조원 합계의 20%)이나, IMF 위기 발생 당시 예금보험료의 적립수준이 매우 낮아 일상적인 예금보험기능까지도 공적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 부담을 다소 높게(23%) 책정하였다.

금융권 부담 20조원은 현재의 일반보험료와는 별도로 특별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특별보험료는 금융권 전체가 25년간 동일한 비율(예금의 0.1%)로 부담하게 된다. 은행권이 지난해 부담한 예금보험료 4천억원(보험료율 0.1%)은 당기순이익의 7.7% 수준이므로, 0.1%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담 49조원은 가칭 '공적자금상환기

금'을 신설하고 상환기금에서 부담하는 국채를 발행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른 국채원리금을 25년 이내에 상환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2조원(현재가치 기준)의 전입금이 필요하며, 전입금의 재원은 세수증대와 세출감축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세수증대는 조세감면 축소와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세출감축은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와 재특회계 지원규모 감축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한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여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상환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는 30% 내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OECD국가의 평균 국가채무비율(73%)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개최한 공적자금 관련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맡은 저명한 원로 경제학자는 공적자금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였다. 공적자금은 '거시적 · 장기적 ·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신속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시적인 문제점보다는 공적자금을 통한 거시적인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 ·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지난 5년의 공과보다는 앞으로의 5년, 10년에 더 관심을 두고 상환대책을 마련하되, 상환과정에서 분담주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부담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며, 위의 세 원칙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적자금에 관한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좋은 화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제기된 각계의 대안은 정부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취합되어 상환대책 정부최종안에 반영될 것이다. 공직

◀ 관련 자료 ▶

-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 2002. 6. 26(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참고)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



서 기 동
건설교통부 하천관리과장

우리나라는 기상학적으로 연중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되며, 매년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홍수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1991~2000) 연평균 피해액이 약 6천억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도 막대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엘리뇨 · 라니냐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해 방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개념의 수해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9년 12월 지속적인 하천정비 및 유역종합 치수계획의 수립 · 추진, 방재조직의 재정비 등 총 119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향후 10년간(2000~2009) 총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홍수에 강한 국토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올 홍수기 대비한 대책 마련

지난해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 홍수피해 규모는 예년에 비하여 적었으나, 집중호우로 총 아홉 차례의 수해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78명의 인명피해 및 4,48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인 하천 · 도로 · 주택 분야의 경우 6월말 현재 총 1,793건 중 2건을 제외한 1,791건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주택부문의 경우 겨울철에 수재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 모두 조기 완료한 바 있다.

피해 및 공사물량이 과다하여 아직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2건의 지방도 도로사업은 옹벽 및 교량 하부공사 등 주요공정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올해 홍수기에 대비하도록 기조치하였으며, 임시도로 · 교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해가 재발

정부는 올 홍수기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2007년 하천개수율 100% 달성을 위한 개수사업 추진, 하천뿐 아니라 댐 · 조절지 등이 적정역할을 하도록 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예보 시스템의 과학화 등 '중장기 수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우기 전까지 진행중인 치수사업을 일단계 마무리하여 올해 홍수에 대응하도록 하며, 수해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는 취약구간에는 현장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고 집중호우시에는 중장비 및 관리 인원을 상주시키도록 지자체 및 전체 산하기관에 조치한 바 있다.

또한 하천 제방관리실태 및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 지장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우기 전까지 보수 · 보강 및 철거 조치하도록 하였고, 공항 · 도로 · 철도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문별 수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현장 등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장마철에 토사가 유실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토사유실 방지대책 · 배수로 사전점검 등 종합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홍수예보시설을 종합 점검하고 지방 5개 홍수통제소 및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기관 합동 홍수대비 모의훈련을 5월말에 실시한 바 있다.

6월 15일부터 10월 15일의 홍수기중에는 강우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본부 및 산하기관에 '홍수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중이며, 취약지에는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를 확보 비치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중에 있다.

중장기 수해 예방대책 추진

정부는 홍수에 강한 국토를 건설하기 위해 중장기 수해 예방대책을 마련,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 2007년까지 하천개수율 100%를 완성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말 현재 하천개수가 필요한 총 하천연장 3만6,660km 중 약 77%인 2만8,213km를 개수하였고, 나머지 8,447km도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계치수사업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치수사업에 매년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하천개수율이 저조하고 매년 하천부문 홍수피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2급하천의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의 투자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표> 하천개수 현황 및 계획

(단위 : km, %)

	개수필요 연 장	2001년말		2007년까지(계획)	
		연 장	개수율	연 장	개수율
국가하천	2,985	2,836	95	149	5
지방1급하천	1,218	1,099	90	119	10
지방2급하천	32,457	24,278	75	8,179	25
합 계	36,660	28,213	77	8,447	23

국고보조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그동안 하천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치수사업만으로는 더 이상의 홍수방지에 한계가 있기에 정부는 선(線) 개념의 치수사업에서 면(面) 개념의 보다 확대된 치수사업 개념으로 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유역내에 발생하는 홍수를 하천이 모두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홍수조절용 댐 · 조절지 · 유수지 등 기타 홍수방어 시설물간에 적정 역할을 분담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홍수를 방어하도록 하는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01년 「하천법」을 개정하여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삼은 바 있으며, 현재 전국 주요 14개 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중이다.

셋째, 홍수예보 시스템을 확충하고 과학화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한강 · 낙동강 · 금강 · 섬진강 · 영산강 등 전국 주요 13대 하천에 대하여 강우시 주요 지점의 하천수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홍수예보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최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내 하천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중랑천 · 안양천 등 주요 도시하천에 대해서도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다. 올해말까지 왕숙천 · 지석천 · 금호강 등 7대 도시하천에 대해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2~3년간의 시험운영과 자료축적을 거쳐 홍수예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예보시설의 현대화 사업, 수문관측시설의 확충, 지능형 홍수예보 프로그램의 도입, 강우레이더의 추가설치 등을 통하여 홍수예보의 신속도 및 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넷째, 홍수조절용 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양강댐 등 전국적으로 총 14개의 다목적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총 22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홍수조절용 댐이 전무한 임진강을 비롯하여 수계별로 향후 안정적인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다목적댐의 지속적인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댐 건설은 댐 건설지역의 경제활동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지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댐 건설 장기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에 입각하여 중소규모의 꼭 필요한 규모로 지역의 이해를 얻어 친환경적인 댐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자연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한 재해는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최소화시키며, 인간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성 수해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나, 국민 모두가 자기집 주변의 축대 · 하수도 등 홍수에 취약한 부분을 살펴보고 정비하는 등 국민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도 잊지 않아야겠다.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복지제도
-근로자복지 증진 기본계획(2002~2006)



심 경 우
노동부 근로복지과장

정부는 지난 6월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 근로자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근로자복지 증진 기본계획(2002~2006)'을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 상황과 필요에 따라 수립된 단편적 대책과 달리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향후 5년간 근로자복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느는 등 노동환경 크게 달라져

'근로자복지 증진 기본계획'은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노동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근로자복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노동환경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가 및 기업의 고용관행 변화로 인해 한시적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보험 또는 복지로부터 소외된 생산계층의 증가를 의미한다.

둘째,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이다. 이미 40.3%를 넘어서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생산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사회의 세대재생산 기능을 갖고 있기에 특별한 복지적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해진다. 이와 함께 고령사회화의 진전은 우리 사회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이다. 2001년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고, 2014년에는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전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에 따른 소득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 능력 있는 이들의 지속적인 생산적 사

정부는, 향후 5년간 근로자복지 정책의 비전을 담은 '근로자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새세대 근로자의 의식 변화 등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회참여 기회 확충 등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층의 세대변화로 인한 삶의 인식변화 또한 근로자복지의 재구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다양한 개성을 갖는 새세대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속되고 있고,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체육 · 문화 · 여가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근로자복지 기본계획은 이러한 노동환경 변화와 근로자의 인식변화에 부응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 근로자복지제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문화 · 여가 욕구 등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한 대책을 포함함으로써 과거의 의식주 위주의 생계형 복지제도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근로자복지의 지평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 증진 기본계획' 마련

'근로자복지 증진 기본계획'은 몇 가지 중요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담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

이 계획은 복지 수혜자인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성을 지향한다.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하에서는 복지혜택이 기업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복지수혜의 불평등 및 대다수 근로자의 복지로부터의 소외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의 경우,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만이 혜택을 얻고 있는 점이 그 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flexible benefits system) 도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일명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으로 불리기도 하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는 근로자 자신이 필요한 복지혜택을 일정한도내에서 필요할 때 골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포춘』誌가 선정하는 500대 기업 중 75%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 IBM 등 일부 기업이 실시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해 플랜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전산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된 복지로 –직무발명보상제 법제화 추진

기본계획은 과거 시혜적 복지의 소모성을 제

거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상 발명으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는 최근 신기술개발 중 근로자의 직무발명 비중이 76.6%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신기술개발 의욕 고취 및 지식근로자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일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순수입액 중 15% 이상을 보상하고 있으나, 민간제조업의 경우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업체가 0.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직무발명보상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은 물론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문화 · 여가 욕구의 충족 지원

기본계획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와 함께 증가된 근로자의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욕구 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복지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및 여가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카드사와 연계하여 '근로자종합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양질의 민간 체육시설, 문화 및 레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시설투자가 지리적 접근성 제한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과 공공복지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콘도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 문화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 및 고령 근로자의 복지 강화

여성 및 고령 근로자에 대한 복지도 한층 확충할 계획이다.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령사회화의 진전과 정년 단축 등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퇴직후 생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 사회적응훈련 · 심리안정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퇴직준비 종합프로그램이 도입될 방침이며, 정년연장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이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 지원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된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사주 보유비율을 확대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3년 이상 보유후 인출시 적용되는 세율 9%를 인하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등 사회보장성 경비의 소

이 기본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된 복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다양한 문화 · 여가 욕구의 충족 지원, 여성 및 고령 근로자의 복지 강화,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득공제한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 · 혼례비 등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 소요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근로자생활안정 대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지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과 연계하여 근로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넓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복지 증진 기본계획'은 향후 우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중장기 플랜이다. 이는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해 노와 사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향후 보완 ·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주체인 근로자와 경영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용어해설 — 모성보호법

여성의 생리 ·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 자신의 기본적 권리이고,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인간존엄에 부합되는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 조치의 필요불가결성에 대해서는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모성보호를 규정한 법은 1844년 제정된 영국의 「공장법」으로 부인의 노동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심야작업을 금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모성보호 규정을 「근로기준법」 등으로 확립시켰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설과 이로 인한 비용의 사회분담화와 함께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제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주택시장 안정기조 정착에 주력



윤 성 원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서기관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 · 기업 · 노사관계 · 공공 부문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주택경기 또한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활황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위축되었던 주택수요가 회복단계에 접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추세가 지속되었고 특히, 지난해말부터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 현상이 심화되었다.

주택시장 안정 추세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주택시장 내적인 수급상황이 악화된 것과 함께 저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이 변화된 데 기인한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주택건설물량이 예년의 절반수준인 30~40만호 수준으로 줄어들어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재건축후 중대형 주택으로 바뀌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집중되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택시장 외적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여유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임대사업이 용이한 소형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고, 전세수요가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집값이 상승하였다. 특히, 생활편익시설과 학군 · 학원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강남지역의 경우 겨울방학을 틈타 주택수요가 집중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였다. 전세시장에서도 집주인들이 저금리로 인한 자산손실을 메우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함에 따라 전세물량이 줄어들어 수급불안이 심화된 결과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주택시장 안정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8만세대가 공급되어 수급 불균형이 차츰 해소되고 금리에 대한 바닥심리가 팽배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상승 압력요인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1월 8일과 3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 걸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첫째, 투기를 억제하여 과열현상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였다.

수도권의 82개 아파트단지의 불법 분양권 거래자 1,785명에 대해 세금탈루액 30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매년 1회 고시하던 아파트 양도세 기준시가를 수시조정하기로 하고 4월 3일에 전국적으로 9.7%(서울 16.5%) 상향조정하여 고시하였다. 또한 4월 19일에는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 분양주택의 50%를 만 35세 이상인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분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9년부터 전면 허용된 분양권 전매제도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계약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로 하고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중에 있다.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방식에 대해 주택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선착순 분양을 통해 과열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재건축에 대해서도 시기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 착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또한 대폭 확충하였다.

연리 3%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는 영세민 전세자금의 경우 종전에는 보증금 3,500만원 이하 세입자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5천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 11일에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왔다. 집값의 70%까지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에도 신규주택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주택 구입시에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거치조건 또한 1년 거치 19년 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완화하였다.

셋째, 수급불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데도 노력하여 왔다.

올해 안에 수도권 33만호 등 전국적으로 총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12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여 내년부터 총 10만호의 주택건설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또한 대폭 늘리도록 하였다.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올해 안에 5만2,500호를 건설하고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00만호를 건

설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전체 주택의 3.4%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대책에 힘입어 4월부터는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 등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투기수요가 억제되어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0.5~2% 하락하는 등 안정요인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급상황을 보면, 올해 55만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총 78만세대의 입주물량이 공급되면서 불균형 현상이 차츰 해소되고 금리에 대한 바닥심리가 팽배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상승 압력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또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개포지구 등에 대해 용적률이 강화되면서 하반기에는 투자수요가 상반기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파트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의 경우 가을 이사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지적 · 계절적인 불안요인 또한 잠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짝수해로 전월세계약 갱신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 사정에 따라서는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는 등 과열현상이 재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충 및 과열현상 방지로 안정기조 정착에 주력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지적 과열현상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안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55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동향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총 25만6천호를 건설하여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하는 호전세를 지속하고 있어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무난하게 올해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주택공

<표 1> 수도권 중장기 공공택지 수급계획

(단위 : 만평)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 계
택지지구 지정	450	420	420	420	420	2,130
공공택지 공급	600	570	570	570	570	2,880

<표 2>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단위 : 만호)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14~15평	2.4	2.4	2.4	3	10	3	3	3.6	3.6	3.6	30
16~18평	2.4	2.4	2.4	3	3	3	3	3.6	3.6	3.6	30
19~20평	3.2	3.2	3.2	4	3	4	4	4.8	4.8	4.8	40
물 량	8	8	8	10	4	10	10	12	12	12	100

올해 안에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 55만호를 건설하고, 중장기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하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시장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국지적 과열현상도 방지해 나갈 것이다.

급 확충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업체의 공급의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투기억제책도 과열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급의욕의 위축을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총 500만호를 건설하여 2012년에 주택보급률 115%를 달성할 계획이며, 수도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 153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6년에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 2,13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2,88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국민임대주택을 100만호 건설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9조7천억원 등 총 31조원의 자금과 소요택지 2,400만평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지역별·평형별 세부 건설계획과 재원 및 택지 확보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넷째, 최근의 주택가격 안정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국지적인 과열현상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가을 이사철에 대비하여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택가격과 거래상황을 분석하는 등 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과열현상이 재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양도세 추징 등의 투기억제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함과 아울러 주택공급을 확충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특히 200만호 건설계획을 통해 폭등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주택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되어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정착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 관련 자료 ▶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향후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마련」, 2002. 7. 4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 현황」, 2002. 4. 12

※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참고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옥 화 영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IMF 관리체제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약 2만여개 이상 증가하여 약 8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고 한다. 국내 가맹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45조원, 가맹본부는 1,500여개, 가맹점은 12만여개이며,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종도 전통적인 외식업 · 소매업뿐만 아니라 학원 · 카센터 · 이발 등 서비스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에 관해서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의해 규제되었으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를 그럴 듯하게 속이는 행위가 가능하였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상 공정거래법을 완화하여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맹사업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에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가맹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002년 5월 13일 제정 · 공포하였다. 동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당사자의 준수원칙을 규정

가맹사업의 양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양 거래당사자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가맹본부는 계속적인 품질향상과 판매기법의 개발, 가맹점에 소요되는 설비 · 물품 및 용역의 저렴한 공급,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 법은 거래당사자의 준수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정보공개의무 부과, 허위 · 과장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성장과 명성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제시한 품질기준의 준수, 가맹계약서상 권리의 무단 양도 및 영업기술의 공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의무 부과와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일부의 가맹본부가 독특한 노하우나 제품의 개발기술 없이 일순간에 실 • 퇴직자를 미혹시키는 허위 • 과장된 가맹점모집 광고를 통해 가맹비만 챙기고 도주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선량한 가맹점들을 울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시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를 작성 •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우량한 가맹본부를 구별하고 미리 해당 가맹본부의 영업실적 · 거래조건 · 거래중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모집 광고를 하거나 가맹희망자와 모집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허위 · 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거래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누락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 · 수익 등 과거 수익상황이나 예상 수익상황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그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은 허위 • 과장 정보를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를 허위 • 과장되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즉, 허위 • 과장된 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장치 마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계약의 체결단계 · 거래단계 · 거래종료단계에 걸쳐 마련되어 있다.

먼저, 계약체결단계의 경우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체결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맹금 최초 수령일 이전에 계약서를 가맹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주요 계약사항을 법정화하고 있으며, 계약서 등 관련문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둘째, 거래단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내용으로는 가맹계약 기간중 상품 · 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을 거절하는 행위, 상품 및 용역 가격이나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을 구속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으며 위의 행위에 대해 시행령에서 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가맹계약의 종료단계에 대해 먼저, 가맹계약의 종료사실을 계약만료일 90일 전에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도록 절차를 제한하였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자단체에 가맹사업당사자의 분쟁조정기구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의뢰한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며,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 · 당사자가 조서에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 이익대표 3인, 가맹점 이익대표 3인 등 계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원을 위촉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을 공익대표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또 분쟁당사자, 분쟁당사자의 친족 및 자문 · 고문 · 대리인 등에 대해 위원의 除斥 · 忌避 및 回避 사유를 규정하였다.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설치 근거 마련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 전반에 관련되어 극히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전문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맹점주는 실 · 퇴직자와 주부들로서 자금관계상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1년 3월 코리아리서치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가맹점의 86%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전문상담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사의 자격요건 · 업무 · 등록 및 등록갱신 · 책임 등을 규정하였다.

사건처리 절차 및 벌칙조항 명시

사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건처리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위원회 상정 및 운영절차, 불복의 訴의 관할, 손해배상제도 등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고 있다.

둘째,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가맹사업거래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행위금지명령 이외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또는 수정, 가맹금의 반환,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등 가맹점의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였고,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과징금은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벌칙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법 제정으로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과정의 공정성이 확립되고, 벤처 및 아이디어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며, 실 · 퇴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업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을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둘째, 과태료 부과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조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행위, 심판정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한 행위, 수익상황을 설명 · 광고하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셋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양벌하여 각각 벌금형을 과하고 있다.

넷째,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자,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을 아니한 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있다.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과정의 공정성 확립 기대

가맹사업에 법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이 제정되는 경우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과정의 공정성이 확립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맹본부는 상품 및 노하우, 판매기법의 개발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고 실 · 퇴직자 등 일반서민들은 안심하고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가맹사업은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맹사업은 적은 자본으로 설립하여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벤처 및 아이디어 사업 등 중소기업의 육성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성숙기에 들어선 미국의 경우 아직도 가맹사업 매출액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연평균 3천개 이상의 신규 가맹점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실직자와 퇴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 각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러한 여건에 따라 가맹사업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져 가맹사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 관련 자료 ▶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입법예고」, 2002. 7. 15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참고)

포스트 월드컵 대책 <<

'업그레이드 코리아' 추진



정 은 보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
(ebjeong@mofe.go.kr)

2002 FIFA 한 · 일월드컵은 72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된 대회인 동시에 한 · 일 양국의 공동개최라는 점에서 준비과정에서부터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사실, 월드컵이 개막되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월드컵 붐이 조성되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월드컵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수출 및 투자 촉진하고 IT강국 이미지 확고히 하는 계기 돼

전세계에서 연인원 600억명이 이번 월드컵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천만장이 넘는 붉은색 티셔츠가 팔려나가는 등 월드컵 기간중에 발생한 경제적 효과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국민들의 자신감 회복 · 국가이미지 제고 · 경제적 성과의 거양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히딩크 감독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으로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축구뿐만 아니라 경제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더구나 월드컵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이 보여 준 열정과 질서의식은 전세계인에게 한국의 역동성과 시민의식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우리들 자신에게도 문화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해외 언론들이 이번 월드컵을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가이미지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이미지 제고는 피치社가 지난 6월 27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이례적으로 두 단계 상승시키는 결정을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우리나라 제품 및 기

월드컵 기간중 다국적기업 CEO 초청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출 및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IT기술을 활용한 개막행사 등을 통해 IT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다.

술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첨단기술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월드컵 기간중 해외 다국적기업 CEO 초청행사 및 수출상품 전시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출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주력기업들의 해외 이미지가 월드컵 기간중에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1]. 또한 이번 월드컵은 IT기술을 활용한 개막행사와 디지털방송 기술을 이용한 월드컵 중계 등을 통해 IT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효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2]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효과들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효과의 크기는 월드컵의 성과를 경제발전의 디딤돌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 및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월드컵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스트 월드컵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번 88올림픽 이후에 조성된 경제도약의 계기를 십분 활용하지 못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효과적인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 전반에 걸친 '업그레이드 코리아' 추진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쳐 '업그레이드 코리아(Upgrade Kore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국가 및 기업 경영에 '히딩크 리더십'으로 상징되는 덕목들을 접목함으로써 사회 전분야에 걸쳐 개방과 경쟁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하여 국민들간에는 '개방을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의 도입', '연고주의를 탈피한 경쟁원칙의 고수'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첩경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하여 국정에 있어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정부는 월드컵 기간중에 표출된 주체적 · 개방적 · 미래지향적 '興'의 문화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의 열정과 자신감을 사회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국민통합의 원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능력발휘와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 지방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일본 ·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

정부는 경제전반에 개방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경쟁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기업경영관련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개방 및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우선, 기업경쟁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회계·공시 제도 강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도산제도 선진화 등 시장규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대폭 축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 ·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거래 방지 등 국제화 ·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공정경쟁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기업경영관련 시장환경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금융 · 자본 시장의 선진화 및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금융규제를 기관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는 등 금융규제시스템을 선진화하고, 201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외환제도를 자유화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을 아시아 3대 시장(일본 · 싱가포르 · 홍콩)에 버금가는 동북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할 것이다. 노동시장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련 법 · 제도를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노조의 불법파업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함으로써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개방 및 국제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개방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및 양자투자협정(BIT)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경제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세제지원, 주택 · 의료 · 교육 서비스 등 경영 및 생활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 · 일 투자협정의 발효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진출 기반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기초체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정부는 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IT 및 물류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우수인력을 양성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장기적인 산업발전 전략 및 신기술 개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일류 상품 및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수출품의 제값 받기를 달성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월드컵을 통해 구축된 다국적기업 CEO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테마별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월드컵을 통해 확보된 IT강국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동북아 IT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다. 이동통신 · 초고속인터넷 · 시스템 통합(SI), 디지털TV 등 IT분야 수출 유망품목들의 수출을 촉진하는 등 IT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정보인프라를 개도국에 적극 개방하여 동북아 정보유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월드컵 성과를 경제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국정 전반에 걸친 '업그레이드 코리아' 추진, 개방과 경쟁을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정착, 기초체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동북아 물류중심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인천공항의 활주로 · 화물터미널과 부산 · 광양항의 컨테이너 부두를 확충하고 배후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중심(hub) 공항 · 항만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철도 · 도로 연결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육상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높아진 점을 활용하여 항만 · 도로 등 SOC분야에 대한 외자유치 노력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할 것이다. 우선 정규 · 비정규 교육기관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완화하고 외국인학교의 설립요건 완화 등 외국인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를 위한 지원[3]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4]를 적극 시행해 나가는 동시에, 시 · 도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계층이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과 일반행정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가 반드시 경제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 중에는 경제위기에 빠진 나라들도 많고, 월드컵 개최 이후에 경제가 오히려 하강국면에 빠져든 나라들의 예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월드컵으로 인해 발생한 호기를 어떻게 경제발전으로 이어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이와 같은 대책들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기업들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월드컵을 통해 얻은 자신감 · 개방과 경쟁에 대한 확신과 같은 유 · 무형적인 자산을 내재화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적인 월드컵과 동시에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나경제

필자 주

1) 현대자동차의 일본내 인지도가 월드컵 전(2월) 32%에서 6월 67% 로 증가

2) 현대경제연구원은 월드컵 4강 진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소비진작효과 3조7,600억원, 국가브랜드 홍보 효과 7조7천억원,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 14조 7,600억원 등 모두 26조원으로 추정함.
이 밖에도 기업 및 국가의 차입비용 감소, 외국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자금의 유입 증가, 상품교역조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3) 외국대학과 공동연구프로그램 활성화, 외국인 교수 활용 보수 정부 지원, 영어진행 강의 확대 지원 등

4) 자율학교 지정확대 및 자립형사립고 활성화, 교과운영 · 재정운영 등 사립학교 자율확대, 학생선발권 등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

포스트 월드컵 대책 <<

수출 및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박 건 수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이번 월드컵은 4강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인 자긍심과 아울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월드컵을 계기로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 달라진 우리 경제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수출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양한 수출마케팅과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 펼쳐

정부는 이번 월드컵을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출마케팅과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우선, 세계일류상품 해외로드쇼(상하이 · 런던 · 파리) · 코리아 슈퍼엑스포 · 2002 월드패션 페어 · 우수 디자인 전시회 ·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 · 2002 한일공동패션쇼 등 11개의 다양한 수출마케팅 행사를 개최하여, 총 3,231개 업체와 해외바이어 1만5천여명을 포함하여 총 24만여명이 참관하였다. 해외에서는 현지유명인 참가와 문화행사를 병행함으로써 대대적인 한국 붐을 조성한 결과, 수출상담 24억달러, 수출계약 2억2천만달러, 기술교류 · 투자사업 제휴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록하였다.

또한 월드컵 기간중 다국적기업 CEO 등 54명을 초청하여 '對韓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주한 외국투자기업 등 600여명이 참가한 '서울투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초청 CEO의 투자현장 방문 및 면담 등을 주선하여 투자 프로젝트의 성사를 유도하고 기업간 제휴 강화에도 노력하여 방한후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실현 및 기투자 기업들의 증액 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월드컵 기간중 분출되었던 국민적 에너지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정부는 월드컵 기간중 세계일류상품 해외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마케팅과 다국적기업의 CEO를 초청하여 '對韓투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투자프로젝트의 조기실현 등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입각하여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 제도 · 관행 등 국정 전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포스트 월드컵 대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월드컵을 통해 표출된 국민적 에너지와 단결성을 국운융성과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위한 포스트 월드컵 대책 마련

정부는 월드컵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수출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브랜드 제고 및 자산화

월드컵의 성공을 경제선진화 분위기로 전환하고 높아진 코리아 브랜드를 자산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업자원부 · 경제단체 · 산업별단체 중심으로 '민 · 관 포스트 월드컵 대책위원회'(위원장: 산업자원부 차관)를 구성하여 경제선진화를 위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제품 · 기업 브랜드와 국가이미지 제고전략을 병행 추진하여 수출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브랜드경영 전문인력 양성, '브랜드경영 대상' 확대 등 기업의 브랜드 경영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일류상품의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 세계일류상품의 우수성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월드컵 성공을 활용한 수출동력 강화

월드컵 한국홍보를 활용하여 수출저변의 확대 및 수출상품의 고가화 전략을 추진하고 코리아 브랜드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올해에 수출증가율 10% 이상, 무역흑자 100억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신규 수출상품의 확대와 중소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중소 ·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초기 해외시장 개척 위험을 최소화하고 현지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력수출상품의 고가화 전략을 전기업에 확산하기 위해 품목별로 고가화 전략을 9월까지 마련하고 수출상품의 고가화를 위한 지원제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월드컵 열기가 높았던 지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 중남미 등에서의 전시회 개최와 시장개척단 파견에

주력하고 경제5단체 중심의 비즈니스 사절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올해 10월에 부산 아시안게임을 활용하여 생활용품 박람회 등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바이어 500여명을 초청하여 월드컵 개최도시에서 수출상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월드컵 성공을 외국인투자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전기로 활용하여 초청 다국적기업 CEO는 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 ·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초청 CEO와 정부 · 국내 기업 인사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 한국법인 지사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연내에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며,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이 초청한 기업인 5천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APEC 투자박람회(2002.9.9~12, 블라디보스톡) 등을 통해 세계일류 국가로의 발전 비전을 적극 홍보하고, 부품소재 · SOC 등 테마별 투자유치단 파견도 확대하여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제조업의 세계 일류산업화

월드컵으로 응집된 성숙한 국민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을 세계 일류산업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연평균 6%대의 성장동력을 가동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산 · 학 · 연 · 관이 참여하는 '장기산업발전전략기획단'을 구성하여 2010년의 산업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 · 철강 등 15개 산업별 로드맵(Roadmap)을 작성 · 추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일류상품 기술 및 브랜드의 확산을 위해 현재 220개인 세계일류상품을 하반기중에 80개를 추가 선정하고, 2005년까지 500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이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선정된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마케팅 · 기술개발 · 디자인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기초를 선진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의 기초가 되는 표준 · 인증 · 규격 · 시험분석 등을 선진기준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격 · 표준 등의 국제부합화 및 세계일류화를 촉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표준(KS)의 국제부합화율 100%를 달성하고 선진국가와의 인력 ·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CE(유럽) · UL(미국) 등 해외 유명규격을 획득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유통 · e-비지니스 · 물류 등 지식서비스산업의 세계일류화를 위해, e-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법률기반을 확보하고 전사적 자원관리(ERP) 등 e-비즈니스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매출액 대비 12.5% 수준인 물류비를 2006년까지 9%대로 절감하기 위한 '산업물류혁신 5개년 계획'을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유통 · 물류 선진화 기반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브랜드 제고 및 자산화, 월드컵 성공을 활용한 수출동력 강화, 외국인투자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 제조업의 세계 일류산업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마련하였다.

월드컵 위상에 상응한 국제협력 강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역량에 상응하는 선진 차원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통상협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기대와 요청에 부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제협력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수출일변도에서 탈피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여개 전략적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 대응구매 · 투자 · 에너지 · 서비스 협력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기존의 교역중심의 '통상사절단(Trade mission)'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경제사절단(Business mission)' 파견으로 전환하여 무역전시, 투자 · 기술 · 에너지 협력사업의 공동 발굴을 추진해 나가며 아울러, 미국 · 중국 · 일본 · EU 등 주요국별로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부상

세계경제의 3극 체제와 WTO · OECD 등 세계화 · 네트워크화 추세에 대비하여 글로벌 경쟁기반을 강화하고 월드컵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하여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Pride of Asia)'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 EU · 동북아 경제권 등 세계경제의 3극 체제에서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생산과 교역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생산 · 교역 등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 IT · 물류 · 정부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경제특구 · 자유무역지역 · 외국인투자촉진지역 · 산업공단지역 조성을 적절히 조화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 · 중 · 일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한 · 중 · 일 비즈니스 포럼'을 올해 10월에 개최하여 3국간 산업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어 월드컵 4강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였듯이, 정부도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번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일류 선진국가, '경제 8강'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포스트 월드컵 대책 <<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고 광 섭
정보통신부 기획예산담당관

우리나라는 월드컵 4위라는 세계 축구사에 일대 이변을 연출하며 세계 60억 인구를 한 달간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게 했던 한·일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월드컵 계기로 ‘IT강국 코리아’ 이미지 심어

한·일월드컵은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IT산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국민의 열정과 투지 · 결집력 등을 통해 우리는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대회 운영과 관리 · 홍보 등에 최첨단 IT기술이 접목되어 그야말로 IT월드컵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이번 월드컵을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이 아니라 ‘IT강국 코리아’의 진면목을 과시한 IT월드컵으로 승화시켰고 이를 통해 선진국 도약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하겠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IT 코리아의 이미지를 전세계인에게 심어주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개막식에서 IMT-2000 등 우리 IT기술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외국인이 공항 · 숙소 · 경기장 등 동선별로 초고속인터넷 · 디지털 TV · 이동통신기술 등 우수 IT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외신기자에게는 우리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정도를 취재 · 보도할 수 있도록 IT테마투어를 실시하고 취재가이드북을 지원하는 한편, 아시아 IT장관회의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UN총회 기조연설과 같은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등 짜임새 있는 IT기술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홍보전략이 주효하여 국내외 언론이 우리 IT기술의 우수성을 격찬할 만큼 IT 코리아의 이미지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한 · 일 월드컵은, '초고속인터넷은 한국이 세계최고' 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디지털TV 산업의 내수기반을 다지는 한편, 무선통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를 선보여 세계 최초 · 최고의 3세대 이동통신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첫째, 그동안 OECD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으로부터 인정받아 왔던 '초고속인터넷은 한국이 세계최고' 라는 사실을 외국인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하였고, 초고속인터넷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인터넷 PC방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둘째, 월드컵 경기를 HDTV(고선명TV)로 제작 중계하면서 디지털TV 산업의 내수기반이 다져져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무선통신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여 세계 최초 · 최고의 3세대 이동통신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IT산업 도약 위한 포스트 월드컵 대책 마련

이처럼 한·일월드컵을 통해 얻은 국민적 자신감과 국가이미지 개선효과를 토대로 IT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는 높아진 'IT강국 코리아' 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IT산업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IT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

첫째, IT 월드컵의 성과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 · 관이 협력하여 IT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동유럽(9월), 중남미(10월), 중국 및 중동(11월) 등 신흥시장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로드쇼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홍보를 추진하여 'IT하면 코리아' 라는 이미지를 유지 ·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IT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종합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IT수출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독려하며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 장관과 경제계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 · 관합동 IT산업 해외진출 추진위원회' 를 구성(7월)하였다.

한편,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 등 이동통신 수출지원 전담조직인 이동통신수출진흥센터의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여 IT산업 전반의 수출지원기구로 개편하고 2005년까지 해외 현지의 마케팅채널을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미국 · 일본 · 중국 등 주요국가의 한민족 IT전문가대회를 개최하고 신흥진출 국가 IT인력에 대한 국내유학사업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IT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국가별 · 상품별로 차별화된 수출확대 전략 추진

매년 산 · 학 · 연 · 관 합동으로 구성된 '일등상품선정위원회' 에서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해외마케팅을 총력 지원함으로써, 중국 · 동남아시아 · 중동 ·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선점하는 세계 일등상품으로 개발할 것이다.

우선, 현재 비교경쟁 우위를 갖춘 수출선도품목 및 국제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거나 전체 IT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잠재적 수

출 유망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국가별 · 상품별로 차별화된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유망 품목으로는 CDMA · Broadband Internet(초고속인터넷) · 디지털TV · TFT-LCD(박막 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 · 온라인 게임 · 위성방송수신기 · 반도체 · PDA(개인 휴대 정보단말기) · SI(시스템통합) ·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등을 들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 인터넷 PC방 등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는 일류 수출상품화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SI ·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등 다른 나라와 경합하고 있는 분야는 월드컵을 통해 확보한 국가이미지 개선효과를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디지털TV의 국내 조기보급 위한 지원 강화

월드컵을 계기로 확보한 디지털TV의 상대적 우위를 수출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TV의 국내 조기보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은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방송사와 가전사가 협력하여 프로야구를 HDTV로 제작 · 중계(3/4분기)하고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社)에 HDTV 전용채널을 신설(4/4분기)하며, 방송사의 HDTV 의무방영시간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수도권 지역의 디지털지상파 TV방송 시청지역 확대를 위하여 남산중계소(10월) 및 간이중계소를 조기에 설치하고 광역시 소재 지역방송사의 디지털방송 전환을 촉진하여 디지털방송 가시청권역을 조속히 지방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방송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차세대 지능형 'SmarTV'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디지털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것이다. SmarTV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실감나는 맞춤형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방송이다.

미국의 경우 위성방송사인 DirecTV에서 HD전용채널인 HDNet을 운용하면서 HDTV의 보급 ·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HDNet은 메이저리그 · 아이스하키 · 미식축구 등의 스포츠, 각종 엔터테인먼트 및 ABC · NBC의 HD프로그램을 하루 16시간 방송하고 있다.

3세대 이동통신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2002년 5월말 현재 83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대중화에 성공한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CDMA 2000은 미국 · 일본 · 루마니아 · 중국 등 21개국 36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프라를 구축중이고 사용인구도 올해말 3,700만명, 2003년말 8천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월드컵을 계기로 높아진 이동통신강국 이미지를 토대로 확장되고 있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출대상 국가에 3세대 이동통신 운용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스템 구축기술 전수 등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며, 2세대 중심의 CDMA 벨트를 3세대 기반으로 발전시킴으로써 CDMA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인터넷 중심국가화 추진

'아 · 태 지역 정보통신 연구망(APII

정부는, IT기업의 해외진출 종합지원체계 구축, IT수출 10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디지털TV의 국내 조기보급 지원, 3세대 이동통신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포스트월드컵 IT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Testbed)'을 확대 개편하는 등 동아시아 인터넷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하여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인터넷 중심국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기존의 망이 구축된 아·태지역 정보통신 연구망을 기반으로 아·태지역을 하나의 정보공동체로 잇는 국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에 인터넷 중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용망 허브화를 추진할 것이다.

국제협력과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주도적으로 추진

월드컵을 계기로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국제협력과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하여 아시아 IT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한 · 중 · 일 IT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PEC 전자정부 심포지엄(7월) 개최 및 주한외교사절 IT포럼(11월)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IT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8월중에 중국 · 몽골 · 우즈베키스탄 등 20여개국에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하고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트랜스 유라시아 네트워크(TEIN)와 아·태지역 정보통신 연구망을 개발도상국에 개방하여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산 · 학 · 연 · 관으로 구성된 IT 기술 · 정책 자문단을 파견하여 우리 정보화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IT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일 월드컵을 통해 얻은 'IT강국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토대로 월드컵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세계 IT 중심국가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 관련 자료 ▶

- 정보통신부 기획예산담당관, 「정통부, IT월드컵 후속조치 마련」, 2002. 6. 26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참고)

포스트 월드컵 대책 <<

스포츠·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



김 철 민
문화관광부 공보관실 서기관

전 세계를 열정과 환희,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2002 FIFA 한·일 월드컵축구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96년 5월 3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월드컵 개최가 결정되던 순간부터 폐막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그동안 중앙부처는 물론 개최도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은 세계적 수준과 규모의 축구경기장을 10개나 새로 건설하였고, 교통 · 숙박 · 안전 ·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선수들과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월드컵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다. 그 결과 2002 FIFA 월드컵축구대회는 전세계 모든 언론과 지구촌 가족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월드컵 성공의 분위기를 국운융성의 원동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에서 검토 · 추진되고 있는 '포스트 월드컵 : 스포츠 · 문화 · 관광 산업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이다.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

스포츠를 산업화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체육용품 · 체육시설 · 스포츠서비스업 분야 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체육용품의 경우 세계일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포츠용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스포츠용품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용품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 최신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오는 9월 '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골프장 · 스키장 · 헬스센터 · 운동장 · 체육관 등 체육시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골프장 ·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화하고, 축구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산업이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수용태세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스키장 건설시 부지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간 체육시설업의 규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최도시별 월드컵경기장의 사후 활용 강화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7월중에 종합운영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각 개최도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10개 월드컵경기장의 사후 활용은 일차적 기능인 경기시설로써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및 휴식 공간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각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 문화 · 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과 대형할인점 · 자동차 전용극장 · 복합상영관 ·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스포츠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구·야구·골프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종목의 우수선수 양성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서비스업 전문인력을 연간 200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산업정보망'을 구축하여 월드컵 관람객 연락망 등 최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련업체에 제공하여 스포츠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축구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CU@K리그', 지난 터키와의 3 · 4위전이 있던 날 응원석의 '붉은 악마'는 이제 월드컵을 통해 확인된 축구사랑을 K리그로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국내 프로리그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내 스포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 · 대구 · 인천 · 광주 · 서귀포 등 월드컵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축구단이 없는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6개 구단을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붉은 악마' 등 응원단을 프로구단의 고정팬으로 확보하고 스포츠마케팅 활동여건을 개선한다면 'K리그'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축구붐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2002 FIFA 월드컵 기념 전국축구대회(가칭)'를 창설하고, '한 · 중 · 일 3국 프로축구 우수클럽 대항전(가칭)'과 같은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남북축구대회의 개최는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밖에 중 · 장기 축구발전을 위해 유소년축구와 동호인축구 그리고 여자축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수용태세를 국제수준으로 개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먼저 월드컵 기간중 도입하였던 중 · 저가 숙박시설인 월드인(worldinn)의 숙박예약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홈스테이(home stay)와 템플스테이(temple stay)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속 관리 ·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월드컵 기간중 우리 문화의 정신적 분위기를 소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신촌 봉원사의 영산재 공연과 연계하는 등 본격적인 문화 ·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8천객실 규모의 숙박문화단지를 조성하고 그동안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보완하는 한편, 시한도 2005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 대규모 관광수용능력을 갖춘 디즈니랜드와 같은 국제적 수준의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관광개발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광호텔 ·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을 외국인이 이용할 때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종합휴양시설 · 휴양콘도미니엄 · 국제회의시설 등에 산업용전력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브랜드 이미지 구축사업 추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의 역동성(Dynamic Korea)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위하여 전통문화 소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아리랑 TV를 통한 권역별 국가브랜드 제고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외수출관련 국내 우수기업 소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기업브랜드 이미지와 '코리아' 국가 브랜드와의 연계사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말까지 외국인 대상 영어전용 FM라디오 전용채널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이번 월드컵이 '안전월드컵 · 문화월드컵 · IT월드컵'에 초점을 맞춰 각각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를 CNN · 스타TV 등 유명매체를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한국방문 잠재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 중국 · 동남아 · 러시아 등 월드컵에 참여하였거나 관심을 보였던 지역들을 대상으로 관광유치단을 파견하여 이들의 관심이 부산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특히, 대회기간중 방한객이 증가하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증가한 유럽 · 중남미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 지방정부 · 한국관광공사 · 업계 등이 참여하는 홍보전략팀을 구성 · 운영할 예정이다.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분위기를 활용하여 올해 7월 독일에서 열린 한국문화 종합소개 행사를 시작으로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9월부터 11월까지는 한국문화 종합소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세계 각지역에서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월드컵플라자를 활용한 공연예술 국제아트마켓을 창설 · 운영하는 등 문화한국의 이미지 확산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 동남아 등지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다. 동경국제게임쇼 · 북경국제도서전 등 아시아지역 해외견본시 참가를 지원하고, 우수 콘텐츠와 방송프로그램의 재제작을 지원하며 중국 · 대만 · 일본 등의 외국 고정방송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확보하여 한국 가요 · 가수 등 국내 대중음악을 소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 '국제스포츠산업박람회' 개최, 민간체육시설업의 규제 완화,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 사후활용방안 모색, 경쟁력 있는 종목의 우수선수 양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또 아시아문화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교류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아시아음악산업세미나를 개최하며,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한류 관광상품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류열풍을 확산하기 위한 장기전략으로 동대문 패션타운 등 한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관광지로서의 조건을 갖춘 지역을 한류전파의 메카로 개발하여 한류거점지역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 우리가 일구어낸 소중하고 값진 자산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개막식이 열린 서울에서부터 한반도의 끝 마라도까지 울려 퍼진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함께 울고 기뻐하며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던 자신감과 끝없는 긍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안에 남겨진 무언의 자신감과 넘치는 에너지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전체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업계, 일반 국민들이 월드컵 때와 같은 단합된 마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후속계획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월드컵 4강에 걸맞는 발전을 문화 · 관광 분야에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용어해설

시스템통합 (SI : System Integration)

아웃소싱을 서비스하는 벤더(Vendor)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컴퓨터 · 주변기기 · 각종 소프트웨어 · 통신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인력조달에 책임을 짐으로써 시스템 개발에 토털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IBM社가 1990년대 이를 기업의 기본방침으로 정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기업의 흡수합병(M&A)이 확산되면서 시스템통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시스템통합은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고, 상위수준의 시스템 계획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설계나 소프트웨어 · 통신 · 하드웨어 등의 통합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경제정보 분석

국내 경제동향 106

국내 경제이슈 115
금융부문,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바뀌었나

세계 경제동향 124

세계 경제이슈 131
중국 국유기업 개혁, 성공할까

국내 경제동향

국내경기는 상반기의 회복세를 꾸준히 유지하며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다. 지난 2/4분기부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향후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 역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경기지표들의 회복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경제성장의 3대 엔진인 소비·투자·수출의 동반증가세가 나타나자 국내외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가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수준은 오히려 3%미만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상충관계가 높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정책의 2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의 현황이 바람직하다고도 평가했다. 한편 경기회복과 더불어 고용이 꾸준히 늘어 6월 실업률이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7%까지 떨어졌고, 임금은 지난해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임금의 상승효과와 고용증가는 가계의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소비증가세에 힘을 보탤 것이다.

그러나 2/4분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회복 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향후 국내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저하되어 주가와 금리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의 주요 변수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같은 부정적 대외여건과 물가안정이라는 긍정적 대내여건의 공존을 반영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현재의 콜금리수준을 동결시키기로 결정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향후 경기회복의 지속여부는 미국의 경제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꾸준한 회복세 유지하고 있는 국내경기

2/4분기부터 내수와 수출의 동반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와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경기회복세는 1/4분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내 · 외수가 모두 늘면서 생산과 출하 역시 1/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1월부터 다섯 달 연속해서 출하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초과하자 3월부터 재고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재고조정이 아직 진행중이다.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고가 줄고 있음은 재고순환 국면상 경기가 확장국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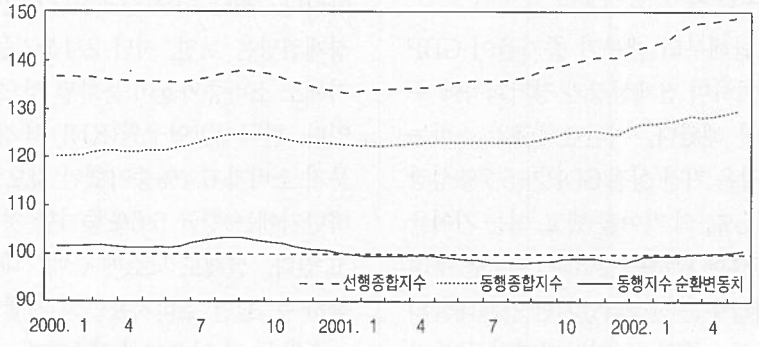
는 아직 회복국면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출하증가 – 재고감소'로 지난 5월에는 재고율(재고지수/출하지수)이 사상 최저치인 67.4%까지 떨어진 것은 현재의 재고율 하락세가 한계수준에 이르러 앞으로는 재고확충을 위한 생산증가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현재와 달리 앞으로 재고와 생산이 동시에 증가한다면, 이는 재고순환 국면상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난 5월에 발표된 경기지수들 역시 국내경기의 회복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의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경기동행지수가 올 1월 126.5에서 지난 5월 129.7로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1] 또한 현재의 경기국면 및 전환점 판단에 유용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3월부터 경기상승과 하강의 판단기준점인 100을 넘어 5월 현재 100.5를 기록중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기간을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대체로 경기정점기에는 104내외를, 저점기에는 97내외의 수준을 유지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내경기는 지난 2000년 8월 정점에 달한 후 다시 하강해 2001년 8월 저점을 통과했고, 현재는 다시 정점을 향해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평균 약 6개월 후의 경기예측지표인 경기선행지수도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 사이 16개월간 지난해 12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전망이 계속 긍정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회복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에도 반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2/4분기 기업경기조사」에 의하면, 올 2/4분기에는 매출 · 생산 · 가동률 · 설비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가 기준치(100)를 크게 넘어섰으며, 3/4분기 전

경제가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수준은 오히려 3% 미만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상충관계가 높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정책의 2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주요 경기지수의 추이



자료: 통계청

망에서도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이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경련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2] 114.6은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3~5월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지만, 아직 경기호조세가 지속중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은행의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전망 소비자태도지수도 전분기에 이어 기준치인 100 이상을 기록해 기업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경기전망도 여전히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과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전망과 각종 경제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에 비해 다소 약화되기는 했으나 이는 최근 미국의 주가하락, 회계부실 파문, 경기회복세 둔화 등 대외적인 악재 출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국내경제의 기초여건상 하반기 국내경기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경제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는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둔화조짐 보인 소비, 증가세는 아직 지속

소비는 지난해부터 매분기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상회하며 경제성장과 경기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1/4분기 소비는 8% 증가해 같은 기간 실질 GDP가 5.7%성장하는 데 있어 5%p의 기여를 했고, 이는 기여율로 보면 86.7%에 달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려의 정도가 상당수준 진정되었지만 가계대출의 급증과 부동산 · 주식 등 자산가격의 급등과 더불어 나타난 소비증가로 인해 지난 1/4분기 시중에서는 향후 경기과열과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한편 소비증가는 저축감소를 초래해, 지난해 총저축률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30% 미만인 29.9%까지 떨어졌고 올 1/4분기 역시 26.1%의 낮은 저축률을 기록했다. 투자재원인 저축의 감소는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자의 급감으로 아직까지 총저축률은 총투자율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물가안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은 실질임금과 고용증가를 통해 가계부문의 실질구매력을 높였고,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富의 효과와 더불어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상승을 통해 소비증가를 유도했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이자소득이 감소하자 저축보다는 소비동기가 커졌고, 유통 및 내구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무이자 할부판매도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위험이 높아진 기업대출을 기피하던 금융기관들의 빠른 가계대출 증가 역시 소비를 확대시켰고,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요 내구재(승용차,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역시 소비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증가의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최근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의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지난 2/4분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소비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지난 2/4분기 소비가 6.4%증가했던 것으로 추정했고, 하반기에는 평균 5.6%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도소매 판매 · 내수용 소비재 출하 등 월별 소비지표들의 전월비 증가율도 4, 5월 두 달 연속해서 감소했다. 정부의 가계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관련 규제 강화, 9월 특별소비세 인하조치의 폐지,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은 향후 소비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지난해 경기부진 속에서 소비를 견인하였던 대출과 할부신용은 소비자들의 원금 및 이자상환부담으로 돌아와 미래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미래소비를 억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경기회복 과정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금리상승은 이자상환부담을 보다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소비둔화 요인들 못지 않게 증가요인들이 공존하고 있어 소비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업률이 2.7%까지 떨어질 정도로 고용이 늘고 물가가 3% 아래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명목임금이 올라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있어 가계구매력이 유지되고 있다. 4, 5월 잠시 주춤해 보이던 통계청의 소비자기대지수가 6월 들어 다시 사상최고치(110.6)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의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향후 소비지출 계획이 계속 늘고 있어 소비심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2/4분기부터 증가율이 다시 높아진 데 따른 통계적 반락을 고려한다면 소비증가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건설투자의 둔화 및 설비투자의 완만한 증가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지난해 1.7%감소했던 총투자가 올해초부터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와 함께 내수를 구성하고 있는 총투자는 건설과 설비투자로 나뉘는데, 지난해 건설투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해 총투자가 1.7%감소한 것과는 달리 최근 총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모두 증가세를 보여 1/4분기 동안 6.5% 증가했다. 한편 지난 4,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의 투자관련 지표들을 볼 때 1/4분기 높은 증가세를 보인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반면, 설비투자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5.8% 성장했고, 지난 1/4분기에도 10.1% 증가해 건설현장에서는 오랜만에 자재 및 인력 난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 1/4분기 각각 85.6%, 102.1%증가했던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4월 들어 76%, 31.3%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5월에는 국내건설수주가 2.6%증가하는데 그치고,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국내건설기성액은 10개월만에 감소세(−0.6%)로 전환되는 등 2/4분기부터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및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시행중인 가운데, 지난해 주택보급률(98.3%)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다세대주택 건설의 급증세[3]

2/4분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회복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향후 국내경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저하되어 주가와 금리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하반기 국내경기 회복의 주요 변수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 진정되고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되던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아직 8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외환위기 이후의 공급감소로 주택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저금리기조도 유지되고 있어 건설투자의 증가여력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 역시 외환위기 이후 4년간 약 90만호의 주택공급 부족이 발생했다고 보고 2006년까지 이의 해소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IT부문의 경기부진으로 9.8%감소했던 설비투자는 지난 1/4분기 3.2% 증가해 증가세로 반전했고, 지난 4~5월중에는 국민계정의 설비투자와 관련이 깊은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이 1/4분기 2.2%에서 3.7%로 상승해 2/4분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지난해의 부진에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가 있지만 향후 설비투자의 증가를 뒷받침해 줄 조짐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재고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재고율이 사상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고, 생산증가율과 생산능력 증가율의 차인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지난 3월부터 계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생산증가와 그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추세로 볼 때 수출에 대한 후행성이 큰 설비투자의 특성상 2/4분기부터 시작된 완만한 수출증가 역시 설비투자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중금리가 낮고 기업들의 부실위험이 낮아져 투자자본 조달비용이 낮아진 데다 기업들의 사내유보자금 또한 넉넉해 투자여건도 좋아지고 있다. 지표상으로도 설비투자관련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액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본격적인 증가는 예상보다 더딜 수도 있다. 아직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과거 설비투자가 활발하던 시기의 일반적 수준인 80%에 못 미치는 76~77%에 머물러 있어, 기업들의 생산증가가 설비투자의 확대보다는 기존 유휴설비의 가동률 증가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투자신중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미국경제의 불안과 그에 따른 수출부진은 향후 설비투자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완만한 증가세 유지하고 있는 수출

수출은 4월부터 지난 13개월간의 감소세를 마감하고 증가세로 전환되어 6월까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은 소비 · 투자 등 내수와 함께 외수인 수출의 동반증가로 최종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은 내수 위주로 이루어진 지난해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등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상반기 수출은 아직 지난해 상반기보다 3% 적은 수준이지만, 지난 2/4분기부터는 컴퓨터 · 반도체 · 무선통신기기 등 수출주력상품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지난 네 분기 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5.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수출이 15.2%감소한 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에도 불구하고 올 6월

수출이 4, 5월 평균 증가율(7.9%)에 크게 못 미치는 0.5%에 그쳐 회복세가 다시 불안해 보였으나 이는 6 · 13지방선거 등에 따른 조업일수의 감소, 현재자동차와 두산중공업 등의 노사분규로 인한 약 4억달러 가량의 수출차질, 월드컵경기 시청에 따른 조업시간 단축 등에 의한 일시적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보다 이틀이 부족했던 조업일수를 고려해 일평균 수출증가율을 계산하면 6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하반기 수출이 2/4분기보다 확대되어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내수와 함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19.7%이었던 데 따른 반등과 더불어 미국경제의 완만하고 지속적인 회복 기대, 중국의 고성장 지속, 유로 및 동남아 경제의 회복 등에 따른 해외수요의 지속적인 회복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최근 엔화강세로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회복의 가능성이 다시 불확실해지고 있기는 하나 일본경제가 예상대로 바닥을 벗어난다면, 이 또한 해외수요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지난해 급락했던 수출단가의 하락이 올해 들어 다소 진정되고 있는 동시에 수출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수출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하반기 수출증가세가 예상외로 더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실물경제의 회복이 완만하게나마 진행중이지만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어 이의 실물부문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남아있고, 철강과 IT제품 등 전세계적인 공급과잉품목을 중심으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감소효과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석 달째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하락(평가절상)이 계속된다면 우리 수출품의 수출경쟁국 수출품에 대한 상대가격상승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수출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직 유로화나 엔화 등 다른 수출경쟁국 통화의 對美 달러환율이 동반 하락해 수출감소효과는 크지 않으나, 중국(홍콩)과 말레이시아처럼 고정환율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섬유류 등 경공업 제품수출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의 강도와 새로운 균형수준을 찾아 하락중인 원/달러 환율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현재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의 향후 지속성 여부와 강도를 가늠해 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금융시장, 미국발 악재 영향 크게 받아

미국경제의 취약성에 따른 영향으로 실물경기지표와 금융시장지표 간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적인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주가 · 환율 · 금리의 동반 하락세가 2/4분기부터 계속 진행중이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는 향후 국내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높여 주가와 금리를 하락시킬 것이다. 또한 국가간 상대적 경제기초여건(펀더멘탈)을 각국 통화가치의 비율로 반영하는 환율의 특성상, 미국경제의 회복둔화와 국내경제의 꾸준한 성장은 원/달

러 환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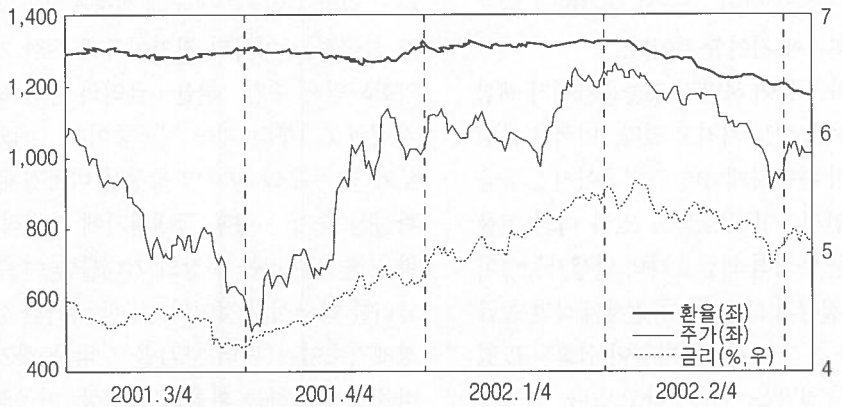
동반하락한 주가와 금리, 하반기 상승 가능성 높아

지난해 4/4분기부터 지난 1/4분기까지 우리 경제는 실물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금리와 주가의 꾸준한 상승을 경험했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들의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오르고,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시중자금수요가 늘어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러나 2/4분기부터 이러한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 경기회복에 동반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간 100% 가까이 상승한 국내주가는 지난 4월 18일 937선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6월말 한때 700선이 위협받았고, 7월 중순 현재까지도 8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11미국 테러사태 이후 급락했던 금리(3년 만기 국고채 금리기준)는 10월초 4.34%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해 지난 4월 중순 6.58%로 약 반년 동안 50%가량 상승했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어 지난 6월말에는 5% 중반까지 떨어졌다.

국내 실물경기지표들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관련이 깊은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다소 의외이기는 하나, 이는 미국의 경제불안과 관련이 깊다. 2/4분기 미국경제는 회계부정사건과 기업실적부진 등으로 증시가 침체되고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자본유입 감소로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었다.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흡수하는 미국의 금융불안이 자칫 실물경기의 불안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수출과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 달러의 가치하락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수출감소와 국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주가하락을 유도할 것이다.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국내경기에 대한 기대가 나빠지자 민간의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이는 시중자금수요의 위

<그림 2> 주가 · 환율 · 금리의 추이



주: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금리를 사용함.
자료: 코리아 본드웹

축으로 이어져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요즘처럼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경기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자들은 안정성이 높은 투자자산인 채권을 선호해 채권수요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투자심리가 높지 않고 그나마 완만히 늘고 있는 기업투자도 내부자금을 통해 이루어져 기업들의 회사채발행이 크게 감소하자 채권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커져 채권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라 채권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이자율(금리)은 떨어질 것이다. 한편 환율하락과 경기회복세의 약화 등은 물가안정에 기여해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이다.

국내외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하반기부터 주가와 금리가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경기지표의 회복세가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각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상향조정되고 국가신용등급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70%의 증가가 예상될 정도로 크게 호전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외국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어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이 충분해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융불안 여파는 이러한 긍정적 대내여건들이 주가와 금리에 즉각 반영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가이며 세계 최대규모의 금융시장을 지닌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지속가능성 높은 환율하락세

원/달러 환율이 20개월 만에 최저수준인 1,170원대까지 하락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비교통화(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의 환율하락은 미국 달러화의 약세요인과 원화의 강세요인이 동시에 나타난 결과이다.

미국 달러화가 약세인 것은 누적되던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수지 흑자로 보전해 온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외국인투자의 둔화로 자본수지마저 흑자폭이 급감하자 외환시장에서 달러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의 주가폭락 등 금융시장 불안은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한편 우리 경제는 꾸준한 펀더멘털의 개선을 통해 많은 거시경제 지표들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해 오고 있지만 환율은 예외였다. 특히 지난해말부터 지난 1/4분기까지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엔/달러 환율의 상승과 동반해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했었다. 따라서 현재의 환율하락은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의 환율에 대한 과거 미반영 부분이 현실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외환시장의 수급측면에서도 무역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의 꾸준한 증가는 외환시장에서 달러공급과 원화수요를 늘려 원화가치를 높일 것이다.

환율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주어 대외신인도 개선에 기여하고, 수입물가의 하락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외채원리금 상환 및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환율하락에 따른 달러표시 수출가격의 상승과 수입가격의 하락은 수출감소와 수입증가를 통해 현재의 무역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수출대금의 환전액을 환율하락 이전보

다 감소시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는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중국(홍콩) · 말레이시아 등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지만, 아직 주요 수출경쟁국들의 對美 환율이 원화환율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 · 한국은행 등은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 LCD, 정보통신기기 등 IT 제품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세계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일본과 경쟁이 치열하던 주력 수출품들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社도 우리 수출이 환율변화보다는 전세계 수요변화에 네 배 이상 민감한 반응을 한다고 분석해 환율하락이 국내경기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은 하반기 국내경제의 기초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탕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회복 · 국가신용등급 상승 · 외환보유고의 증가 · 외국인투자의 증가 등은 외환시장에서 달러공급의 증가와 원화수요의 증가를 일으킬 것이다. 세계적 금융기업인 모건스탠리社는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국내금리의 상승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금리상승은 금리차익을 추구하는 국제투자자금의 국내유입을 유도해 환율하락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 투자 · 수출의 동반증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고, 물가안정과 고용증가는 안정 속의 성장을 뒤받쳐 주고 있다. 미국의 금융불안으로 국내금융시장이 다소 혼란을 겪고 있지만 실물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해외의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투자대상으로도 매우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국경제의 불확실성도 하반기를 거치면서 점차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있어 내수와 수출비중이 비슷해 해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2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여건상 아직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금융 및 실물경제동향은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과 관련해 예의 주시되어야 할 것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이 글은 정부 및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경제정책자료 · 통계자료 ·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나 KDI의 공식견해가 아님.

필자 주

1) 경기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율이 正(+)인 경우에는 경기상승, 負(−)인 경우에는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2)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이번 달의 경기가 전월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그렇지 않다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3) 지난해 전체 주택건설수는 약 53만호였다. 이 중 약 27만호는 아파트 건설이었고, 약 20만호는 다세대주택 건설이었다. 아파트 건설은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으나 다세대주택 건설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건설된 모든 다세대주택수를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

금융부문, 외환위기 이후 얼마나 바뀌었나 <<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얼마나 취약했던가를 잘 드러내 주었고, 금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에 누적되어 온 부실을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처럼 금융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금융부문은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우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되던 금융기관들 중 상당수가 부실로 퇴출을 당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도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선되었다.

이 글에서는 외환위기와 더불어 드러난 우리 금융부문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금융부문, 외부충격에 왜 취약했나

우리 경제는 환율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고 외환거래도 위축되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이 극심해졌던 1997년말부터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 해말에 달러당 환율은 1,965원(12월 24일)이었는데, 이는 1996년말에 비해 원화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용외환보유액은 거의 고갈된 수준인 39억달러(12월 18일)에 불과해 국가부도 위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외환위기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업 · 금융 부문의 부실이 있었다. 1997년초부터 시작된 한보 등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는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금융부문도 부실해졌다. 이는 곧 외국인투자자들로 하여금 국내금융기관에 대출한 자금을 급격히 회수하게 함으로써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1997년말에 약 47조원이었고 1998년말에는 60조원 정도로 커졌다. 일각에서는 1998년말에 부실채권 규모가 약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해 우리나라 GDP의 약 25%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였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자 기업에

대한 대출도 줄어들었고 이는 다시 기업의 부도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간섭 · 규제 · 과보호가 금융부문 취약성의 원인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이 쉽게 부실해져 외부충격에 취약해진 것은 금융기관들의 상업성 추구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금융기관은 가계부문의 저축을 기업의 투자로 중개해 주면서 대출과 예금의 이자 차액을 수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계부문의 저축을 될 수 있는 대로 수익성이 크고 위험이 적은 기업들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금융기관의 상업성 추구 노력이 매우 미흡했고 그러한 노력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문의 저축이 수익성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업의 투자로 적절히 중개되지 않는 등 금융부문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부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금융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보호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이는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이다. 우선, 대출청탁이나 인사개입 등으로 인해 금융부문의 자율성이 제한받았고, 은행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되어 수수료 등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산업정책에 부응하도록 금융기관들이 종용받는 등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 · 규제한 것이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고객의 손실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금융기관을 과보호해 왔다는 지적도 있다. 예들 들어, 어떤 은행이 경영비효율과 부실이 극심하다면 그 은행 주주들의 주식매도와 이로 인한 주가하락, 예금인출과 대출고객 이탈 등 시장규율에 의해 그 은행이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은행이 지고 있던 위험을 부담해 줌으로써 그 은행은 퇴출의 위험 없이 시장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보호는 금융기관들의 경영행태와 기업부문의 부실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실이 있더라도 퇴출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과 위험을 고려해서 기업에게 대출해 줄 유인이 없었다. 또한 예금자들도 정부가 금융기관을 보증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은행의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예금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효율적인 자금분배에 필수적인 대출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비효율적인 경영행태도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의 방만한 자금운용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차입을 통해 과도한 투자를 강행하거나 계열사를 무리하게 확장하였고, 이러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결국 과다한 부채와 낮은 수익률로 도산하는 등 기업부문의 부실도 크게 심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의 한계

물론 정부의 과다한 규제와 보호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부문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금융자율화가 추진되기 시작

했었고 시중은행의 민영화, 다양한 금융기관의 설립, 금융상품의 다양화, 금리자유화, 개방확대 등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루어진 금융개혁은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우선, 금리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조치·주식시장개입 등 정부의 재량적 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한 개발정책과 산업합리화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하였던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지원 등 과거의 개입이 또 다른 개입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금융기관 스스로도 개혁을 수용하고 대응할 태세가 미비했다는 비판도 있다. 금융기관이 개혁의 결과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욱 집착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시도되었던 금융부문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우리 경제가 겉보기에 잘 성장하는 듯하였고 금융기관들도 나름대로 영업활동을 원활히 확장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외환위기와 더불어 금융부문의 부실이 표면화되었던 1997년말 이후에 크게 바뀌었다.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들의 퇴출과 건전성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금융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과거에 정부는 금융부문을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과보호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해 수익성이 크고 위험이 적은 기업들에게 대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고, 퇴출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경영행태도 지속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외환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금융 구조조정의 한 가지 목표는 금융부문의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목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금융부문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금융 구조조정의 우선적 목표는 누적된 부실의 처리

우선, 회생가능성이 없거나 회생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부실금융기관들을 퇴출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997년말 현재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8%를 기준으로 퇴출은행을 선별한 결과, 이 기준보다 낮은 자기자본 비율을 지닌 은행은 동화·대동·동남 등 모두 12개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정부는 기준에 미달된 12개의 은행들에게 2000년까지 BIS 자기자본 비율

을 8%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그 은행들이 제출한 계획을 정밀 검토하여 회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 동화 · 대동 · 동남 · 경기 · 충청 등 5개 은행에 대해 퇴출결정을 내렸다.

퇴출결정이 내려진 5개 부실은행들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동화를 신한이, 대동을 국민이, 동남을 주택이, 경기를 한미가, 충청을 하나은행이 각각 해당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자산 · 부채이전(Purchase & Assumption : P&A) 방식이라고 한다. P&A 방식은 자산(대출금 · 유가증권 투자 등)과 부채(예금자의 예금 등)를 우량은행에 넘기면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 자산부족액만큼을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채워주는 방식이다.

BIS 자기자본 비율 8% 미만이었던 12개 은행 중 P&A로 정리된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은행들(조흥 · 상업 · 한일 · 외환 · 평화 · 충북 · 강원)은 자본금 증액에 성공할 경우 생존이 허용되었다. 자본금 증액의 한 가지 방법은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은행들의 대부분이 낮은 주식시가와 상당한 규모의 부실로 인해 외자유치나 유상증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다. 결국 외환 · 평화 은행을 제외한 조흥 · 상업 · 한일 · 충북 · 강원 등 5개 은행은 M&A 방식을 통해 자구책을 찾았고, 그 결과 상업 · 한일 은행과 조흥 · 강원 · 충북 은행의 합병이 성사되었다. 정부는 이들 합병된 은행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 참여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여 BIS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었다.

부실금융기관들이 정리되는 또 다른 방식으로 架橋 금융기관을 통한 정리방식이 있다. 경남 · 경일 · 고려 등 대부분의 종금사들은 대량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생존여부가 불투명했고 경영평가 결과 회생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종금사들의 퇴출에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했고,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거래자의 피해 등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되었다. 따라서 예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등 최소한의 금융업무를 유지해 주는 금융기관이 필요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또 다른 금융기관을 만들어 부실금융기관들을 정리하는 방식이 주로 종금사 퇴출에 사용되었다.

건전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개선

금융 구조조정의 또 다른 목표는 궁극적으로 금융부문이 시장 자체의 기능과 원리에 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데 있었다. 당장의 부실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금융부문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과거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언제든지 부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부실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의 한 가지 초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에 있었다.

우선, 적기시정조치제도가 1998년 중반에 도입되었다.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 비율 등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를 기준으로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른 시정조치들을 미리 정해 두었다가 어떤 금융기관이 일정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자동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금융감독기관은 이 제도를 통해 건전성이 양호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진 엄격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자구노력을 촉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또 다른 조치는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 Forward Looking Criteria)이었다. 이 분류기준은 대출기업의 현재 재무상태와 함께 미래 사업가치까지 따져 대출된 자산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현재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기업에 대출한 돈은 높은 건전성 등급을 받게 된다. 반대로 어떤 대출기업의 빚 상환능력이 미래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건전성 등급은 낮아질 것이다. FLC 도입으로 인한 이점은,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편, 금융기관들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유인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있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도 엄격하게 개선되었다.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가 종전의 기준에 비해 줄어들도록 BIS 자기자본 비율 산출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보완자본은 은행이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감독당국이 자

금융 구조조정의 한 가지 목표는 금융부문의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또 다른 목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금융부문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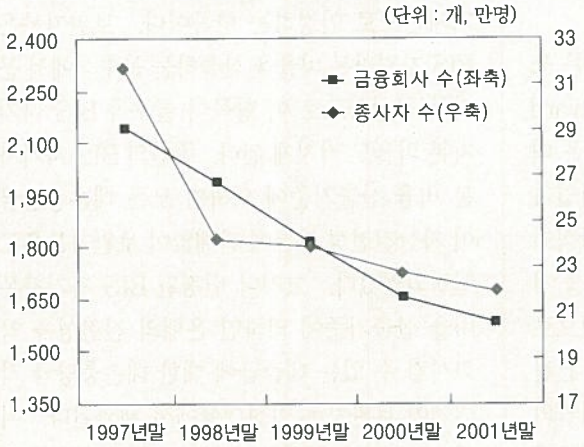
기자본으로 인정하는 항목이다. 보완자본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하는 분수식에서 분자를 구성하므로 이 항목이 클수록 BIS 자기자본 비율도 커지게 된다. 종전의 BIS 자기자본 비율 산출기준에 의하면 모든 대손충당금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계없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었었다. 그러나 변경된 BIS 자기자본 비율 산출기준에 의하면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보완자본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거래업체의 재무구조가 불량한 은행들은 그만큼 BIS 자기자본 비율이 악화될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개선되었다.

경영투명성은 회사외부의 투자자와 거래자가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회계정보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전자공시시스템이 개선되는 등 회계공시의 방법이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자산이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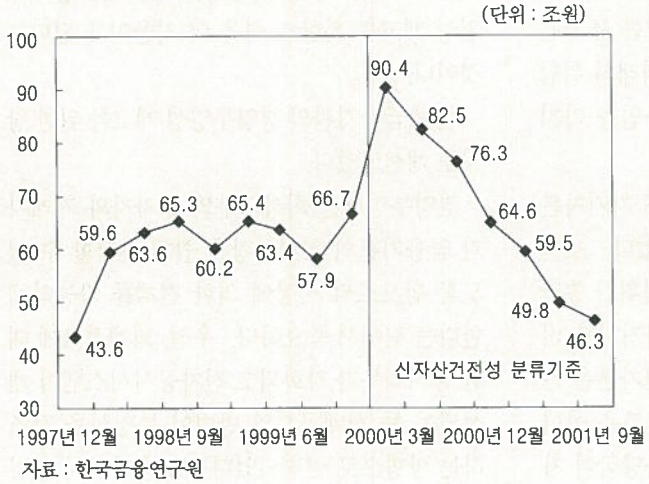
규모 이상인 금융기관들은 감사위원회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이전의 감사제도는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된 단독기관이 회계 및 업무의 감독기능을 맡도록 하였으나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경영진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2000년 1월에 공포된 개정 「은행법」은 현행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내에 회계 및 업무 감시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감사위원회제도는 총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관련이 없는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가 회계의 적법성이나 업무의 타당성 등을 독립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1〉 금융기관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그림 2〉 부실채권 감소 추이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아직 끝나지 않은 금융부문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결과, 금융기관의 수와 임직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금융기관 수는 1997년말 2,144개에서 2001년말 현재 1,583개로 26.2%p(561개) 감소했고, 금융기관 종사자 수도 1997년말 31만7,623명에서 2001년말 21만8,726명으로 31.1%p(9만8,897명) 감소하였다.

금융기관의 수가 줄어든 대신 각 금융기관들의 규모는 더 커졌다. 은행권의 경우 한 은행당 평균 총자산 규모가 1997년말에 비해 2001년말에 83% 정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당 평균 총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간 M&A가 하나 · 보람 · 국민 등 우량 금

융기관들로 확산되면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더욱 심화되기도 하였다. 현재 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합병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의 대형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생산성이나 당기순이익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도 개선되었다. 은행의 종사자 한 사람당 총자산이 1997년에 약 53억원에서 2001년에는 약 9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대부분 금융기관의 2001년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1997년에 금융기관은 약 7조6천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2001년에는 약 10조3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지니고 있던 부실채권도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2000년 3월에 약 90조원이었으나 2001년 9월 현재 약 46조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BIS 자기자본 비율도 일반은행의 경우 1997년말에 7%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9월말에는 10.7%로 개선되었다.

한편 양적인 지표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성과도 있다. 그러한 성과 중의 하나는 금융기관도 부실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도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의 과보호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퇴출되거나 경영진이 부실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었는데,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과거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우는 풍토가 정착되는 것이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에도 필수적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외국계 전문경영인의 경영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자율 및 성과 중심의 경영풍토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있다. 2002년 3월 현재 외국인은 은행(6개), 증권사(11개), 투신사(6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약 10~80%이다. 또한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시장점유율이 은행 등 전금융권에서 증가하고 있다. 증권업의 경우 1997년말에 약 4%를 차지하던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거래대금 기준)이 2001년말에는 약 12%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은행권의 경우 2001년말 현재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은 약 2%에 이르고 보험의 경우 6% 정도이다.

지금까지의 금융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의 양적인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질적인 성과도 어느 정도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부문의 개혁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왜냐하면 현재 금융부문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대형 우량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경영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제약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2001년말 현재 7개 은행, 2개 보험사, 2개 증권사 등 총 11개 금융

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소유 금융기관들의 경영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무리하게 매각할 경우 금융기관들의 주가하락 등 부작용도 있겠으나 민영화 자체가 지연되면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외부투자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상당부분 마련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제도적 장치들의 실질적인 실행에 중요한 의식이나 관행 등의 개혁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우선, 시장규율을 확립하고자 개선된 수많은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진이나 사외이사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효율성 · 수익성 · 생산성 제고를 위한 활동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선진형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보다 많은 현장 경험이 축적되고 그것을 대출심사 등에 실제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선진금융기법이 금융기관의 경영현장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부문이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한 가지는 시장규율 확립이다. 시장규율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예금자 · 기업 ·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금융시장 참가자의 성과가 시장에서 올바르게 평가되고 보상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예금자들은 자기책임하에 금융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기업부문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금융거래상의 부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정책을 강력하게 펴되, 이들에 대한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시장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공시제도, 회계제도, 신용정보 유통 및 평가시스템 등과 같이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의 확충이 중요하다.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이 글은 정부 및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경제정책자료 · 통계자료 ·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나 KDI의 공식견해가 아님.

용어해설

벤치마킹 (benchmarking)

자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를 모델로 삼아 그들의 독특한 비법을 배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리엔지니어링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독립된 한 분야이다.

원래 토목 분야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강물 등의 높낮이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준점을 벤치마크(benchmark)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세우거나 활용하는 일을 벤치마킹이라고 불렀다. 시초는 일본 기업에 밀려 고사 상태에 놓여 있던 미국의 제록스社가 경쟁업체인 일본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캐기 위해 직접 일본에 건너가 조사활동을 벌인 뒤 조사결과를 경영 전반에 활용,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면서부터이다.

벤치마킹은 단순히 최고 수준의 경쟁회사를 찾아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회사내 또는 타업종에서도 찾을 수 있을 만큼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상대와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따라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조직원들의 공감을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기업들은 업계에서 상위권에 있는 기업의 1인당 매출액 · 노동비용 등 구체적인 경영지표를 산출하여 그 수치에 도달하려고 업무개선에 힘쓴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원을 상대 기업에 파견, 자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을 익히기도 한다.

그러나 목표가 되는 벤치마크(benchmark : 측정기준)로서 어떠한 항목을 설정하는가가 과제로 남게 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항목의 설정이 반드시 생산성을 상승시켜 경쟁력을 높인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TQC(Total Quality Control : 종합적 품질관리), 브로드밴딩(broadbanding), 종업원에게의 권한 이양, 숙련도에 의한 임금체계 등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 · 운영하고 있다.

[벤치마킹의 기법을 활용한 경영혁신의 추진과정]

① 벤치마킹 적용분야의 선정
② 벤치마킹 상대의 결정
③ 정보수집
④ 성과와 차이의 확인 및 분석
⑤ 벤치마킹 결과의 전파 및 회사내 공감대 형성
⑥ 혁신계획의 수립
⑦ 실행 및 평가

세계 경제동향

2000년 중반부터 시작된 미국경기의 하락으로 동반하락세를 보였던 세계경기는, 지난해 4/4분기부터 미국의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회복세로 반전되어 지금까지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경제가 엔론 · 월드컴 등 연이은 회계부정 사건으로 주가폭락과 달러화 약세를 초래시켜 미국경기는 물론 세계경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미국 금융불안으로 세계경기 불투명

미국 주가는 9·11 테러사건 직후 폭락에서 서서히 회복되다가 올 3월을 고비로 하락세로 돌아선 후 4개월 만에 다우지수는 25%, S&P 500 지수는 27%, 나스닥은 32%가 각각 떨어졌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올해 들어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 각각 11% 전후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회계부정에 따른 미국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추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논란이 있어 왔던 터에, 잇따른 회계부정은 미 기업들의 가치가 실제로 고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1990년대에 장기호황을 누린 IT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모두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 다른 분석은, 지속불가능하게 커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드디어 줄어드는 조정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증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5%에 달하면 조정현상이 나타나는데, 지난해 4.1%였던 경상수지 적자가 올해에는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왔었다. 즉, 과다한 경상수지 적자는 누적되는 미국의 외채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감소시켜 주가하락과 달러화의 약세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미국내 주식투자(순액기준) 규모는 지난해 4/4분기 337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올 1/4분기에는 176억달러로 감소했고, 재무부 채권투자(순액기준) 역시 2001년 1/4분기에 380억달러에서 올 1/4분기에는 30억달러를 환매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세계가 미국 금융불안에 관심을 높이는 것은, 주가하락이 지속될 경우 투자자들의 자산감소로 이어져 미국 GDP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지출을 감소시켜 미국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달러 기준으로 세계총생산의 약 30% 이상을 담당하는 미국경제의 침체는 곧 세계경제의 침체를 의미한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미국 금융불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미국 실물부문

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IMF도 미국의 주식시장의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지출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부시 행정부와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경기의 회복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견조한 소비증가, 6개월째 증가하고 있는 산업생산, 높은 생산성 유지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개선 가능성 등 미국경제의 기초여건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그린스펀 의장은 7월 중순 상·하원 의회 증언에서 미국경제에 대한 기존 경기 인식인 '신중한 낙관론'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미국경제의 GDP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2.5~3.0%보다 높은 3.5~3.75%로 상향조정하고, 내년에도 3.5~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그린스펀 의장의 미국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주가폭락을 이어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린스펀 의장도 미국의 회계부정이 미 증시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소비 및 기업 지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 금융불안은 곧바로 세계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어 엔화·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의 가치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일본·영국 등 주요국가들의 주가를 동반 급락시켰다. 세계증시의 동반폭락 원인이 미 뮤추얼펀드들의 환매압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미국내에서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올린 해외증권에 대해 차익실현을 위한 매도공세를 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최근 증시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은 데다, 엔화 강세로 인해 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좋은 편이다. 닛케이지수의 경우 달러화 기준으로 올 실적은 미 S&P 지수에 비해 30%나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금융불안의 직접적인 중요 원인인 미국의 회계부정 파문 즉,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불투명한 기업회계 장부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4일 미 의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회계 개혁법안을 전격 합의해 법안통과가 확실시된 데다가, 미국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사인을 하는 작업이 8월 중순까지 완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기업들의 회계자료 재작성 과정에서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회계장부가 바로잡혀 발표될 때 기업의 신뢰가 또 한 차례 무너지는 홍역을 치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연초부터 회복세를 보여 오던 세계경기가 미국의 금융불안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현재 미국경제는 경제지표상으로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주가폭락, 달러화 약세로 실물경제도 머지않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일반적 평가이다.

주요 국가들의 경제동향

〈미국〉

미국경제가 지난해 3/4분기에 -1.3%의 GDP성장률을 기록하자, 1990년대초에 시작

된 장기호황이 마감되고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었다. 이러한 우려는 그 해 4/4분기에 곧바로 1.7% 성장함으로써 어느 정도 불식되었다. 올 1/4분기에 비록 재고조정에 따른 거품성장이 있었지만 전분기 대비 6.1%(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미국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기대감은 미 중앙은행 Fed가 연방기금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후 발표되는 경기판단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회의에는 "경기회복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고, 3월 회의에서는 "미국경제가 상당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로 한층 호전된 경기판단을 했다.

올해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들을 살펴보아도 미국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2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산업생산은 6월에 전월 대비 0.8% 증가해, 6개월 연속 상승하며 1999년 10월 이래 최고의 증가세를 보였다. 6월 경기선행지수도 전월과 같은 112.4를 유지함으로써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6월 주택착공건수는 전월 대비 3.6% 감소했지만, 미래의 주택경기를 보여주는 건축허가건수는 1.4% 증가해 여전히 주택경기가 밝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6월 실업률이 5.9%를 기록해 5월 5.8%보다 조금 늘어났고, 월간 소비자신뢰지수도 110.3에서 106.4로 떨어졌지만 지표상 큰 폭의 부정적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지표들은 미국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하다는 사람들의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물경제 모습과는 달리 미국 금융불안은 미국경제를 안개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 증시는 지난 2년여 동안 시가총액으로 7조7천억달러가 감소했다. 그 중 약 3분의 1이 올해에 감소한 것이다. 7월 22일 현재,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7,784와 1,283을 각각 기록해 3개월 만에 30% 가량 폭락했다. 나스닥지수의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때에 비해 무려 74%나 폭락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올해 미국 주가는 현재의 수준에서 40~60% 가량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주가하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이다. 주가의 대폭적인 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수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예컨대, Fed가 금리를 인하시켜 주택경기를 호전시킴으로써 혹은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혹은 보통 주가하락을 수반하는 달러가치 하락이 가져오는 수출증대로 상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리가 이미 40년 이래 제일 낮다는 수준(1.75%)에 달해 있고, 세금은 이미 감면하였으며 그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형편이고, 미국 외의 세계경제가 미국 상품 수입을 크게 늘릴 만큼 호황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주가하락이 소비를 통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다.

한편, 미국 금융불안의 한 축인 달러화 약세는 외국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미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엔/달러 환율이나 달러/유로 환율 등 국제 외환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환율

의 급박한 움직임과는 달리 실제 미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달러화 가치가 3.0%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달러화 약세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위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인인 5월 무역수지는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4월에 이어 사상 최고치인 37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는 2002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1,180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1,68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 일본〉

지난해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고 있던 일본경제는 올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1.4%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은행은 7월 17일, 월례보고서를 통해 수출 및 제조업 생산증가에 힘입어 기업의 수익성과 국내 소비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어 일본경제가 회복세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경제는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수출과 산업생산을 기반으로 이미 전반적인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경기판단은 6월 보고서에서 "일본경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보다 진전된 것으로, 지난 3월 이후 5개월째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 같은 일본경제의 경기판단은 경제지표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5월 경기동행지수는 1996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00.0을 기록함으로써, 경기상승을 의미하는 50 이상을 4개월째 이어갔다. 매분기 실시되는 6월 단칸서베이(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대기업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가 −18을 기록, 3월 조사시 −38에 비해 무려 20포인트나 개선되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5월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4월 0.2%에 비해 대폭 증가한 4.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호조로 5월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월 대비 182.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경제는 미국 등 세계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장기불황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미국 금융불안에 따른 엔화강세로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높아지던 경기회복 기대감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행이 발표한 6월 도매물가지수는 전월대비 94.4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횡보를 보임으로써 디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둔화되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도매물가가 전년 대비로는 1.1% 하락하며 10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어 디플레이션 재연 가능성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경기는 미국 금융불안으로 다시 급랭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일본은행은 "최근 엔화 대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증시가 폭락하는 등 미국의 금융불안으로 수출업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장기

불황 탈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미 주가가 20% 하락할 경우 일본 GDP 성장률이 최대 0.6%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증시는 미국의 주가폭락 및 세계증시의 동반하락세 속에서도 비교적 잘 버텨오다가 7월 24일 마침내 닛케이지수가 1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의 주가하락은 취약한 일본의 은행부문을 강타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하면, 일본 은행들의 자본건전성이 이 지수와 직결되어 있어, 닛케이지수가 9,600 아래로 떨어지면 BIS(국제결제은행) 자본적정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더 떨어져서 8천대에 이르면 자본적정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 은행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달러화 약세를 반영하여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닛케이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뉴욕주가에 비해 일본주가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엔화가 달러화에 비해 강세였기 때문에 일본주식에 대한 투자는 달러화로 따졌을 때 이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국내시장에서 손실을 내고 있는 미국의 투자회사들이 영업이익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일본주식을 팔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본증시의 하락은 직접적으로는 미 금융불안에 기인한 것이지만 일본경제 자체의 문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연초부터 시작된 일본경기 회복의 상당부분이 해외수요 호전에 힘입은 수출회복에 따른 것이어서 그만큼 일본경제가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구조개혁 지연도 일본경제의 자생력을 잃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그동안 낙관 우위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대신 금융불안 재연, 이중침체(Double Dip) 가능성마저 제기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본경제가 1/4분기 플러스 성장과는 달리 2/4분기 및 3/4분기에 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일본경제가 미 달러화 약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경기부양을 위해 일본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카드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여력이 거의 소진되어 엔저를 통한 수출증대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엔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달러화의 약세 지속은 일본으로서는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일본은행은 급속한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5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시장개입을 단행한 바 있다.

〈 유로지역〉

유로화가 지난 7월 15일, 200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유로당 1달러를 넘어섰다.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등가(1:1)를 이룬 직후 해당국가들의 반응은 유로경제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역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실제로 최근 유로지역 인플레이션 압력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1.8%로 25개월 만에 유럽중앙은행(ECB) 목표치인 2%를 하회했다.

유로화 강세에 대해 EU집행위원회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ECB로 하여금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운영 여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ECB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유로지역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를 억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로화 강세는 역내교역보다 비중은 떨어지지만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유로화 가치가 10% 평가절상될 경우 역내 GDP는 0.5%p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올해 들어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13% 이상 상승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 3/4분기 경제성장률이 2/4분기의 0.3~0.6%(잠정치)보다 다소 높은 0.7~1.0%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유로화가 달러화와 등가를 이룬 것은 경제적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유로화는 1999년 1월 첫 장에서 유로당 1.17달러로 거래되면서 세계 기축통화를 기대하며 출범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달러에 대해 약세를 면치 못해 유로지역 국가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었다.

〈중국〉

중국경제는 2/4분기에 8.0%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세계경기의 동반하락과 WTO 가입에 따른 경쟁격화의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 같은 성장률은 중국정부가 사회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는 7%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올해 예정된 중국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정국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중국경제의 높은 2/4분기 GDP 성장률은 1/4분기의 7.6%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4분기 이후 최고의 성장률로서 중국정부도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다. 이로써 중국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8%를 기록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의 고성장 원인을 두 자릿수에 달하는 정부지출과 수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상반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정부지출을 24.4%나 늘렸다. 수출도 상반기 중에 14.2%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이 급증한 것은 중국이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근 달러화 약세가 위안화 약세로 이어져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화 약세의 최대 수혜국이 중국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경제가 미국 금융불안에 따른 해외부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디플레이션 압력과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낙관만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1년 10월 이후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해왔고, 올 상반기 물가는 0.8%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이 달러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금융불안에 따른 미국경기의 둔화 현상이 나타나면 수입수요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수부양에 주력해 온 정부지출도 재정의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국유기업 등의 경제개혁이 순조롭지 않아 은행들이 갖고 있는 막대한 부실채권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 인용 보도한 분석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4대 국영 상업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은 중국정부의 공식집계치보다 10%p 가량 높은 총여신 대비 34%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실여신 규모가 총여신 대비 50% 이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1]

중국의 4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 여신은 현재 총 4,800억달러 규모로, 아시아 전체의 무수익여신 추정치 2조달러의 4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막대한 부실채권은 실직 등을 두려워하는 근로자들의 저항으로 중국경제의 개혁을 지연시켜 문제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신흥공업국〉

지난해 세계경기의 동반하락으로 경기위축을 경험했던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올해 들어 투자 및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시키려는 시점에서 미국의 금융불안이라는 역풍을 만나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난해에 −1.9% 경제위축을 경험한 대만은 올 1/4분기에 6월 산업생산지수가 8.6%를 기록하며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초부터 대만과 비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특징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인데, 최근 미국 달러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의 특징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對美 의존도가 높으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거래를 증대시키는 '자족적 경제'를 갖추라고 권고했다. 여하튼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향후 경기는 상당부분 미국 금융불안의 진행 속도와 강도에 의해 결정될 것 같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 금융불안보다도 자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말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고조되면서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이 우려되던 것은 진정되고, 이제는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이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브라질경제는 IMF가 신뢰를 보낼 정도로 기초가 튼튼한 편이다. 다만 브라질의 국내외 부채가 GDP의 55%에 달해 레알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부채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브라질 레알화 가치가 떨어지고 2014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9.88%로 상승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올해 GDP 성장률은 아르헨티나가 −11.0%로 전망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이 글은 IMF · OECD · 세계은행 등 해외 주요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 · 통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 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나 KDI의 공식견해가 아님.

필자 주

1) 『나라경제』 8월호 '세계 경제이슈' 란에서는 '국유기업'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경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 성공할까 <<

중국경제는 5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했던 외환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속성장을 지속했으며, 올해도 7.5% 전후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WTO 가입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이들이 소위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기치 아래 단행되어 온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국의 점진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모범적이며 성공적인 개혁 사례로 꼽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거품을 경계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지난해, 미국의 경제학자 토마스 러스키(Thomas Rawski)는 중국경제가 1998년 이래로 사실상 성장을 멈추었다는 의외의 주장을 펴 세간을 놀라게 하였다.[1] 또한 지난 3월 주룽지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자금투입이 없었다면 중국경제는 1998년도에 붕괴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해 중국경제의 성장이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사실, 경제성장률 등 중국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는 견해들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CIA는 중국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성장률은 공식 발표치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7%, 3% 아니면 0% 이건 간에 성장률의 크기가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1997년말 외환위기는 비껴갔지만, 적절한 처방 없이 병을 키우기만 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중국은 이웃국가들이 겪었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거대 시장인 중국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일파만파로 번져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핵심에는 국유기업[2]의 부실이 자리잡고 있다. 개혁 이후 국유기업은 그 비중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기업체계의 골격을 형성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보루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여부와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성공적 이행 여부는 상당 부분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시행된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유기업들의 경영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현재 비농업 부문 인력의 50%를 고용하고 있으나 총 산업생산의 25% 미만을 차지할 정도로 생산성이 낮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은행권 대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국유기업은 재무구조가 매우 부실하여 사실상 부채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3] 다시 말해, 은행권 여신의 상당 부분이 무수익여신이라는 뜻인데, 이는 금융권 위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들에 대해 급진적이며 과감한 개혁은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유기업들은 중국의 사회안전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리해고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이에 수반될 사회적 충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한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은 불가피할지도 모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중국 국유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행해진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개혁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적극적인 대응조치 없이 현 상황이 방치될 경우 중국경제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즉,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의 전개과정을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국유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그 원인

중국 국유기업들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 수는 1999년말 현재 8,336만명으로 중국기업 전체 종업원의 70.8%에 해당한다. 이는 1995년에 비하면 2,600만명 이상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중국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이다. 국유기업은 또한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광공업 부문(제조업, 광업, 수도 · 전기 · 가스)에서 중국 국유기업들은 전체 고용의 54.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 전체생산 중 국유기업이 기여하는 비중은 28.2%밖에 되지 않는다. 1999년 현재 광공업 부문 국유기업의 1인당 생산은 1만4,731위안으로 이는 집체기업의 2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로 인해 국유기업의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부실심화로 이어져 중국 금융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표〉 중국 도시지역 국유기업의 고용과 투자 비중(1999년)

(단위 : 만명, 억위안)

	국유기업	집체기업	기 타	전 체
고 용	8,336 (70.8)	1,652 (14.0)	1,785 (15.2)	11,773 (100.0)
투 자	15,848 (53.1)	4,339 (14.5)	9,568 (32.0)	29,855 (100.0)

주 : 집체기업이란 100% 국가지분인 국유기업과 달리, 일부 소수가 소유권을 공동 보유한 기업

자료 : 「중국 통계연감 2000」

국유기업 비효율성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우선, '소유구조 학파(ownership school)'는, 국유기업이 정부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한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주장한다. 기업 경영에 대한 관료주의적 통제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해 국유기업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나 고용안정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해야만 하는 반면, 기업의 소유주는 이익창출에만 전념해야 한다. 따라서 이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정부와 기업의 분리이며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학파(management school)'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정부소유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국유기업도 다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경제 체제의 상장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다만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은 최대주주로서의 정부가 효율적으로 투자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학파는 국유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 방법으로 국유기업에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영진과 종업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중국의 경우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두 가지 견해를 모두 수용하였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후자보다는 전자의 견해를 따른 방법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경제가 비록 1997년말 아시아 외환위기는 비껴갔지만, 적절한 처방 없이 병을 키우기만 한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웃국가들이 겪었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부실한 중국 금융부문

지난 2월 중국 공산당의 대변紙라 할 수 있는 人民日報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반되는 가장 큰 위험은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중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최근 고든 장(Gordon Chang)이라는 미국인 변호사는 '다가오는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이라는 저서에서 5년 안에 금융권 부실 및 급증하고 있는 예산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금융권이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일지는 모르나, 실제로 중국의 금융권 부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으며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엄청난 경제적 · 사회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

어쩌면 중국의 현 상황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의 동남아 국가들의 상황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경우 1997년말 당시 무수익여신 규모가 공식적으로 22조 6,500억원으로 이는 총여신 대비 6%에 해당하는 비중이었다. 그러나 영업이익만으로 이자상환을 할 수 없는 기업들 즉, 부실기업들에

대한 은행여신 총액은 113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총여신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였다. 공식적으로 중국의 4대 국유은행(中國銀行 · 中國建設銀行 · 中國農業銀行 · 中國工商銀行)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익여신 규모는 총여신의 25%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무수익여신 분류기준에 의한 것으로 중국정부 관계자들은 보다 엄격해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수치가 약 30%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인 Brookings Institution에 따르면 중국 은행권의 실제 무수익여신 규모는 총여신의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0년도에 중국 자산관리회사들이 약 1,700억달러(총여신의 18%) 상당의 무수익여신을 인수하고 난 후의 수치이다. 현재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1997년 당시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몇 가지 보호장치(완충장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아직까지 외환 자유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위안화를 환전하거나 해외로 송금하기가 쉽지 않으며, 가격이 외화로 표시된 특정 주식 외에는 외국인들은 중국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외국인투자자들의 급작스런 대규모 자금유출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 또한 중국은 무역수지가 흑자이며 단기외채 규모도 작고 대규모의 FDI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OECD는 최근 연구에서, 중국이 WTO 가입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2005년경이면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는 2000년 5월에 발표한 '중국의 기업개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심각한 악순환(severe vicious circle)'에 빠져있다고 경고하였다. 중국 기업들 특히, 국유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국유은행들의 재무구조도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기업부문의 구조조정과 실적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이 기업들이 연명해야 하고 그러려면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이미 은행권은 높은 수준의 무수익여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추가의 자금제공이 어렵다. 이러한 악순환은 은행권의 대출관행 개선노력을 약화시키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및 경영 내실화 동기를 떨어뜨린다.

중국정부는 지난 4년간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유은행들에게 2005년까지 무수익여신 비율을 15%로 줄이라는 압박을 가해 오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통계상의 수치 왜곡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중국이 현재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아시아 정부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 건실해야 한다. 중국정부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6%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무수익여신과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 자산관리 회사들이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등 보이지 않는 정부의 채무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100%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Brookings Institution의 니콜라스 라디(Nicholas Lardy)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국

의 은행 시스템은 7~8년 후에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4]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과정

국유기업의 문제와 그로 인한 은행권 부실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중국정부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기업개혁에 나섰다. 사실상 이미 1970년대말부터 국유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이익을 늘리기 위한 개혁이 중국경제 개혁의 핵심이 되었다.[5] 앞서 언급했듯이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소유구조의 변화와 경영개선이라는 두 접근법을 동시에 취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처음부터 민영화와 같은 대대적이고 과감한 형태로 단행된 것은 아니다. 우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들에게 외국인투자자, 非국유기업, 외부 개인 투자자 등 정부가 아닌 조달처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100% 지분보유는 점차 희석되었으며 정부 이외의 오너들이 국유기업으로 침투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점진적인 소유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현재까지 전개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전체와 1990년대초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경영학파'의 이론을 지지하여, 국유기업들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단행되었다. 그 중 가장 흔한 형태는 소위 계약책임제(contract responsibility system)라 불리는 제도로서, 국유기업의 경영진이나 종업원 전체가 해당기업의 감독을 담당한 정부기관과 실적 계약을 맺는 것이었다. 이 제도의

국유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함께 개혁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이 담당하던 사회보장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국유기업의 사회보장 기능을 정부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목적은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이익과 손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시키려는 취지였다. 당시 정책 당국자들은 이 제도가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산 소유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유기업을 법인체로 전환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계약책임제의 기본 원칙은, 국유기업이 낸 이익 중 최소한의 부분만을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한 권한은 기업이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유기업들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해진 최소액만큼은 정부에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계약책임제를 실시한 결과,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대폭 줄어들었고, 기업들은 자체적인 경영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우선, 정부에 상납해야 할 최소한의 합당한 고정액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을 때는 이 상납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경영자들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한편, 기업이 낸 이익 중 개발비 용도로 책정되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향후 사업확장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한 중국정부는 제2단계의 기업개혁으로 이행하였는데 이는 1992년 덩샤오핑이 시장경제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서구의 현대적 기업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 마련된 것이 1993년 「기업법(Corporate Law)」의 제정이었다. 이 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회(board of supervisors)라는 세 가지 필수적인 기업지배 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국유기업의 형태가 새롭게 변모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법인화(corporatization) 과정이다. 즉, 많은 국유기업들이 독립적인 법인체로서 정부의 지배로부터 분리되었고 그 결과 국유기업의 감독자였던 정부기관들이 국유기업의 주주가 되었다.

두 번째 단계의 기업개혁도 여전히 경영학파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화 과정은 국유기업의 소유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비록 기업 전체에 대한 민영화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정부 이외의 투자자들이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 100%이던 정부 지분이 점점 축소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유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1990년대 중반, 많은 국유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자 기업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졌고 이에 중국정부는 일부 국유기업들에 대한 본격적인 민영화(사유화), 심지어 청산까지 단행하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의료 · 교육 등 상업화가 가능한 부문은 민간으로 이전되었고 퇴직금 · 연금 등도 일방적인 기업부담에서 종업원 공동부담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민영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접근방식이 서로 상이하였는데, 중앙정부는 대규모 민영화보다는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국유기업 상장을 활성화하여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의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할 국유기업을 민간이나 타지역 국유기업으로 매각 또는 합병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정비 따라야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개혁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익위주의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이사회의 권한 강화, 외부이사 및 외부감사제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1993년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회 중 최고 권한은 주주총회가 가지고 있다. 이는 상당수 국유기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대주주의 위치에 있는 정부가 경영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지 모른다. 그러나 만일 중요한 경영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매번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면 이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기업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저해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에서는 주주총회보다는 이사회의 권한이 더 강하다. 중국도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한을 재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

들은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막연히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외부이사제의 도입을 통해 경영진의 사적인 유용으로 인한 기업자산의 유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들에서 기업의 외부이사 임명은 의무화되어 있다. OECD가 1999년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외부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62%, 영국 34%, 프랑스는 29%였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법」에는 외부이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예 없다.

또한 기업경영과 관련한 부패 방지를 위해 감사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의 감사체계는 부패를 확인하고 해결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된 국유기업들의 일부는 아예 감사회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감사회가 있는 기업의 3분의 1은 감사회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의미의 감사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많은 국유기업들이 심각한 부패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제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국유기업 내부의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개혁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이 담당하던 사회보장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국유기업의 사회보장 기능을 정부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자 양산 부담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 방치되면 심각한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도

WTO 가입 2년 후부터 외국계 은행들은 중국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5년 후부터는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매금융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과 기업들이 부실한 국유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대거 회수하여 외국계 은행으로 옮겨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은행권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왜냐하면 외국계 은행들 지점 수는 국유은행들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이므로 위안화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계좌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외국은행들로 하여금 위안화 영업을 위한 지점을 개설하려면 한 지점당 최소한 6억위안(약 7,300만달러)의 영업자본금을 정부에 지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외국은행들은 소액의 예금을 맡기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굳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점을 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개방 이후 외국계 은행들의 진출이 중국에 가하는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중국 은행권 자체의 부실과 미숙한 여신관리, 차입 기업들의 비효율적 지배구조와 경영상태이다. 현재 중국 금융시장 유동성의 절반 이상이 막대한 수의 개인예금 보유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은행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유지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국국민들은 은행권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구제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 보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중국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높은 수준이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무수익여신이 더 이상 증가하지만 않는다면, 중국이 높은 GDP 성장률을 지속하는 한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은 하락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은행권의 무수익여신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아서는 중국 자산관리 회사들은 이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은행권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당시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또 다시 차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채권만기가 돌아오면, 결국 정부가 자산관리회사들을 구제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중국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FDI로 인해 그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입은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므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의 필요성을 그만큼 줄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FDI의 유입속도가 떨어지면 경기하락에 대비해서 정부지출을 더 증가시켜야 하는 형편인데 현재 조세수입의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이다. 더구나 외국자본이 유출되기 시작한다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정부의 금융권 구제능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다. 미국인 경제학자 찰스 월프(Charles Wolf)는 100억달러의 FDI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0.9~1.6% 정도 끌어올렸다고 보면서, 對中 FDI가 200억달러 감소하게 되면 중국의 현 성장률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추정을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현재까지 중국에 투입된 해외자본이 그다지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어 향후 FDI 유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지원 여력이 고갈될 경우 중국은 1997~98년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금융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지나친 비관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

이 글은 IMF · OECD · 세계은행 등 해외 주요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 · 통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 · 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나 KDI의 공식견해가 아님.

필 자 주

1) 『파이낸셜 타임스』, 2000년 7월 4일자

2) 이전에는 '국영기업'으로 불렸으나 1993년 3월에 열린 제8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공식명칭을 '국유기업'으로 고쳤다. '국영기업'은 국가가 기업자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경영까지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용어임에 비해, '국유기업'은 자산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귀속되지만 그 경영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국유기업의 은행부채는 단순히 기업경영 부실 탓만은 아니며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과거 국가에서 지급하던 운영자금을 은행차입으로 전환한 결과 1980년대 중반 이후 국유기업의 은행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4) 『이코노미스트』, 6월 15일판

5) 1979년에 국가위원회(State Council)는 국유기업들의 경영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한국 경제개혁 사례 연구」

모종린 · 전홍택 · 이수희 편



신국판 599쪽
도서출판 오름 刊
값 18,000원

「한국 경제개혁 사례 연구」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효율적 시장경제의 수립이라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구체적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개혁에 대한 그간의 여러 연구에서 지목되었던 다양한 정치적 변수들을 구조적 · 환경적 · 선택적 변수로 범주화하고 이들 변수들과 지난 20여년간 한국에서 시도되었던 경제개혁의 성패간의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1980년 이래 모두 10개의 개혁주제를 중심으로 한 사례들이 이 연구의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인과분석을 통해서 한국 개혁정책의 패턴을 정리하고 애초에 제기하였던 문제에 대한 답변 즉, 한국에서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및 앞으로의 성공적 경제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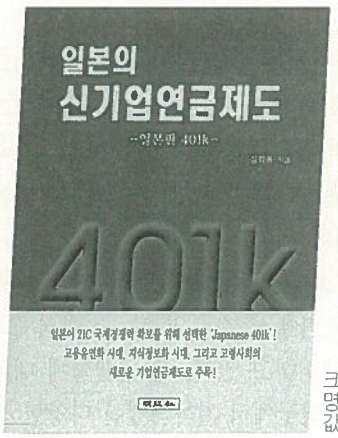
기존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미시정책 지향적이었거나 통합적인 이론화 작업에 미치지 못했던 데 반해서 이 연구는 뚜렷한 목표와 정련된 분석 틀 그리고 엄정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사례 연구들도 충실하게 연구목적과 분석 틀을 고수함으로써 전체적인 일관성과 통합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 연구서는 한국 개혁정책의 전략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지침서가 되고 있다.

특히 평가하고 싶은 것은, 비록 본문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연구가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론구축의 잠재력이다. 현 단계에서는 정책적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험적 지평을 확장하여 분야간 ·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서 검증과 정련 과정을 거침으로써 경제개혁의 실천적 이론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바로 이러한 이론화 작업을 거쳤을 때 보다 생명력 있는 경제개혁의 지침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의 연구에서는 수익구조 분석 등 개혁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동학이 비교·평가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이론구축을 향한 후속 연구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 태 환 / 연세대학교 국제교육교류부 교수

「일본의 신기업연금제도」

김화동 저



크라운판 278쪽
명경사 刊
값 20,000원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국민연금의 장래 재정수지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종래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재인식과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기업연금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최근 일본의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의 개편 내용과 아울러 미국의 401k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제도(일본판 401k)의 도입 과정과 이러한 과정에서의 논의 배경을 설명한 책자가 출판되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저자인 김화동 기획예산처 경제기금과장(*7월 12일부로 기금제도과장)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수집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균형있는 시각에서 기업연금 도입 배경 및 도입 과정에서 여러 경제주체에 미쳤던 장단점, 대책 등을 평이한 문체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해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을 맡고 있을 당시 후배 사무관들과 선진국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집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판 401k(확정각출연금)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적립·운용해서 그 운용성과에 따라 장래 수취하는 연금액이 변동하는 제도이다. 가입자 자신이 적립금의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도중에 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자기책임형의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선진화된 신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소상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여겨진다. 더구나 일본은 연금과 관련한 제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비록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일본판 401k 도입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보론으로서 '미국의 401k', '한국의 퇴직금제도', '한국의 기업연금제도 도입 논의 동향'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보론 부분은 당시 저자와 같은 과에서 일했던 박성훈(朴成勳), 이병권, 박성훈(朴成訓) 사무관에 의해 각각 쓰여졌다.

김호경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나라경제 정기구독 신청서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편집실 앞
FAX : (02) 3295-0748

아래 사항을 기입하신 후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기간** : 2002년 ___월호부터 200__년 ___월호까지 (년간)

▶ **신청부수** : _____부

▶ **신 청 자** : 개인 ☐ 기관 ☐

〈개인〉 성 명 : 직장명 :
직 위 : 전 화 :
우송처(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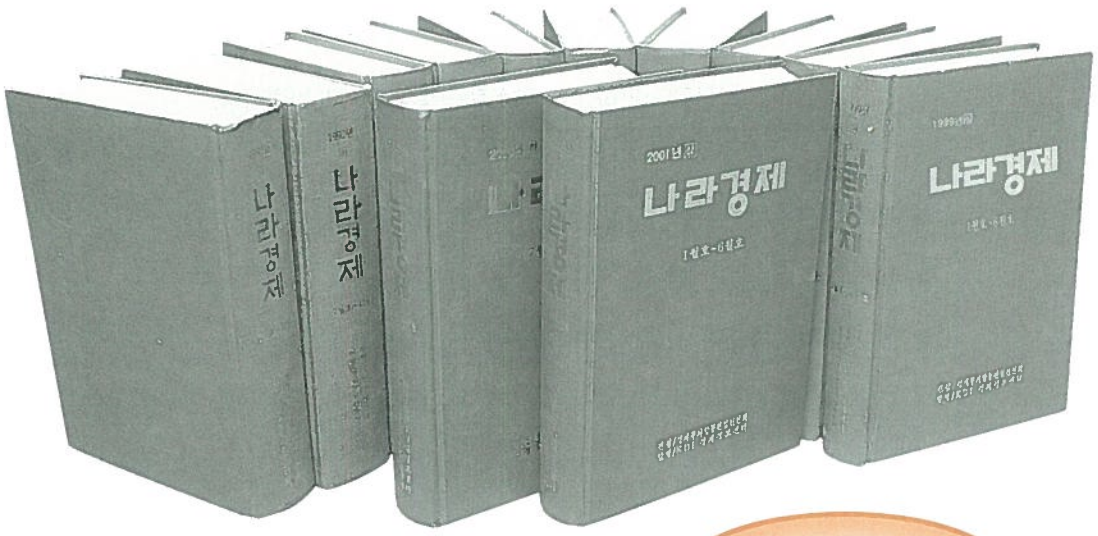
〈기관〉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우송처(부서) :
신청자 성명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 원하시는 곳에서 편안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가 절약됩니다.
- 경제정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정기구독료**
- 1년 22,000원
- 2년 40,000원

☐ **구독 문의** :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편집실
전화 : (02)958-4632, 4634, 4635
e-메일 : nara@kdi.re.kr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참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2001년도판
값 45,000원(上,下)

창간 이후 나라경제를 모두 영구보존판으로 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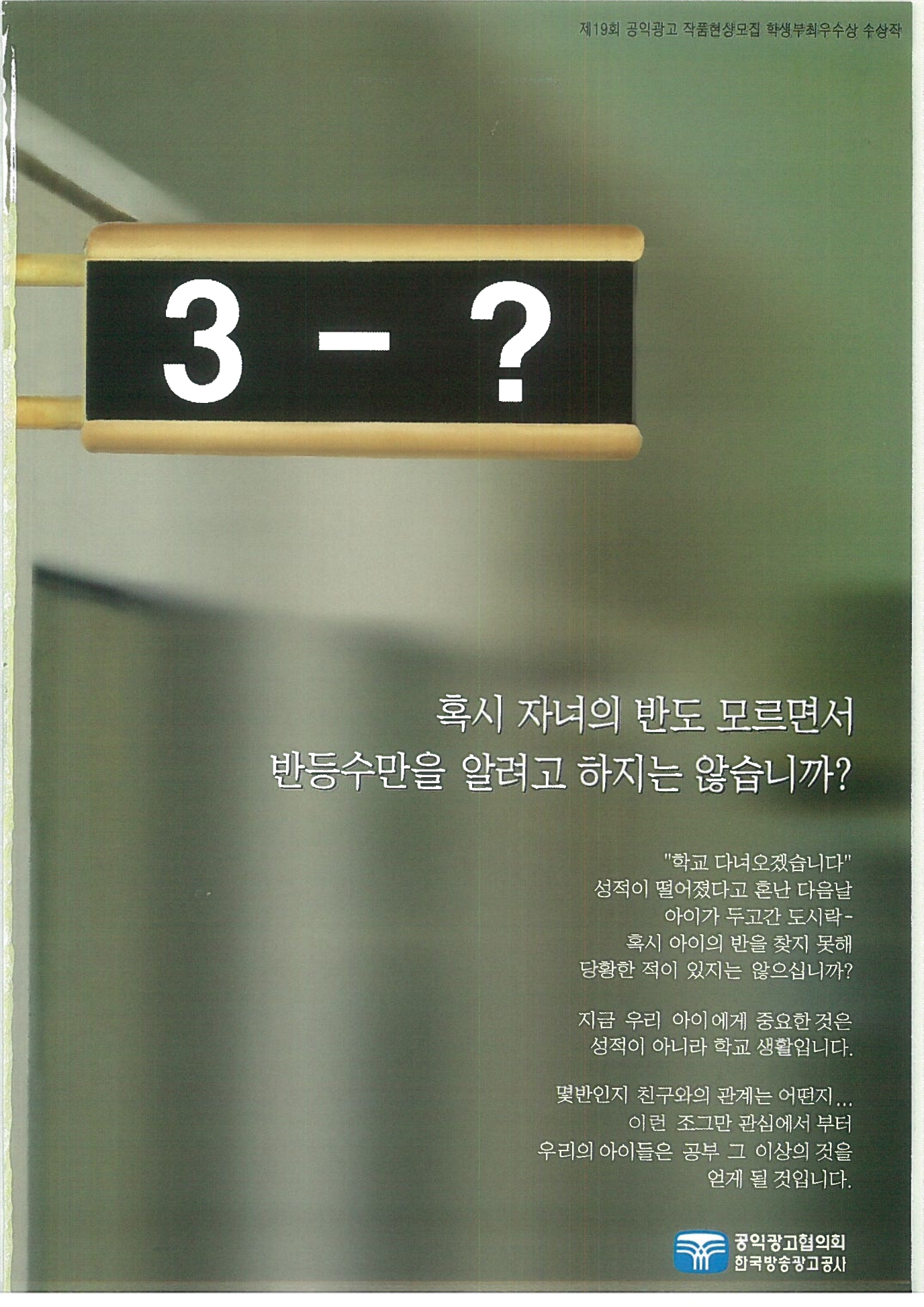
나라경제 통합본은 경제사적 자료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KDI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 (02)958-4634~5, 958-4326
팩스 : (02)3295-0748

구 입 방 법

은행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입금하시면 됩니다(지로번호 7530243).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반도 모르면서
반등수만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혼난 다음날
아이가 두고간 도시락-
혹시 아이의 반을 찾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학교 생활입니다.

몇반인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조그만 관심에서 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공부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본을 바로 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민족화합 지식강국 함께여는 한반도시대



배려와 공정으로 여는 미래

우리 아이들이 열어갈 나라

서로를 배려하는 넉넉한 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꿔야 할 이시대의 기본

배려, 공정

21세기를 여는 한국의 힘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The National Commission for Rebuilding Korea
http://www.reko.go.kr

값 2,200원